



이 석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www.kinu.or.kr



이 석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인 쇄 2007년 12월 29일

발 행 2007년 12월 29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2275-532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2285-0936)

가 격 8,500원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 이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17)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28-3 93340 : ₩8,500

311.1-KDC4

315.193-DDC21

CIP2007004082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머리말	1
II. 북한의 통계제도와 북한통계의 가용성	9
1. 북한의 통계제도	11
2. 북한통계의 범위와 발표형태 및 발표기관	24
3. 북한통계의 가용성 1: 1945년~1960년대 초반	34
4. 북한통계의 가용성 2: 196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43
5. 북한통계의 가용성 3: 1990년대 중반 이후~현재	52
III. 북한통계의 특징과 문제점	85
1. 통계적 정의	89
2. 통계의 과장 또는 왜곡	94
3.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	101
4. 통계의 의도적 조작	107
5. 북한통계의 특징과 문제점 - 19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 ..	112

IV. 주요 북한통계의 신뢰성 검증	115
1. 북한 GDP통계의 신뢰성 검증	117
2. 북한 무역통계의 신뢰성 검증	140
3. 북한 인구통계의 신뢰성 검증	161
4. 주요 북한통계의 신뢰성 검증 결과	168
V. 맺음말	171
참고문헌	1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9

표 목 차

<표 II-1> 사회주의 시절 헝가리 『통계연보』의 내용과 구성	25
<표 II-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의 구성과 주요내용	27
<표 II-3> 『조선중앙연감』 통계부록의 구성과 주요 내용	35
<표 II-4> 북한잡지에 실린 공식문건의 통계 예시	42
<표 II-5> 1961~1990년 북한발표 통계 형태의 예시	47
<표 II-6> 1946~1994년 북한발표 통계 형태의 예시	50
<표 II-7> 1946~1991년 북한발표 통계 형태의 예시	51
<표 II-8> 1989년 북한 중앙통계국의 UNFPA 제출 인구통계 ..	55
<표 II-9> 1993년 북한 인구센서스 통계의 주요 내용	58
<표 II-10A> 2001년 북한의 지역별 곡물생산 실적	60
<표 II-10B> FAO/WFP 실사팀에 제출된 공식 인구통계	62
<표 II-10C> FAO/WFP 실사팀에 제출된 식량배급 현황 통계, 1997년 11월~1998년 10월	64
<표 II-11A> UNDP에 제출된 1992~1996년 공식 GDP통계 ..	67
<표 II-11B> UNDP에 제출한 1989~1997년 지역별 곡물생산통계	68

<표 II-12> 1990년 이후 북한의 출생률, 사망률, 기대수명에 대한 통계	69
<표 II-13> 2000년 이후 UN 제출 보고서에 첨부된 통계부록의 사례	71
<표 II-14> 2000년 국제기구 등에 대한 자금요청 지원 문건 속에 첨부된 통계부록의 예시	73
<표 II-15>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상태	76
<표 II-16> 국제기구 등의 자금지원으로 수행된 통계조사 사업의 결과보고서에 공표된 북한통계의 사례 예시	78
<표 II-17A> WFP의 북한당국으로부터의 수집통계 예시	80
<표 II-17B> 국제기구의 수집통계 예시	81
<표 II-18> 국제기구의 조사과정에서 획득된 북한통계	83
<표 III-1> 1989년 북한의 UNFPA 제출 인구통계와 1961년 『인민경제발전통계집』의 인구통계 비교	94
<표 III-2> 1957년 북한 곡물생산량 통계의 수정	104
<표 III-3> 북한통계의 특징과 문제점	113
<표 IV-1> 북한(美 달러표시) GDP 통계, 1990~2004년	124
<표 IV-2> 북한의 경제성장률 통계 비교 - 공식통계 vs. 한은추정 ..	125

<표 IV-3> 2003년 주요 아시아 저개발국의 1인당 시장환율 GNI ..	129
<표 IV-4> 북한 GDP 추정관련 실물지표	135
<표 IV-5> 실물지표를 이용한 1인당 GNI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	138
<표 IV-6> 실물지표법에 의한 2004년 북한 GNI 추정결과 ..	139
<표 IV-7> 추정기관별 북한의 무역관련 데이터 비교	146
<표 IV-8> 각 추정기관별 북한무역 추정치 속에 포함된 거래 상대국가의 수	147
<표 IV-9> 2003년 각 추정기관별 북한의 10대 무역 상대국 및 무역액	150
<표 IV-10> 추정기관별 북한의 수출통계 비교, 1993~2004년 ...	153
<표 IV-11> 1993~2004년 북한의 공식 수출통계에 대비해 본 각 추정통계의 특징	154
<표 IV-12> 추정기관별 북한의 수입통계 비교, 1993~2004년	155
<표 IV-13> 1993~2004년 북한의 공식 수입통계에 대비해 본 각 추정통계의 특징	156
<표 IV-14> 2002년 현재 북한 15~65세 인구규모 추정치와 실제 공표치의 비교	167
<표 IV-15> 주요 북한통계의 신뢰성 검증 결과	169

그림목차

<그림 II-1> 북한의 통계기구	23
<그림 II-2> 북한통계 발표의 특징	34
<그림 IV-1> 북한의 對태국 수입국 추이(IMF 통계), 1997~2001년	157

I

머리말



어떤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은 아마도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수치들을 찾아보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사회의 인구가 얼마이며,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구성되며, 또한 해외와의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등과 관련된 수치들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치들만을 가지고 그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온전히 그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수치들 너머에 존재하는 제도나 관습, 의식, 성향 등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들을 찾는 작업이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인 이유는, 이들 수치가 없다면, 그 너머에 존재하는 미지의 영역을 이야기하기가 매우 힘들고 때로는 아주 공허해지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북한으로 돌리면 이처럼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이 곧바로 벽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과 관련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치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까지 북한을 연구해 온 모든 연구자들의 발목을 잡아 온 것이 바로 이러한 수치의 증발 또는 통계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연구자들은 북한에 관한 한 상대적으로 통계 없는 연구에 관대하고,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통계를 이용하는 연구자들 역시, 어렵게 북한의 관련통계를 찾아보느니, 아예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추정치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꾸려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연구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가지고 온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통계 없는 북한연구는 너무도 빈번히 공허해지기 때문에 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지식의 폭이 갈수

I
II
III
IV
V

록 얹어져만 갔던 것이다. 또한 주위에 널려 있는 외부세계의 추정치들은 서로가 너무나 달라서, 이들로부터 구성되는 이야기의 내용 역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만큼이나 많은 혼란을 가져 온 것이다.

다행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북한연구의 통계부재 현상은 조금씩 호전의 기미를 맞고 있다.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막대한 식량과 경제지원에 대한 답례의 하나로 북한당국이 그 동안 꼭꼭 숨겨놓았던 자신들의 통계를, 썩 내키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외부세계에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통계의 증가가 외부세계 연구자들에게 꼭 반가운 현상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수치가 그간 북한연구자들이 사용해 온 수치와 그를 통한 이야기들과는 너무 달라서 이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엔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과거 북한당국은 자국의 미국 달러화 표시 GDP를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다수 북한 연구자들은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북한의 달러화 표시 GDP 규모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당국이 자국의 달러화 표시 GDP 규모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곤혹스러워지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자국의 GDP 규모가 한국은행 추정치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할 만큼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자국의 1인당 GDP 규모를 463~520달러라고 밝히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그 수치가 757~1,050달러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무역에 관해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과거 북한은 자국의 무역규모에 대해 어떤 수치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북한 연구자들은 KOTRA나 IMF, UN 등의 기관에서 북한의 무역 상대국 통계를 이용해 추정한 북한무역 추정치에 길들여져 있다. 이러한 추정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북한의 (한국과의 거래를 제외한)



무역적자는 매년 8억~23억 달러에 달해 북한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당국은 무기나 마약, 밀수 같은 비합법적 거래로 내몰리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북한이 내놓은 자국의 무역거래에 대한 통계는 이러한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북한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의 거래를 제외한) 북한의 (상업적) 무역적자는 2000년 이후 연간 8,00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며, 만일 한국과의 거래를 감안한다면 무역거래가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통계와 관련된 이처럼 곤혹스러운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한 가지 소극적인 방법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수치에 대해 애써 무관심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란 모두 허구이며, 북한이 최근에 발표하는 수치 역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공의 수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굳이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편리함도 있다. 그간 우리가 쌓아놓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북한의 수치를 통해 확인하고 변경하거나 때로는 허물어 버려야만 하는 위험하고도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보다 적극적인 방법 역시 존재한다.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북한의 수치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그 정확한 의미를 묻고, 이를 통해 그간 우리가 쌓아놓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수정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바꾸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한편으로 위험하고, 다른 한편으로 매우 성가신 방법이기도 하다. 이제 조금씩 북한당국이 그들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통계들을 찾아내고 확인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번거로운

I
II
III
IV
V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은 북한 연구자들이 한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매력적인 방법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위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북한의 수치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당국이 현재와 같이 그들의 통계를 계속 제공하는 한, 이들 통계를 검토하지 않는 북한연구관 잠시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우리의 북한연구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통계들을 정면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 글은 북한이 새롭게 발표하는 수치들을 계기로 북한의 통계를 조금은 꼼꼼히 검토해 보려는 예비적 시도이다. 이 글을 예비적 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의 제한성 때문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북한의 통계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질문, 단 두 가지만을 다루려고 한다. 하나는 1945년 이후 현재까지, 특히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외부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북한통계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처럼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들은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 글에서 북한통계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앞서의 두 가지 질문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내용과 범위가 제한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의 수준으로는 아직도 북한통계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해부하기가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북한의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표되며, 이에 따라 현재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의 작업을 수행

한다. 하나는 북한 통계제도 전반의 일개를 간단히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통계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통계의 범위와 형태, 그리고 발표 주체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앞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1945~1961년, 1962~1990년, 1990년 이후 현재까지의 세 시기를 중심으로 외부세계가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통계의 기본적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예비적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통계의 특징을 통계적 정의(definition), 통계의 과장 또는 왜곡, 통계의 수정과 재편(correction and revision), 그리고 의도적 조작 등 네 가지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통계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한다. 즉 1990년대 이전의 북한통계는 공표된 통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굳이 별도의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990년 이후의 통계는 통계 자체의 명시적 결함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의 신뢰성을 판단하려면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대표적 북한통계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GDP통계와 무역통계 그리고 인구통계 각각에 대해 별도의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통계 전반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I

II

III

IV

V

II

북한의 통계제도와 북한통계의 가용성



북한의 통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통계를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발표하는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산되고 발표된 북한통계 가운데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계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북한통계와 관련된 이러한 두 가지 기초적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통계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북한통계의 수집과 생산 그리고 발표형태에 대해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194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외부세계에 공표된 북한통계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은 꼼꼼히 찾아보도록 한다.

1. 북한의 통계제도

사회주의 통계제도와 북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통계의 생산과 수집 그리고 분배를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국가가 설립한 전문 통계기구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내각의 각 省(Ministry)과 같은 행정기구이다. 실제로 과거 소비에트 경제의 경우 국가의 통계사업 전반을 조직하고 관장할 수 있는 중앙통계청(Tsentrāl'noe Statisticheskoe Upravlenie-TsSU)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내각의 각 省에도 통계부 또는 통계처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고유한 통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특정 시기에는 내각(Supreme Council of National Economy-Vesenkha) 사무국 아래 별도의 중앙통계부(Central Statistical Department)가 설치됨으로써 국가의 전문 통계기구인 중앙통계청과는 별개로 독자적



인 통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¹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전문 통계기구와 각 省의 통계기능이 병행하여 발전해 온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중앙계획자 또는 상급자가 생산자 또는 하급자에게 특정의 경제적 명령을 내리고 이에 소요되는 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생산자 또는 하급자의 명령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운영되는 체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문 통계기구뿐만 아니라 각 省의 통계기능 역시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평양의 중공업 省에서 함흥에 있는 A라는 철강공장에 선철 100톤을 생산하라는 명령을 내리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위해 평양의 중공업 省에서는 함흥 A공장의 현재 설비와 인원 그리고 자재 보유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선철 1톤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철광석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그에 소요되는 자원을 A공장에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공장이 중공업 省의 명령으로 실제 얼마의 선철을 생산했는지를 파악해야만 그 공장의 명령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감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내각의 각 省이 자체 조직을 통해 제반 통계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또한 그에 상응하는 통계를 직접적으로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省 차원의 통계기능과는 별도로 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국가적 전문 통계기구의 역할 역시 필수적이다. 앞의 선철 100톤을 생산하라는 중공업 省의 명령이 얼마나 적

¹- R. W. Davies, M. Harrison and S. G. Wheatcroft,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1913-1945*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25~29.

절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省 차원에서 수집된 모든 통계를 계획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집계 정리하여 재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공업 省이 A공장의 설비와 인원 그리고 자재 보유현황을 얼마나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역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공업省과 경공업省 그리고 농업省 등이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하 공장의 설비와 자재 인원 등을 파악하고, 자칫 이를 과도·과소하게 평가할 경우 이들로부터 얻어진 통계 자료를 종합하여 계획경제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문 통계기구가 각 省에 소속된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시에 설비와 인원, 자재보유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 소비에트의 전문 통계기구는 전체 기업과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과 자재보유, 그리고 소득과 소비 같은 경제변수에 대해 센서스적인 방법을 원용해 거의 정기적으로 직접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통계는 국가의 전반적 경제계획수립과 개별 省 차원의 통계기능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였으며, 개별 省은 이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통계의 수집과 생산에 종사함으로써 계획경제 자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북한의 통계제도 역시 전문 통계기구와 각 省의 통계기능이 서로 병행하여 발전해 온 여타 사회주의 경제의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언뜻 보면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모든 북한의 공식문건이 이른바 ‘통계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원칙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의 경우 비록 각 省의 통계기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문 통계기구에 철저히 복속되어 있어,

I
II
III
IV
V

아주 세부적인 통계기능에서조차 전문 통계기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통계기구와 그들의 활동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북한 역시 앞서 언급한 여타 사회주의의 통계제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전문 통계기구로서의 중앙통계국과 통계기능의 조정(?)

공식적으로 북한의 모든 통계사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통계국(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이라는 전문 통계기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북한의 중앙통계국은 1952년 국가계획위원회의 통계국이 자주적인 행정단위로서 승격함으로써 설립된 이후 현재에는 내각의 별도 부처로 기능하는 통계기구이다.² 중앙통계국은 그 설립 초기에서부터 통계와 관련된 국가의 모든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중앙통계국의 임무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³ 첫째는 국가행정과 경제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통계를 수집, 분석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제반 통계사업을 관장하며, 계획의

²- 실제로 1952년 발표된 북한의 내각명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앙집권제적 국가통계체계를 창설하기 위하여

- ① 국가계획위원회 통계국을 종전과 같이 국가계획위원회 내에 두되 전국 계산-통계 사업을 지도하는 자주적 기관(국가계획위원회 내의 자주적 행정단위)으로서의 중앙통계국으로 개편한다.
- ② 도,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계획부서 내의 통계부서를 기초로 하여 도, 시, 군 및 구역에 자주적인 통계기관을 조직하여 이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에 직접 종속시킨다. (내각 결정 제 37호, 중앙집권제적 국가통계체계 조직에 대하여, 1952.2.28)

³-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p. 169.



실행 부진 또는 실패에 대한 제반 원인을 조사하는 일이다. 셋째는 국가의 통계조사 및 계산 체계, 그리고 통계보고의 형식과 내용 등을 통일하고 표준화 하는 것이다. 넷째는 경제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민경제의 각종 ‘발란스(balance)’를 작성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각종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이다. 요컨대 북한의 중앙통계국은 통계와 관련된 모든 국가적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중앙통계국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 우선 중앙통계국 내부에는 13개 이상의 관련부서와 한 곳의 중앙계산소가 존재한다. 특히 2006년 현재 중앙통계국의 내부부서는 건설·운수, 공업, 노동, 농업·국토, 대외경제, 상업·생계, 자재, 종합통계, 통계자료, 행정조직 등 북한의 전 사회경제분야에 걸친 통계의 조사와 분석에 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중앙조직과는 별도로 중앙통계국은 각 도와 (특별)시에 자체 지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부들은 각 郡 또는 리의 인민위원회에 구성된 통계조직과 인원 그리고 제반 통계사업 등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북한의 최말단 행정단위로부터 평양의 내각에 이르는 수직적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 전역의 각종 통계사업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체계로만 보면 북한의 모든 통계사업은 중앙통계국이 직접 관할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통계국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중앙통계국은 북한 전역에 걸쳐 실제로 직접 통계를 수집하는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북한의 郡 단위에서 인구와 관련된 통계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은 불과 2~3명 정



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주요 기능은 직접 인구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다른 省 조직에서 수집된 인구자료를 넘겨 받아 단순히 이를 정리하여 상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 한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인구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북한의 전문 통계기구의 기능과 조직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실행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북한의 중앙통계국은 별도의 방법으로 직접 인구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다. 과거 여타 사회주의 국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전문 통계기구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1945년 독립 이후 1993년까지 단 한차례의 인구센서스도 실시한 적이 없다. 1994년 UN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센서스가 북한의 최초의 인구센서스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유일한 센서스이기도 하다. 이는 인구자료의 경우 북한의 중앙통계국은 거의 전적으로 내각의 다른 省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문제는 다른 통계의 경우에도 과연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독자적인 통계수집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는가가 의문시 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소비에트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의 전문 통계기구가 중심이 되어 거의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그리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수집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통계 수집의 필요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간 철저한 배급제적 경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득이나 소비 그리고 기업의 활동이 철저히 상부의 공급 또는 지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부의 공급 또는 지시를 직접적

⁴- N. Eberstadt and Judith Ban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Korea Research Book, 1992), pp. 6~8.

으로 수행하는 내각의 각 省의 통계 이외에 전문 통계기구가 직접 여타의 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 별도의 통계를 수집하려는 동기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주도가 되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통계조사사업이 실시된 적이 있었는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우 통계수집에 관한 한 전문 통계기구가 거의 전적으로 내각의 省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통계의 생산과 분배의 경우는 어떠한가? 만일 중앙통계국이 내각의 각 省에서 수집한 통계자료를 넘겨받아 독점적으로 국가통계를 생산·분배하거나, 또는 적어도 각 省의 통계생산과 분배를 직접 통제한다면, 비록 중앙통계국의 통계수집 기능이 미약할지라도 전반적인 국가 통계에서 차지하는 그것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⁵

우리는 국가계획의 실행정형에 대한 엄격한 계산과 통계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히 계산 및 통계 사업을 낮춰 평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소들에서는 계산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으며 제정된 통계보고를 제때에 하지 않고 있으며 똑똑하지 못한 통계자료들을 내고 있습니다. 실례로 상업성에서 낸 1953년 4.4분기보고에는 상품류총액이 5,700만원으로 축소되어 적혀있었으며 중공업성이 만든 두개의 보고를 보면 1953년 10월 1일현재 석탄재고량에 관한 통계보고에는 70만톤으로 되어있고 다른 보고에는 1만 6,000톤으로 서로 엄청나게 다르게 적혀져있습니다. 많은 성, 국들에서는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비법적인 보고제도를 만들어놓는 옳지 못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농업성에서는 1953년에 스무가지의 보고양식을 제멋대로 만들었고 중공업성에서는 열다섯가지의 보고양식을

⁵- 김일성,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칠 대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292~338.

제멋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질서한 사업방법과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경제변수에 대해 관련통계를 수집하는 省에서 내놓는 통계가 모두 다르고,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의 수집과 보고양식조차 省에서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통계의 수집과 생산에 대한 정연한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다. 내각의 각 省이 스스로 수집한 통계를 이용해 별도의 통계를 생산·분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 省의 통계 생산·분배 활동에 중앙통계국과 같은 전문 통계기관의 조정능력이 매우 미약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장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외부세계에 제출한 상당수의 통계는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라기 보다는, 관련된 해당 省에서 직접 작성하여 배포한 것일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북한의 각 省이 자체의 조직을 통해 통계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스스로의 독자적인 통계를 생산하여 국내와 국외에 배포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통계국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비록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국가의 모든 통계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하는 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여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한의 통계사업이 중앙통계국과 내각의 각 省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북한 중앙통계국의 기능 역시 북한의 국가 통계기능 전반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내각 전체 차원의, 또는 (경제)계획 일반에 필요한 관련 통계를 수집·생산·분배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

각 省의 통계기능과 행정통계의 수집 및 작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통계제도에 있어 내각의 각 省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자체의 방대한 조직을 이용해 일차적인 통계를 수집하는 통계의 수집자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집된 통계를 이용해 스스로의 통계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통계의 생산자 및 관리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통계제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전문 통계기구와 내각 각 省의 통계기능이 병행하여 발전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각 각 省의 통계기능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북한의 통계 및 통계제도에 대해 여러 재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북한의 인구통계가 수집되는 과정을 조금만 더 꼼꼼히 관찰해 보자.

북한의 경우 인구통계는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공민등록제도를 통해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북한의 각 가구는 가구 구성원 가운데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인구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10~15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⁶ 예를 들어, 새로운 가구 구성원이 출생할 경우, 각 가구주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를 입증하는 출생 증명서를 발부 받아 里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里 인민위원회는 이 증명서를 토대로 가구주로 하여금 출생 신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통상 이러한 신고서에는 출생자 및 출생자의 가구주와 관련하여 ① 이름, ② 성별, ③ 출생일, ④ 출생지, ⑤ 국적, ⑥ 교육(보통교육 및 정치교육), ⑦ 소속 기관, ⑧ 직업, ⑨ 혼인여부,

⁶- 이는 1989년 1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인구통계 수집 및 작성 절차를 현지 실시한 UN 실사팀의 보고에 기초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N. Eberstadt and Judith Ban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pp. 6~8을 참고.

⑩ 공민등록번호, ⑪ 이전 거주지, ⑫ 거주 일자(해당 리로 이전한 날짜) 등을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리 인민위원회는 이러한 신고서의 접수가 완료되면, 이를 증명할 수 있게끔 리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접수 확인서를 발부해 준다. 각 가구주는 이러한 확인서를 발부 받아 이를 해당 분주소(경찰서)에 제출하여 날인을 받고, 이렇게 경찰서의 날인을 받은 확인서를 최종적으로 소속 직장이나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새롭게 출생한 가구원의 이름을 직장이나 기관의 식량배급 대장에 올리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기관들은 새로운 출생 사실을 자체 조직을 통해 상부에 보고하는데, 이 경우 郡 인민위원회의 통계부서에 대한 보고는 리의 경찰조직 즉 분주소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리의 경찰조직이 매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출생과 사망 그리고 전입·전출 등 인구가동 상황을 정리하여 연말에 일괄하여 郡의 통계부서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통계의 수집절차는 북한의 통계와 통계조직, 특히 각 省의 통계조직에 대해 여러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우선 북한에서 수집되고 생산되는 대부분의 통계는 ‘행정통계’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통계는 통계 전문기관이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수집하고 생산한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기관이 행정적 목적을 위해 수집하고 생산한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만일 전문 통계기관이 이를 분석하여 발표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이 생산한 행정통계를 통계적 차원에서 재가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에서 특정의 통계를 수집하는 행정기관은 단일하지 않고, 매우 다층적이며 복합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북한의 행정조직 여러 곳(내각의 여러 省)이 동일한 통계를 동시에 모두 수집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의 인구통계의 경우, 출생이라는 동일한 인구통계를 적어도 3~

4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수집하고 있다. 출생 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보건성)과 이의 신고를 받는 보안기관(인민보안성) 그리고 출생자의 식량배급을 관장하는 배급기관(수매양정성) 그리고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통계기관(중앙통계국) 등이 그것이다.

셋째, 앞의 김일성의 언급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의 행정기관은 자체 수집한 통계를 통계 전문기관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가공하여 자체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통계의 경우 비록 동일한 통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생산하여 발표했는가에 따라 그 수치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인구통계의 경우 그것이 북한 보건성의 통계인가, 인민보안성의 통계인가, 수매양정성의 통계인가, 아니면 중앙통계국의 통계인가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일반 북한주민들이 식량배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구구성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주로 식량배급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인민보안성이나 수매양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나타났다면, 이들 기관에서 생산한 사망통계는 보건성이 일선 의료기관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사망통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글의 제3장에서 보듯이 실제로 1990년대 북한의 사망률 통계는 그 발표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서 김일성의 언급에서 나타났던 각 기관별 통계의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넷째, 북한의 전문 통계기구인 중앙통계국이 내각의 각 省의 기능을 완전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앞의 인구통계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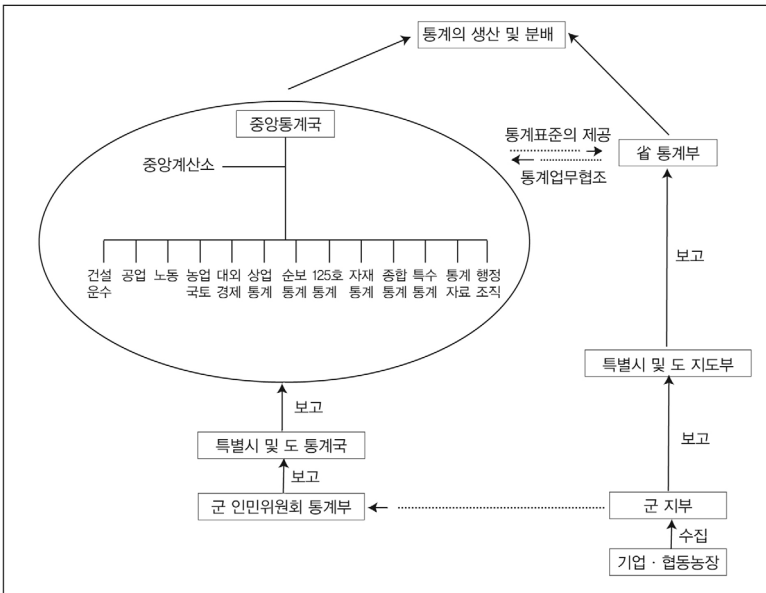
수집절차에서 보듯이, 북한의 통계는 동일한 통계를 각 省이 중복하여 수집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런데 중앙통계국이 이렇게 수집된 통계를 전달받는 것은 수집에 참여한 모든 기관으로부터가 아니라 특정의 기관으로부터이다. 문제는 이미 지적했듯이 이들 통계수집에 참여한 모든 행정기관이 단순한 통계의 수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재가공하여 관련통계를 직접 생산하고 분배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통계는 그 수집절차의 특성상 기관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만일 중앙통계국이 북한의 전체 통계기능을 획일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관별 통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의 김일성의 언급에서 나타나는 것이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이 발표한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여전히 북한통계는 그 발표기관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역설적으로 북한의 전문 통계기구인 중앙통계국이 북한 통계제도의 또 다른 한 축인 각 행정기구의 통계기능을 정확히 제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 통계제도의 특징

<그림 II-1>은 이제까지 살펴본 북한 통계제도의 특성을 간단히 도식화 하고 있다.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전문 통계기구와 일반 행정기구라는 두 가지 통계기구를 병행하여 유지하고 있다. 전자는 북한의 중앙통계국을 말하는 것이며, 후자는 내각의 각 省의 통계기능을 의미한다. 북한 중앙통계국은 내각의 각 省을 통해 얻어진 각종 통계자료를 전체 경제 또는 계획의 차원에서 집계, 정리, 분석하여 제공하고 공표함으로써 북한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앙통계국은 내각의 각 省을 비롯한 국가 전체의

통계수집 및 보고 형태를 통일하고 표준화 하는 역할 역시 수행한다. 그러나 중앙통계국은 경제주체들로부터 직접 통계를 수집할만한 조직적 능력과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이에 따라 통계의 수집 자체는 내각의 각 省이라는 행정기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각의 각 省의 통계기능은 크게 보아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① 이들은 자체 행정조직을 통해 경제주체들로부터 직접 통계를 수집하며, ② 이렇게 수집된 통계를 전문 통계기구인 중앙통계국에 보고하는 한편, ③ 이를 토대로 스스로의 통계를 생산·분배하는 기능 역시 수행한다.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각각의 개별적 省이 해당분야와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중앙통계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II-1> 북한의 통계기구



I
II
III
IV
V

이러한 통계기구를 통해 수집되고 생산되며 분배되는 북한통계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특성을 갖고 있다. 북한통계의 대다수가 그 수집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일종의 행정통계라는 사실이나, 이러한 행정통계를 수집하는 주체가 복수의 중첩된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북한통계는 그 수집 및 생산주체에 따라 서로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이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통계의 범위와 발표형태 및 발표기관

우리는 앞에서 북한 통계제도의 특징을 통계기구와 통계의 수집절차라는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기구와 수집절차를 통해 생산되는 북한의 통계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미리 고백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 실제로 수집되고 생산되는 통계와 밖으로 공표되는 통계 사이에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 외부로 공표되는 공식통계만을 접하는 외부관찰자로서는 그 경제 내부에서 어떤 통계가, 어떤 방법으로 생산되고 이용되는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 소비에트 경제의 붕괴로 각종 비밀자료가 해제되면서 밝혀진 사실 한 가지는, 과거 소비에트 경제를 담당했던 중앙계획자들이 실로 방대하고도 구체적이며, 세밀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수집·생산·이용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그간 소비에트 경제가 외부에 발표한 공식통계들로서는 유추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었다. 북한의 경우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가운데에서도 외부세계에 자체 통계를 공개하기를 가장 꺼려하는

국가의 하나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북한통계의 형태와 범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약요건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표 II-1> 사회주의 시절 헝가리 『통계연보』의 내용과 구성
- 1985년의 경우

분 류	주요 내용	포함통계 도표의 수
장기적 시계열	인구, 경제활동인구, 국민소득, 건설, 투자, 자본 형성 등	20
사회/경제 구조	산업별 생산액, 고용, 자본 형성, 투자 구조 등	43
인구	주요 인구관련 통계 일체	47
노동	제반 경제활동인구, 고용, 직업, 기능, 교육 등	14
국민소득	국민소득의 창출과 분배에 관한 주요 통계 일체	15
자본 구성	고정자본의 가치, 고정자산의 균형, 산업별 자본형성 등	4
투자	총투자, 산업별 투자, 기능별 투자, 형태별 투자 등	23
산업	산업의 주요자료, 산업활동의 가치, 생산/유통액 등	41
건설	주요 건설활동 내역, 생산액, 형태별/기능별 건설투자 등	24
농업	주요 농업활동, 토지/가축/곡물/에너지 사용/수력자원 등	36
용수관리	국가경제의 용수관리, 공익사업 서비스-수도 등	8
교통	대중교통, 기능별/형태별 (물자 및 인원)수송 등	37
체신과 통신	주요 체신/통신활동, 우편수송의 수행, 우체국 등	7
에너지	주요 에너지 생산/분배/소비 구조 등	10
소비	산업별 소비와 최종 소비 형태	1
유통	기능별/형태별/제도별 판매활동, 소매/도매활동 등	23
관광	국내외의 관광 등	15
대외 무역	국가별/통화별/상품별 대외무역, 국제수지 등	15
(일반)소득/소비	가구의 소득별/형태별/기능별 소득과 소비의 형태 등	21

I
II
III
IV
V

분 류	주요 내용	포함통계 도표의 수
사회복지	복지대상 인구, 연기금 및 공제금, 어린이 여성복지 등	12
공중보건	의사/병상/의료시설의 수와 형태, 질병의 형태 등	26
(공공)주택	주택의 형태와 구조, 부동산관리, 공공주택 인구 등	6
환경	대기/토질/수질 오염, 도시녹지대 보호, 하수도 정비 등	4
교육	형태별/기능별 학교, 예산, 제도, 배출/등록 학생 등	23
연구개발	산업별/형태별/기능별 R & D 등	7
컴퓨터 기술	컴퓨터 기술관련 활동, 투자 등	10
문화·스포츠	도서출판, 영화, 공연, 전시, TV, 각종 스포츠 활동 등	31
법률	범죄의 형태, 재판, 시민권리, 알코올 사건 등	15
재해·화재	노동재해, 화재와 관련된 피해, 화재피해의 원인 등	15

출처: Kozponti Statisztikai Hivatal, *Statisztikai Evkonyv* 1985, Budapest, 1986.

북한통계의 범위

<표 II-1>은 과거 사회주의 경제 가운데 가장 개방적이었다고 평가 되는 헝가리의 통계당국이 매년 출간한 『통계연보』(*Statistical Yearbook-Statistikai Evkonyv*)의 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헝가리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한 국가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가장 (시장)개혁적인 경제 시스템을 유지한 국가의 하나라는 점에서 통계당국이 실제로 수집하고 생산한 통계정보 역시 가장 개방적으로 외부에 공개해 온 특징을 갖고 있다. <표 II-1>에 나타나 있듯이 헝가리 통계당국이 생산·발표해 온 통계 정보는 매우 방대하다. 실제로 헝가리 통계연보에는 총 29가지의 통계 범주에 따른 관련 통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통계범주는 인구와 노동에서부터 출발하여 투자, 자본 구성, 산업 등 경제분야는 물론, 환경

과 교통, 체신과 통신, 에너지, 대외무역, 관광, 사회복지, 공중보건, (공공)주택, 교육, 문화·스포츠, 법률, 재해·화재에 이르기까지 한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더욱이 각각의 통계범주 아래 수록되어 있는 통계자료는 GNI의 산업별 구성에서부터 형사범죄재판의 형태별 내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어 있다. 과거 사회주의 시절 발표된 헝가리의 통계연보가 발전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 어떤 나라의 통계연보보다 그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 사회주의 시절 헝가리의 통계당국이 수집하고 생산하는 통계의 범위와 형태는 시장경제의 그것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다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표 II-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의 구성과 주요내용

분 류	주요 내용	포함통계도표의 수
종합편	자연조건, 행정구역, 인구의 도시농촌별 구성, 사회 총생산액의 장성, 국가 예산 수입의 장성, 물가지수 등등	22
공업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기업소 수, 공업 총생산액의 장성, 공업 부문별 총생산액의 장성, 국 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의 중요 제품 생산량 등등	13
농촌 경리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토지개혁, 경지 면적, 파종 면적, 도별 사과 생산량, 조립 등등	44
운수 및 체신	운수 수단의 장성, 운수 형태별 려객 순환의 장성, 체신 업무량 등등	9
기본 건설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 인민 경제 부문별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 주택 건설, 조립식 건설의 비중 등등	10
로동	종업원 수, 인민 경제 부문별 종업원 수, 기술자 및 전문가 수 등등	8

I
II
III
IV
V

분 류	주요 내용	포함통계 도표의 수
상품 류통	국영 및 협동단체의 상업망 수, 소매상품 류통액, 소매 가격 지수,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상품 류통비 수 준 등등	15
대의 무역	무역 총액의 장성, 수출품의 류별 구성, 수입품의 류별 구성	3
교육, 문화·보건	각급 학교 수, 도별 대학 수, 도별 영화관 수, 출판물 발행 총수 및 발행 부수, 보건 시설 및 의사 수 등등	32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중앙통계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반면 <표 II-2>는 1961년 북한의 통계당국이 편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의 체계와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 통계집은 북한의 통계당국이 이제까지 편찬한 유일한 공식적 통계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앞의 <표 II-1>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발표한 통계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범위와 내용, 구체성 등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의 통계집은 인구와 경제총량, 노동, 농업 등 경제분야와 문화·보건, 교육 등 일부 통계범주에 국한되어 있고, 각 범주 아래 수록된 통계의 내용 역시 매우 단순하고 단편적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발표된 통계의 경우만 놓고 보면, 북한에서 수집되고 생산되는 통계의 범위와 형태가 시장경제는 물론 과거 헝가리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해 약간은 다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사회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북한이 그간 사회주의 경제로는 매우 드물게 철저한 배급제 경제를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전시에

준할 정도로 철저한 통제적 사회질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배급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구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통계를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예를 들어, 여타의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중앙계획자가 일반 국민들이 소비할 식량의 공급량과 가격 그리고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그들의 소득수준을 계획하는 것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북한과 같은 배급제 경제에서는 이로서는 불충분하고 개별 국민들에 대한 직업별, 성별, 연령별 식량 배급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맞는 공급량을 차별화하여 각자에게 공급하여야만 경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급제를 유지하려는 중앙계획자일수록 식량과 관련된 더욱 상세한 통계정보를 요구할 것이며, 이는 곧 행정기구에 의한 보다 많은 통계의 수집과 분석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북한과 같이 정치적·군사적·문화적으로 이른바 상시적 총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체제의 경우에는 경제 이외의 인구, 사회, 문화 등 여타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 통계 수요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도 분명하다. 북한이 비록 외부적으로 공표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생산하여 활용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범위와 형태가 여타 사회주의 경제의 그것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외부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통계의 범위와 내용이다.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1990년대 이후 북한당국은 스스로가 작성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외부세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일부는 과거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통계적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앞서 언급한 자체의 통계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수집·생

I
II
III
IV
V

산하여 활용해 왔다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비록 외부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의 경우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과거 여타 사회주의 경제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통계적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왔다고 가정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만일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북한이 수집하는 통계의 범위와 형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수도 있다. <표 II-1>에서 보듯이 과거 헝가리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통계적 정보를 생산하고 공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북한의 통계기구가 나름대로 전 사회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고 상세한 통계자료를 수집·생산해 왔다고 해도, 이들 통계의 질이나 그들을 수집·생산하는 통계적 기법들은 시장경제나 여타 사회주의의 그것에 비해 크게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대부분의 통계는 전문 통계기구가 아닌 행정기관에서 수집되고 만들어진 행정통계이기 때문이다. 행정통계는 그 속성상 통계적 엄밀성과 정확성을 상대적으로 보장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행정통계 위주로 통계제도가 구축될 경우 전문 통계기관이 보다 엄밀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발전된 통계기법을 원용하고 개발하려는 유인 역시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한의 통계가 사회주의 배급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광범위하고 상세한 분야까지 그 해당범위를 넓힐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엄밀성과 정확성이라는 통계적 질은 여전히 의문시 된다는 뜻이다.

북한 통계발표의 특징과 형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실제의 통계와 (외부로) 공표되는 통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가 모든 통계를 일종의 ‘비밀’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통계가 비밀이라고 해서 이를 외부에 전혀 공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성공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고, 효율적인 대외거래를 위해서는 일정한 관련 통계를 공표하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의 비밀성과 대외적인 통계 발표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회주의 통계의 발표방식에는 여러 흥미로운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북한의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는 통계발표의 부정기성이다. 외부에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통계의 발표에 적극적이지만, 이러한 필요성이 없거나 관련 통계의 발표가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통계를 발표에서 누락하거나 아예 통계자체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뒤에 언급하겠지만, 북한은 1960년대 초반까지 거의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당시 북한이 한국 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공업화의 단계에 진입하는 등 스스로의 경제적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를 기점으로 북한당국의 통계발표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북한의 경제발전이 정체상태에 빠지고 상대적으로 한국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굳이 비밀로 분류되는 북한의 내부통계를 외부에 공표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통계발표 중단이 또다시 역전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이다.

I

II

III

IV

V

1995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식량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원조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체 통계를 외부 세계에 제공할 필요성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발표되는 통계 형태의 다양성이다. 이제까지 북한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통계를 외부세계에 발표하였다. 하나는 물리적 수량(physical quantity)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지수 통계(index number)이고, 나머지 하나는 증가율 통계이다. 예를 들어, '1945년 북한의 곡물 생산은 100만 MT이고, 1950년 북한의 곡물생산은 223만 MT'라고 나타내는 것을 물리적 수량 통계라고 한다면, '1950년 북한의 곡물생산은 1945년 생산량을 100으로 할 때 223'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지수 통계이고, '1950년 북한의 곡물생산은 1945년에 비해 2.23배 증가'했다고 나타내는 것이 증가율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이러한 통계의 형태들을 통계의 실제적 내용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 곡물생산은 1945년 생산량을 100으로 할 때 223'이라고 발표하면서, 1945년의 실제 곡물생산량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1990년의 곡물 생산량 자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한편으로 북한은 자체의 곡물생산이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외부세계에 과시하는 효과를 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해당연도의 정확한 곡물생산량이라는 통계적 비밀을 보호하는 이중적 성과를 획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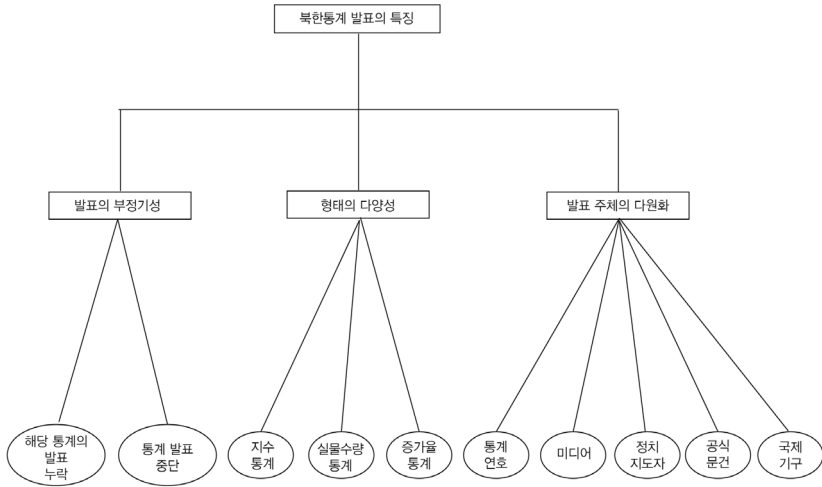
셋째는 내부 통계를 발표하는 북한의 주체 또는 출처의 변화이다. 이제까지 북한의 통계는 크게 5~6가지 경로를 통해 외부세계에 공표되었다. ① 앞서 언급한 통계연보 또는 공식적 통계집의 형태, ② 북한내부에서 발표되는 정부의 공식문건 또는 각종 저술, ③ 평양방송이나 노동신문 등을 통한 보도, ④ 김일성과 같은 정치지도자들의 언급, ⑤ 국

제기구를 비롯한 해외기관에 대한 북한의 제출자료, ⑥ 해외기관과의 공동사업을 통한 결과보고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통계당국이 내부 통계의 발표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통계발표의 주체 또는 출처를 변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뒤에 언급하겠지만,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외부세계에 통계를 발표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있었던 시기에는 북한의 통계가 주로 통계연보나 통계집, 또는 공식문건과 같은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외부세계에서 북한의 통계를 비교적 손쉽게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통계발표가 사라진 1960년대 이후에는 통계에 관한 북한의 언급 역시 평양방송이나 노동신문의 단편적 기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김일성과 같은 지도자의 정치연설에서만 주로 발견된다. 외부세계로 하여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통계적인 언급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통계 발표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기구를 비롯한 해외기관에 대한 제출자료나 이들과의 공동사업을 통한 결과보고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통계발표 자체가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발표한 통계자료는 언뜻 보면 그 전모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들 통계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표되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의 절에서는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발표한 자료를 그 시기와 형태 그리고 내용별로 일관되게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I
II
III
IV
V

<그림 II-2> 북한통계 발표의 특징



3. 북한통계의 가용성 1: 1945년~1960년대 초반

1945년에서 1960년대 초반은 북한통계의 가용성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통계당국이 여느 사회주의 경제에 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공식통계를 정기적으로 대내외에 공표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발표된 북한의 통계는 시장경제는 물론 여타 사회주의 경제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 형태나 내용 면에서 매우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식통계가 정기적으로 발표되었던 것은 이 시기가 유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까지 북한통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연구는 이 기간에 발표되었던 북한의 공식통계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표 II-3> 『조선중앙연감』 통계부록의 구성과 주요 내용
- 1959년의 경우

분 류	내 용
총괄	1. 주민의 사회 그루빠별 구성 2. 인민경제발전의 기본지표 3. 사회주의 경제의 비중 4. 종업원 수의 비중 5.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6. 로동자 사무원의 화폐 임금 장성 7. 물가 지수
공업	8. 공업 총 생산액의 경제 형태별 구성 9. 공업 총 생산액의 장성 10.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에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의 비중 11. 공업 부문별 총생산액 장성 12. 도별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의 장성 13. 1958년 도별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14.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의 주요 제품 생산량의 장성 15.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의 주요 제품 인구 1인당 생산량 16. 공업 부문에서의 발명 및 합리화 17. 대비 상품 생산물의 원가 저하
농촌경리	18. 경지 면적 19. 경지 면적의 지목별 구성 20. 경리 형태별 경지 면적 21. 도별 경지 면적 22. 농촌 경리의 협동화 23. 농업 협동 조합의 규모 24. 국가 농목장 및 농기계 임경소 25. 파종 면적 26. 파종 면적의 작물별 구성 27. 농작물 총 수확량 28. 과수 면적 및 과실 생산량 29. 상전 면적 및 고치 생산량 30. 가축 두수

I
II
III
IV
V

분 류	내 용
기본 건설	31. 인민 경제에서의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 32. 인민 경제 부문별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 33. 주택 건설
운수 및 체신	34. 각종 운수 형태의 화물 수송량의 장성 35. 각종 운수 형태의 화물 순환의 장성 36. 각종 운수 형태의 려객 순환의 장성 37. 체신
상업	38.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액 39. 소매 상품 류통액의 장성 40. 소매 상품 류통액의 소유 형태별 구성 41. 국영 및 협동 단체 상품 류통액중 식료품 및 비식료품의 구성 42.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주요 품종별 류통액의 장성 43. 국정 소매 물가 지수 44. 주요 상품 국정 소매 가격 지수 45.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상업망 수 46. 국가 및 자체 수매량의 장성
문화	47. 각급 교육망의 학생 수 48. 보통 교육 부문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49. 대학, 중등 전문 학교 수 및 학생 수 50. 문화 시설 51. 출판물 발행 52. 의사 및 보건 시설 53. 휴양소 및 료양소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9), pp. 322~338.

이 기간 동안 발표되었던 북한통계의 출처로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조선중앙통신사가 매년 발행했던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통계부록이었다. 물론 조선중앙통신사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계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통계부록은 북한의 통계당국이 공식통계를 대내외에 발표하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다는 점

에서 여타 사회주의 통계당국이 매년 발행했던 공식적 『통계연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61년 북한당국이 발간한 유일한 공식 통계보고서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통계집』의 내용과 구성은 이전에 발간되었던 각 년도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통계부록의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축약하여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⁷

통계적 관점에서 볼 때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이 특별한 주목을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여기에 수록된 통계의 범위와 내용이 그 어떤 북한의 통계출처에서 보다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표 II-3>에서 보듯이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은 북한의 공식통계를 일곱 가지의 세부 범주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사회(경제)지표와 공업, 농촌경리, 기본 건설, 운수 및 체신, 상업, 문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공식통계를 여러 세부 범주로 일일이 나누어 수록한 통계간행물은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이 거의 유일하다. 또한 각각의 세부범주 아래 실제로 수록된 통계의 내용 역시 가장 구체적이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농촌경리라는 세부 범주 안에는 총 13개의 통계도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북한의 경지면적과 파종면적, 농작물 생산과 가축보유 부수 등에 대한 통계를 지역별, 형태별, 지목별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상세한 북한통계들을 모두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발간된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이 유일한 것이다.

둘째,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은 북한의 통계발표 관행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 우선 여기에 수록된 통계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7- 이에 대해서는 이 장의 <표 II-2>와 <표 II-3>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있다. 하나는 지수 통계로써 기준연도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해당연도의 수치를 이에 대한 상대적 비율로서 나타낸 통계이다. 북한의 국민소득이나 공업 및 농업 생산액, 상품 유통액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중요 사회경제지표는 모두 이러한 지수 통계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물리적 수량 통계로 북한의 경지면적이나 주요 농업 생산량, 기본 건설 투자액과 같이 상대적으로 북한당국이 그 규모를 과시하고 싶거나 외부에 정확한 수치가 공표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통계항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톤’이나 ‘정보’, ‘백만 원’과 같은 수량단위를 기준으로 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하나는 증가율 통계로 생산물의 원가 저하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정의를 언급함이 없이 단지 이전 연도에 비해 얼마나 변화했는지만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북한통계의 세 가지 형태는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여 북한이 발표하는 제반 통계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이 북한의 통계발표 관행을 잘 드러내주는 또 다른 측면은 여기에 수록된 통계의 항목이 매년 동일하지 않고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특정 연도에 북한이 발표하기를 꺼리는 통계항목의 경우 그 내용이 수록되지 않고 다른 통계항목이나 통계도표로 대체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통계발표의 불연속성 역시 이후에도 이어져 196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북한의 모든 통계발표는 1990년대 중반까지 거의 중단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도 북한의 통계당국이 동일한 통계항목을 동일한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일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은 시계열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자료는 시계열 통계자료로 존재할 때 그 중요성이 더

욱 크다. 시간에 따른 변화의 방향과 추세를 이해하는 것이 통계를 분석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북한통계는 시계열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시계열 형태의 통계라고 하더라도 그 시계열의 범위가 너무 짧아서 일정한 변화의 방향과 추세를 읽어내기가 부족한 것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45년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통계자료를 시계열로 제공하는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넷째,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은 북한당국이 수정하고 확정된 최종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1946년 이후 1950년대까지 북한당국은 다양한 통계적 혼란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여러 통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출되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통계적 혼란은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글의 제3장에서 논의하겠지만, 1950년대 북한의 곡물 생산량 통계를 확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정부 안에서는 심각한 정치적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은 북한의 통계당국이 이러한 상이한 통계적 혼란을 모두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통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공식통계라고 말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들이다.

『조선중앙년감』 이외에도 이 기간 중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통계가 발표되었다. 1961년 북한당국이 공식적인 통계집인 『인민경제발전 통계집』을 발간한 것이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선중앙년감』과 거의 유사한 통계를 제공하는 이러한 공식 통계집 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이 기간 중 북한의 각종 (학술)잡지나 정부 및 당의 기관지 등에 공표되었던 북한의 공식문건과 기록들, 그리고 주요 정치 지도

I
II
III
IV
V

자 및 관료들의 연설이나 기고문 속에 나타난 통계들이었다. 실제로 이 기간 중 북한정부는 북한의 경제계획(서) 및 그 성과와 관련된 각종 공식문건을 정부나 당의 기관지 또는 학술잡지에 기고의 형태로 게재하였으며, 북한경제 및 사회현상과 관련된 공산당 대회 및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록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간하였고, 이러한 문건들 속에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⁸ 실제로 <표 II-4>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제계획 문건에는 북한경제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1990년대 초반 한국의 통일부가 수집하여 종합 발간한 『북한의 공산당 대회 자료집』 및 『최고인민회의 자료집』에도 다양한 북한의 공식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이 시기 북한의 정치지도자 및 관료, 학자들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통계를 직접 발표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이들의 대중적 연설 속에 다양한 북한통계가 원용되고 있으며, 이들이 북한의 학술지나 기관지 등에 기고한 여러 논문들 속에도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⁹ 특히 이 가운데 초기 북한의 경제학 잡지들에 실린 논문들은 당시 북한의 통계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북한의 통계를 앞서의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통계와 비교해 보면,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

⁸- 이 시기 북한의 각종 공식문건이나 당의 기관지 그리고 학술잡지 등은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가 2002년 출판한 『북한관계자료집』에 주로 수록되어 있으며, 1980년대 한국의 통일부가 편찬한 『조선노동당 대회 자료집』과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역시 당시의 주요 문건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⁹-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북한의 김일성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이나 논설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초기 연설 등은 이후 조선노동당이 장기간에 걸쳐 편찬한 『김일성 저작집』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기도 하다. 우선 이들 통계 가운데에는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와는 그 수치가 다른 것이 상당수 존재한다. 물론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일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통계를 북한의 공식통계라고 가정한다면,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즉 이들 통계가 북한의 통계당국이 최종적인 수정을 거쳐 확정하기 이전의 잠정적인 수치로서 그대로 발표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미 살펴본 사회주의 통계의 특성상 당시 북한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서로 다른 통계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통계의 수집 및 생산 과정 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통계의 오차가 매우 큰 상태에 있어, 북한의 통계당국이 기존에 수집·생산된 여러 통계들을 이후 재분석하여 수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들 통계는 이러한 최종적 수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 통계를 북한의 공식통계로 간주해 선불리 사용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동일한 이유에서 이러한 통계들은 당시 북한의 공식통계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북한의 통계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학술지나 정치 지도자 등의 연설 속에서 발견되는 통계의 또 다른 측면은 이들이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통계에 비해 매우 단편적이며, 그 시계열이 짧거나 아예 없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확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통계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통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통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전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

요컨대, 1946~1961년의 기간 중에 발표된 북한의 통계는 『조선중앙

I
II
III
IV
V

년감』에 수록된 통계를 중심으로 여타 북한정부의 공식문건이나 정치 지도자의 연설, 그리고 각종 학술잡지나 기관지의 논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계들은 비록 시장경제나 여타 사회주의 경제와 비교해 볼 때에는 매우 빈약한 것들이지만 당시 북한의 사회경제현상에 대한 개략적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II-4〉 북한잡지에 실린 공식문건의 통계 예시
- 1949~1950년 각 지방산업 생산목표액

(단위: 천 원)

1949년				
도별	국영	생산합작사	개인기업	계
평양특별시	1,074,166	74,603	671,989	1,820,758
평안남도	70,910	85,705	310,883	467,498
평안북도	305,500	182,637	455,254	943,391
황해도	147,841	121,427	487,058	766,327
강원도	291,080	75,318	88,889	455,287
함경남도	257,559	72,027	187,221	517,807
함경북도	186,721	88,161	207,708	492,590

1950년				
도별	국영	생산합작사	개인기업	계
평양특별시	,162,8860	99,148	696,169	2,424,177
평안남도	103,732	144,173	354,046	602,051
평안북도	443,483	259,176	460,261	1,162,920
황해도	203,340	142,937	501,292	847,569
강원도	431,689	108,301	94,393	634,383
함경남도	386,291	139,771	187,221	713,283
함경북도	397,174	131,206	213,293	741,673

출처: 정준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반부의 인민경제부흥발전을 위한 1949년 계획실행총결과 1949년~1950년 3개년 계획,” 『인민』 1949년 3월호.

4. 북한통계의 가용성 2: 196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1960년대 초반까지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이어지던 북한당국의 통계 발표는 196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완전 중단되게 된다. 이러한 통계발표의 중단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6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에 이르는 기간은 북한통계에서 일종의 암흑기가 되어 버린다. 실제로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은 1960년을 기점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1963년 이후에는 북한의 공식문건 어디에도 통계자료라고 볼 수 있는 수치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더욱이 1970~1980년대에 들어서면 북한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북한 내부의 학술논문들조차 국제기구와 같은 해외의 기관이 추정하는 북한관련 추정치들을 (재)원용하여 논의를 전개할 정도로 북한 국내외에서 북한의 공식통계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통계(statistics)와 ‘유사한’ 일종의 수치(number) 들이나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치와 언급은 김일성과 같은 북한 지도자들의 연설이나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몇몇 기사들, 그리고 북한의 학술논문을 비롯한 공식·비공식 문건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나 언급들을 통계라고 부르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수치와 언급들을 통계라고 부르지 않고 ‘통계와 유사한 일종의 수치’라고 부르는지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 한 가지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모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도 이겨내고 알곡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일 수 있게 되었다. 1963년에 비하여 1974년에 이르는 10년동안 알곡생산은 약 2배로 장성하였다. 특히 1973년부터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여 전해보다 136%로, 그 다음해에는 또다시 131% 늘어나 700만톤이 넘는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써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하였다. 그후에도 련이어 대풍을 이룩하여 1976년에는 800만톤, 1979년에는 900만톤, 1984년에는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고 오늘은 1500만톤의 높은 고지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 해방전 1944년에 알곡수확고가 216만 7000여톤밖에 안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1984년의 1000만톤의 알곡생산은 1944년의 4.6배가 넘는 빠른 장성이었다.¹⁰

위의 인용문을 언뜻 보면, 그것은 1963~1984년간 북한의 곡물생산에 관한 공식 통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76년 800만 톤, 1979년 900만 톤, 1984년 1,00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1974년에는 700만 톤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전해 생산량의 131%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1973년의 생산량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논법으로 1972년과 1963년의 생산량 역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선 1976년과 1979년 그리고 1984년의 생산량에 대해 살펴보자. 위의 인용문은 1976년에 800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고 쓴 것이 아니라, 800만 톤 생산고지를 점령했다고 쓰고 있다. 따라서 1976년 북한이 실제로 곡물 800만 톤을 생산한 것도 800만 톤 생산고지를 점령한 것이지만, 이 해 북한이 810만 톤이나 820만 톤, 또는 880만 톤을 생산했어도 800만 톤 생산고지를 점령한 것이 된다. 거꾸로 만일 이 해 북한이 799만 톤을 생산했다면 어떻게 될까?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800만 톤 생산고지를 점령하지 못한 것이지만, 위의 인용문의 뉘앙스라면 800만 톤 생산고지를 점령했다고 말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위의 인용문은 북한의 1976년과 1979년 그리고 1984년의 곡물 생산에 관해 일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수치를 통계라고 부르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¹⁰ - 김승준, 『우리나라 농촌문제 해결의 역사적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pp. 508~509.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인용문의 말미에 1984년의 곡물생산이 1,000만 톤이라고 특정(specify)하고 있지만, 이 수치와 비교하는 1944년의 수치는 216만 7,000여 톤이라고 이 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는 1984년의 생산량이 실제로 정확히 800만 톤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1,000만 톤의 생산고지를 ‘점령’했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전히 이 해의 생산량이 정확히 1,000만 톤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1974년의 수치는 어떠한가? 위의 인용문은 이 해 북한의 생산량이 700만 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700만 톤 이상이라고 말한다. 앞서의 경우처럼 710만 톤도, 720만 톤도, 또한 750만 톤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1974년의 생산량은 위의 인용문에도 불구하고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비록 이 해의 생산량이 전해에 비해 정확히 131%가 늘어났다고 쓰고 있지만, 이를 이용해도 여전히 1973년의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위의 인용문은 그 이전 연도들에 대한 정확한 생산 증가율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도 1972년과 1963년의 생산량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위의 인용문이 북한의 대표적 학자가 자국의 농업 및 농업제도의 발전을 대상으로 서술한 저명한 저술 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학자들의 학문적 저술은 그 어떤 다른 형태의 저술이나 정보에 비해서도 그 내용과 함의가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1962~199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학술서적 속에 나타난 ‘수치’들이 위와 같다면, 이 시기에 등장한 다른 북한의 저술이나 정보 속에서 발견되는 ‘수치’들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역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앞서 우리가 이 시기에 발견되는 북한의 각종 수치들을 통계가 아니라 ‘통계와 유사한 일종의 수치’라고 부른 이유이다.

I
II
III
IV
V

실제로 1960년대 초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문건이나 방송 또는 지도자들의 언급 등에 나타난 수치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띠고 있다. 첫째, 그 수치가 물리적 수량의 형태인 경우에는 그 앞이나 뒤에 매우 모호한 형용사나 동사가 따라 붙는다. 예를 들어, ‘xx톤 이상’ ‘xx톤 생산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다’, ‘xx톤 생산고지를 점령하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수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 수량이 정확히 얼마인가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모호한 형용사나 동사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철강 생산량과 같은 북한의 중요한 통계항목에 대해서는 앞의 모호한 형용사나 동사가 따라 붙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특정의 철강 공장의 생산량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용사나 동사 없이 정확히 ‘얼마’라고 특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계적 중요성을 갖는 주요 항목에 대해 북한의 정확한 수치를 얻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둘째, 이 기간 동안 북한에서 나온 대부분의 수치는 지수 통계이거나 증가율 통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정 연도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도는 얼마, 또는 그보다 몇 %가 ‘증가·감소’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준이 되는 특정연도의 정확한 물리적 수량 통계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정확한 통계 역시 알 수 없게 된다.

셋째, 이 기간 동안 발표된 지수 통계나 증가율 통계 가운데에도 그 기준연도를 정확한 물리적 수량 통계가 알려진 해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45~1961년 가운데 한 해를 그 기준연도로 삼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연도의 물리적 수량 통계를 알 수 있으므로 지수 통계나 증가율 통계를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물리적 수량 통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많은

경우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새로 발표된 지수 통계나 증가율 통계가 앞서 발표된 이전 연도의 물리적 수량 통계와 서로 정합적(consistent)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1945년과 1953년의 북한의 철강 생산량이 각각 100만 톤과 200만 톤이라고 알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1970년 북한이 이 해의 철강 생산량이 1945년에 비해서는 3배 증가했고, 1950년에 비해서는 2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1945년을 기준으로 하면 1970년의 철강 생산량은 300만 톤이 되고, 195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해의 생산량은 400만 톤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수치일까?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야기될 수 있다. 1970년 현재 북한이 그간의 철강 생산량 통계를 (재)수정하여, 1945년과 1953년의 통계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1970년 북한이 발표한 증가율 통계가 일종의 조작된 수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관련정보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비록 북한이 일정한 수치를 발표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외부 관찰자의 입장으로는 여전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6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발표된 북한의 지수 통계와 증가율 통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표 II-5> 1961~1990년 북한발표 통계 형태의 예시 - 알곡 생산량

연도	알곡	비고
1961년	4,830	370만톤 알곡생산(『조선중앙년감』, '58, p. 25) '60년비 100만톤증신(『조선중앙년감』, '62, p. 230)
1962년	5,000	-
1963년	5,000	500만톤(『조선중앙년감』, '85, p. 203)
1964년	5,000	-



연도	알곡	비고
1965년		-
1966년	4,405	-
1967년	5,110	-
1968년	5,672.1	-
1973년	5,343.5	-
1974년	7,000	650~700만톤(『조선중앙년감』, '74, p. 75), 700만톤(『조선중앙년감』, '85, p. 203)
1975년	7,700	800만톤(『조선중앙년감』, '76, p. 6)
1976년	8,000	700~750만톤(『조선중앙년감』, '71, p. 109)
1977년	8,500	800만톤(『조선중앙년감』, '85.5)
1978년	7,870	-
1979년	9,000	900만톤(『조선중앙년감』, '85, p. 203)
1980년	-	900만톤(『조선중앙년감』, '81.1, pp. 13~14.)
1982년	-	950만톤(『조선중앙년감』, '85, p. 203)
1983년	-	950만톤(『조선중앙년감』, '85, p. 203) (『조선중앙년감』, '83, p. 276)
1984년	10,000	1000만톤(『조선중앙년감』, '85, p. 203)
1985년	-	1000만톤(『조선중앙년감』, '85, p. 203), '83년비 113.6%증가(『로동신문』, '84.12.14)
1987년	'46년 생산량 5.3배	-
1989년	'46년 생산량 5배	-
1990년	'46년 생산량 5배 이상	-

*참고자료

1. 1974년 한해동안 알곡생산을 30%이상 성장시킴. 6개년 계획을 2년이나 앞당겨 점령(『조선중앙년감』, 1983, p. 276)
2. 1979년에는 해방직후에 비하여 3배이상 오름(『로동신문』, 1980.3.5)
3. 1980년 알곡 105% 초과수행(『로동신문』, 1981.4.8)
4. 최고수확년도였던 '80년보다 70만톤 이상의 알곡을 생산(『로동신문』, 1981.7.4)
5. 지난 10년간 알곡생산은 1.8배로 늘어남(『로동신문』, 1982.3.27)
6. 1982년에는 국가알곡생산계획을 116%로 넘쳐 수행함. 알곡생산 '74년에 비해 1.8 배 장성(『로동신문』 1983.3.1)
7. 1946년에 비해 '84년 알곡생산을 5.3배로 늘임(『로동신문』, 1985.8.11)
8. 1984년 1,000만톤 알곡생산(조선로동당중앙위 제6기 10차 전원회의, 1984.12.4~10.)
9. 1985년 알곡생산계획은 107.3% 수행(『로동신문』, 1985.11.14)

10. 1987년 알곡생산은 '46년의 5.3배 증가(『조선중앙년감』, '89, p. 231.)
 11. 1989년 알곡생산은 '46년의 5배 증가(『조선중앙년감』, '90, p. 87.)
 12. 지난 30년 동안 알곡생산 1.8배(그중 논벼 1.7배, 강냉이 2배)증가 (새로운 농업 지도체계 창설 30돛기념 중앙보고회, 1991.12.17.)
 13. '95년 곡물생산량 349만톤(걸곡식) '96년 곡물부족량(1996.2.1.) 320만톤(동북아시아의 에큐메니칼 나눔과 연대회의, 1996.2.1)에서 조선기독교도 련맹 국제부장 황시천 발표)
- 출처: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국토통일원, 1996), pp. 238~240, 243~245.

넷째, 이 기간 중 북한의 저술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언급한 몇몇 수치는 그 수량이 특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의를 모호하여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이 기간 중 북한은 자국의 국민소득 규모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1974년까지는 주로 북한 원화 기준으로, 그리고 1974년 이후에는 주로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규모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개입된 환율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국민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사회주의 경제의 총산출량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총생산’을 인구 규모로 나눈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인당 GNP나 GDP인지가 불분명 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발표한 1990년대 북한의 GDP통계를 살펴보면, 이처럼 199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발표한 국민소득 규모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비록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발표한 몇몇 물리적 수량수치가 있지만 이 또한 통계라고 부르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I
II
III
IV
V

<표 II-6> 1946~1994년 북한발표 통계 형태의 예시 - 인구

(단위: 천 명)

연도	총인구	인구수의 성장	남		여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1946	9,257	100	4,629	50.0	4,629	50.0
1949	9,622	104	4,782	49.7	4,840	50.3
1955.12.1	8,491	92	3,982	46.9	4,509	53.1
1956.9.1	9,359	101	4,474	47.8	4,885	52.2
1959.12.1	10,392	112	5,019	48.3	5,373	51.7
1960	10,789	117	5,222	48.4	5,567	51.6
1963.10.1	11,568	125	5,634	48.7	5,934	51.3
1975	16,400	-	-	-	-	-
1978	17,200 이하	-	-	-	-	-
1988	19,060	-	-	45.7	-	54.3
1989	20,000	-	9,140	45.7	10,860	54.3
1991	20,960	-	-	-	-	-
1994	21,514	-	-	-	-	-

주: 1. 1946~196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 1961, p. 18.

2. 1963년, 『조선중앙년감』, 1964, p. 314.

3. 1975년, 김일성의 일본 『마이니찌심봉』 인터뷰('75.11.26)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820만명)이 공부하고 있다…”에 의거 역산

4. 1976년, 북한정권수립 30주년기념 김일성연설('78.9.9)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860만명…”에 의거 역산

5. 1989년~1994년, 『조선중앙년감』 각 년호.

출처: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국토통일원, 1996), p. 99.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196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통계라고 부를 수 있는 북한의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북한이 통계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여러 수치를 발표했으니만큼 향후 북한통계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치 역시 조금은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일일지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표 II-5>부터 <표 II-7>은 이 기간 동안 북한이 발표한 여러 수치 가운데 특징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1990년대 중반 한국의 통일부가 당시까지 이용 가능한 거의 모든 북한 자료를 총동원하여 정리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부의 노력은 1996년 『북한경제통계집』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현재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표 II-7> 1946~1991년 북한발표 통계 형태의 예시
- 1인당 국민소득

연도	1인당 국민소득
1946년	64.44원
1949년	132원
1962년	416.66원
1966년	500원
1967년	580원
1970년	605.73원
1974년	1,020.69원
	1,000달러
1979년	1,920달러
1982년	2,200달러
1986년	2,400달러
1987년	2,400달러
1988년	2,530달러
1991년	2,460달러

- 주: 1. 1946, 1949년-『조선중앙년감』, 1970, p. 276.
 2. 1962, 1966, 1967년-『조선중앙년감』, 1968, p. 2.
 3. 1970년-『조선중앙년감』, 1974, p. 242.
 4. 1974년-『조선중앙년감』, 1976, pp. 30, 371.
 5. 1986년-방환주, 『조선개관』, (평양: 평양백과사전출판사, 1988).
 출처: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국토통일원, 1996) p. 126.



5. 북한통계의 가용성 3: 1990년대 중반 이후~현재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던 북한의 통계 암흑기는 1995년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해부터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원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제반 통계자료를 외부세계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당국이 외부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들은 그 형태나 범위, 내용, 규모 면에 있어 이전 시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통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5년 이후 북한이 외부세계에 어떤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이 시기를 세 가지의 부분 시기들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는 1995년 이전 시기인데, 이 기간 중에는 북한통계 암흑기의 예외적인 사건으로서 북한 인구자료의 대외 제출 내용을 주로 논의한다. 두 번째는 1995년 이후 2000년까지의 시기로서, 이 기간 중에는 인도주의적 대북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통계 제공 내용을 검토한다. 세 번째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이 기간 중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접촉 확대에 따른 북한통계의 다층적 대외유통 현상을 살펴본다.

통계 암흑기의 예외

- 1987년까지의 인구통계와 1993년 인구센서스 통계

우리는 앞에서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를 북한통계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 1989년 북한이 자국의 인구센서스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UN인구기금(UNFPA)에 1946~1987년까지의 인구통계를 제출한 것과 이를 배경으로 1994년에는 북한 최초의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대외

에 공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¹¹

우선 1989년 북한의 인구통계 제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당국은 당시까지 그 어떤 공식통계도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당국이 무엇 때문에 자국의 가장 중요하고도 비밀스러운 통계라 할 수 있는 세부적 인구통계를 UN에 제출하면서까지 인구센서스를 추진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종래 북한의 인구통계 수집체계로는 정확한 인구규모를 파악하기가 힘들고, 이러한 인구통계와 실제 인구 사이의 괴리 또는 오차는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는 경우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북한당국 역시 자신들이 기존에 수집한 인구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앞서 우리는 북한의 인구통계가 공민등록제도를 통해 수집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수집체계에서 북한의 각 가구주가 가구 구성원의 인구변동을 관계기관에게 보고하는 가장 큰 유인은 바로 식량배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새로운 가구 구성원이 출생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 해당되는 식량배급 대장에 자신이나 새로운 가구구성원의 이름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에서 식량난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수집체계가 상당한 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¹² 예를 들

¹¹ 이러한 인구통계 이외에도 또 다른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년 북한의 언론매체에서 발표했던 북한의 예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통계이다. 실제로 이러한 북한의 예산 수지에 대한 통계발표는 1990년대 후반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¹²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개인적으로 면담한 일본의 조총련계 학자 한 사람은 ‘북한의 인구학자들이 자국의 공민등록제도를 통해 수집되는 인구통계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이른바 이중 계산(double counting)의 문제를 들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북한

어, 식량난이 존재하는 경우 각 가구주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사망이 발생했을 때에도 가구 전체의 식량배급을 감안하여 이를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 보고를 하려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다. 인구 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전입한 지역에는 식량배급을 위해 즉시로 전입한 사실을 보고하지만, 전출한 지역에는 동일한 이유에서 그 사실을 지연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전 행정체계가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완전 전산화 되어 있다면, 이러한 보고의 누락이나 지연은 상당부분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각 省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행정기구 상호간의 유기적이고도 효율적인 협조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들 사이의 전산화 역시 극히 원시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북한에서 식량난이 발생하고 또한 가중되면, 북한당국이 수집하는 인구통계가 현실로부터 상당히 유리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1980년대 들어 북한당국은 자국 최초의 인구센서스 실시를 목적으로 UNFPA의 재정지원을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83년 처음으로 자국의 출생률, 사망률, 평균 수명 등 각종 인구관련 통계를 담은 *The Health Statistic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통계 보고서를 영문으로 발간하였으며, 이후 1987년에는 이를 보다 개정한 보고서 역시 출간

에서 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 식량배급을 의식해 새로운 거주지에는 즉각 전입신고를 하지만, 동일한 이유에서 구 거주지에는 즉각적으로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인물을 통계적으로 이중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의 경우 이러한 이중계산의 문제는 비단 전입과 전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생과 사망 등 인구변화 현상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노력으로 1989년에는 원칙적으로 UNFPA와 북한 사이에 최초의 인구센서스에 대한 재정지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한 기초 조사의 일환으로 같은 해 북한당국은 1946~1987년까지 자국의 주요 인구통계를 UNFPA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표 II-8> 1989년 북한 중앙통계국의 UNFPA 제출 인구통계 - 내용과 대상 기간

분류	내용	대상기간
인구	총인구(민간인구)	1946~1987
	남녀 인구 및 성비	1946~1987
	연령별 인구	1986
	지역별 인구(9개 도와 4개 특별시)	1987
	도시 및 농촌인구	1953~1987
	주요 도시 인구(23개 도시)	1980~1987
출생과 사망	(조)출생률과 (조)사망률	1944~1986
	영아 사망률	1944~1986
	총출생자 수와 총사망자 수	1980~1987
	사망 원인(원인별 사망자 비율)	1960~1986
기대수명	기대수명	1957~1986
직업별 인구구성	직업별 인구구성	1960~1987
	직업별 인구구성(남녀별)	1986~1987
기타	지역별 인구밀도(9개 도와 4개 특별시)	1987
	총가구수와 평균 가구규모	1980~1987
	내부적 인구이동(Internal Migration)	1980~1987
	결혼 및 이혼 건수	1949~1987
	등록된 학생 수	1986~1987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수	1988

출처: N. Eberstadt and Judith Ban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Korea Research Book, 1992)에서 재정리.

I
II
III
IV
V

<표 II-8>에 나타나 있듯이 UNFPA에 제출된 북한의 인구통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우선 이들 통계의 범위가 이전까지 북한이 제출한 그 어떤 통계 보다 광범위한 것이었다. 제출된 통계는 북한의 연령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인구 구성뿐만 아니라 사망률과 출생률, 기대수명, 가구 수와 가구 규모, 내부적 인구이동, 결혼 및 이혼, 교육과 의료, 보건 등 북한의 인구 구조와 관련된 기본 자료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들 통계는 1946년 이후 1988년까지의 시계열 자료의 형태로 제출되었다. 북한의 건국에서부터 당시까지의 인구변화 추세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계의 형태로 제출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통계는 정확한 정의를 수반하는 것들이었다. 이 글의 제3장에서 논의하겠지만 당시까지 발표된 북한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계의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많은 경우 그 정의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달랐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차용하여 분석을 진행할 경우 현실을 크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UNFPA에 제출된 통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나름의 정의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 이들 통계는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의 인구구조를 분석해 내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Everstadt와 Banister(1992)는 이들 통계를 이용해 1946~1988년까지 북한의 기본적 인구추세는 물론 당시까지 논란이 많았던 북한의 軍인구규모 역시 분석해 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¹³

1989년 북한의 기본적 인구통계가 UNFPA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UNFPA는 북한 인구센서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그

¹³- N. Eberstadt and Judith Ban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결과 1994년에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었다. 흥미롭게도 1994년 실시된 센서스는 ‘1993년 12월 31일 현재의 북한 인구’를 소급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실시되었다.¹⁴ 따라서 그 최종 결과는 1995년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 라는 제하에 영문으로 출간되었다. 북한의 센서스는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현대적이고 다면적인 목적의 센서스’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것의 목적이 단순히 북한의 지역별, 성별 인구규모와 출생 및 사망, 그리고 기초적인 가구 규모와 직업구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센서스의 결과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던 북한의 모든 연령층과 모든 지역에서의 구체적 인구구조가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인구추세를 보다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모델로 분석해 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1994년 실시된 센서스 자료는 1989년 북한이 UNFPA에 제출한 1987년까지의 주민등록 자료와 함께 현재까지 북한의 인구추세를 가장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¹⁴ 이러한 이유로 인해, 비록 명시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북한에서 과연 올바른 인구센서스가 실제로 실시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즉 북한의 공민등록제도를 통해 수집되는 모든 인구통계는 매년 말을 기점으로 최종 정리되어 집계된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올바른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지 않고 (또는 일부 지역에서만 센서스를 실시하고), 기존의 공민등록제도를 통해 집계된 인구통계를 센서스 결과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발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1994년 실시된 북한의 인구센서스에는 자금을 지원한 UNFPA는 물론 일체의 외부 관찰자들의 입회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 글의 제4장에서 논의하듯이, 북한의 인구센서스 결과에 대한 여러 의문과 함께, 이러한 센서스의 실시 여부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1995년 발표된 북한의 인구센서스 결과는 오늘날까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표 II-9> 1993년 북한 인구센서스 통계의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관련 통계 도표의 수
인구와 가구	총인구, 민간인구, 성별 인구, 지역별(9개 도와 4개 특별시) 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가구 및 가구규모	41
출생	총출생자, 지역별 출생자, 산모 연령별 출생자, 도시 출생자, 농촌 출생자	19
사망	총사망자, 지역별 사망자, 연령별 사망자, 도시/농촌별 사망자	31
노동인구	노동가능인구, 노동인구, 성별 노동인구, 직업별 노동인구, 산업별 노동인구, 도시/농촌별 노동인구, 노동가능인구 중 비노동인구	17
전문가/기능인	총전문가/기능인, 연령별 전문가/기능인, 성별 전문가/기능인	5

출처: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 1995에서 재정리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까지

인구통계라는 예외를 제외하면, 북한의 통계는 1990년대 중반까지 외 부세계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요청하면서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 무엇보다 북한은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진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의 북한 내 활동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계제출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북한은 자국의 피폐된 농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현 실상을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실상의 보고는 자연스럽게 북한의 기본적 통계제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제언론이나 NGO,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황 설명에 나서야 했고, 이러한 현황 설명에는 필연적으로 일정 규모의 통계가 뒤따라야만 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 북한통계는 ① 국제기구 등에 의한 현지 실사보고서 및 관련 문건, ②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와 공동 추진하는 사회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③ 국제언론 및 NGO 관계기관 등에 대한 북한당국 및 언론의 설명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외부세계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 가장 중요한 북한통계의 출처는 아마도 UN산하의 구호기관인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이 공동으로 추진한 북한 실사팀(DPRK Mission Team)의 현지보고서일 것이다. 이들 기관은 북한이 국제적 식량지원을 요청한 1995년 이후 매년 북한을 수 차례 방문하여 북한의 농업실태와 식량사정에 대해 현지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기적인 긴급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였다. 이들의 실사과정은 북한당국의 전면적인 협조 아래 이루어졌고, 이러한 협조는 북한당국의 필요한 통계적 지원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이들 실사팀에 북한당국이 보유한 통계자료들을 제출하거나, 또는 이들 실사팀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북한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제출되고 수집된 통계들은 주로 북한의 식량 및 농업에 관련된 것들이었지만, 동시에 그와 연관이 있는 북한의 인구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역시 망라하는 것들이기도 하였다.

<표 II-10>은 이렇게 제출되고 수집된 북한의 통계자료들을 몇 가지만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표 II-10A>는 이들이 북한의 농업생산에

I
II
III
IV
V

관해 수집한 통계를 예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들이 수집한 농업 생산에 관해 통계는 북한의 지역별, 곡종별, 파종형태별 생산을 총망라한 것이며, 이후 이들은 여기에 북한의 텃밭 생산량이나 기타 생산량을 첨가하여 북한의 농업생산 전반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이제까지 북한당국이 발표한 그 어떤 농업생산 통계보다 더욱 상세하며 정교한 것으로, 그 신뢰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농업 전문가들이 직접 북한의 현장을 방문하여 샘플을 채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만들어낸 통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통계는 국제기구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북한의 공식통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북한당국은 극심한 경제적 파멸에 따른 행정의 마비로 사실상 자국의 농업생산을 정확히 파악할만한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당국은 이들 국제기구의 현지 실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렇게 보면, 비록 <표 II-10A>에 나타난 통계들은 국제기구에서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북한의 공식통계라고 간주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이후 국제기구에 제출한 공식적인 농업생산 통계는 <표 II-10A>에 나타난 것과 같은 국제기구의 실사 통계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표 II-10A> 2001년 북한의 지역별 곡물생산 실적
- FAO/WFP의 현지 실사결과

(단위: 헥타, 1,000 MT)

	주곡								겨울철 이모작 곡물					
	벼(논벼)		옥수수		감자		기타 곡물		겨울 밀		봄 보리		봄 감자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평양	26.3	105.2	14.0	43.4	0.8	8.9	0.5	0.6	3.0	6.2	2.7	4.5	1.1	7.2
평안남도	96.7	367.3	61.2	183.7	6.7	78.0	3.1	4.0	7.7	15.8	6.1	10.4	14.7	89.5
평양북도	101.2	384.4	87.0	261.1	11.0	109.3	6.2	6.8	3.5	7.2	3.7	6.2	11.8	72.3
자강도	7.0	21.7	36.7	110.0	1.4	17.4	5.2	5.9	0.1	0.2	0.9	1.4	2.8	17.2
황해남도	147.2	588.9	80.0	248.0	16.1	202.5	5.7	7.4	18.7	38.3	10.8	18.4	20.9	127.2

	주곡								겨울철 이모작 곡물					
	벼(논벼)		옥수수		감자		기타 곡물		겨울 밀		봄 보리		봄 감자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황해북도	47.0	141.0	69.4	208.2	5.2	57.4	1.7	2.0	9.6	19.7	5.8	9.9	14.0	85.6
강원도	34.7	76.2	36.6	99.0	2.7	24.6	2.4	3.1	4.7	9.6	1.8	3.1	8.9	54.4
함경남도	59.2	201.3	48.0	144.0	7.4	120.5	9.5	12.8	4.0	8.2	1.7	2.9	20.9	127.2
함경북도	24.5	73.4	47.0	136.3	11.9	195.4	3.8	4.3	-	-	-	-	1.7	10.7
양강도	1.9	5.7	3.4	9.6	22.5	436.6	22.0	25.4	-	-	-	-	-	-
개성	11.6	41.7	6.0	17.4	0.6	6.0	0.7	0.7	2.7	5.4	0.7	1.1	0.7	4.3
남포	14.8	53.4	7.0	20.9	2.5	23.5	1.1	1.1	3.3	6.8	1.6	2.7	1.1	6.9
합계	572.0	2060.2	496.3	1481.6	89.0	1280.0	61.9	74.3	57.3	117.4	35.6	60.6	98.7	602.3

출처: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6 October 2001.

한편, <표 II-10B>는 북한당국이 FAO와 WFP의 실사팀에 제출한 자국의 1999년 8월 말 현재 인구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다. 하나는 이들 통계가 그것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북한당국이 얻을 수 있는 거의 최신의 통계라는 점이다. 이는 북한당국이 FAO와 WFP 같은 국제기구들에게 자국이 보유한 새로운 통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그럴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 통계가 북한의 인구구조를 (식량)배급인구와 비배급인구(농민)로 양분하고, 이것을 다시 지역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통계의 형태는 북한의 식량배급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배급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수매양정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통계는 수매양정성이 만들어 제출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는 1995년 이후 국제기구 등에 통계를 제출하는 기관이 비단 중앙통계국과 같은 전문 통계기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러한 성격의 인구통계는 이제까지 북한에서 전혀 공표되지 않았던 것이다. 1989년 북한당국이

I
II
III
IV
V

UNFPA에 제출한 인구통계나 1995년 발표된 인구센서스 통계 역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1995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외부 세계에 제공하는 통계는 비단 중앙통계국과 같은 전문 통계기구에서 만들고 통제하는 통계뿐만 아니라, 북한 통계제도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내각의 각 성에서 수집하고 생산한 통계까지를 모두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외부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북한통계의 내용과 범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확대되었다는 뜻이다.

<표 II-10B> FAO/WFP 실사팀에 제출된 공식 인구통계
- 1999년 8월 말 현재

(단위: 명)

	인구		인구 구성	
	인구 수	구성(%)	농업 인구	배급인구*
평양	3,044	(13)	8	92
평안남도	3,100	(14)	27	73
평안북도	2,625	(12)	40	60
자강도	1,232	(5)	28	72
황해남도	2,290	(10)	49	51
황해북도	1,734	(8)	40	60
강원도	1,467	(7)	31	69
함경남도	2,932	(13)	31	69
함경북도	2,227	(10)	22	78
양강도	703	(3)	21	79
개성	386	(2)	35	65
남포	814	(4)	18	82
Total	22,554	(100)	29	71

* 767,000명의 軍 인구를 포함.

출처: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8 November 1999.

이러한 사실은 <표 II-10C>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에는 199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북한의 각 지역별로 식량배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가 수록되어 있다.¹⁵ 당연히 이러한 통계는 북한의 식량배급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만들어 제출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통계는 1995년 이전에는 전혀 외부세계로 공표되지 않았던 통계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통계로부터 1995년 이후 외부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북한통계의 내용과 범위가 극단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 II-10B>의 지역별, 식량배급인구를 <표 II-10C>와 연결시켜보자. 그러면 우리는 1997~1998년 현재 북한의 지역별 1인당 식량 배급량에 대한 근사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¹⁶ 이는 곧 북한당국이 식량배급을 받는 도시민들에 대한 식량 분배에 있어 지역별로 차이를 두었는지 여부를 북한의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또한 만일 우리가 농민인구 1인당 식량 배급량을 알 수만 있다면, 북한당국이 도시민(식량배급인구)과 농민 사이의 식량 배급에도 차이를 두었는지 여부 역시 알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예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식량 배급통계 역시 FAO와 WFP와 같은 국제기구에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¹⁷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위기가 정점에 달했을 당시

15- 북한은 협동농장의 결산분배가 모두 끝나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를 1 농업연도로 설정하고, 모든 식량 및 농업관련 통계를 여기에 맞게 집계하고 있다.

16- 이러한 근사치를 구해 실제의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분석에 이용한 연구로는 예를 들어,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D. Thesis, University of Warwick. 2003를 참조.

17- 실제로 북한당국은 1995년 이후 농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량 통계를 거의 정기적으로 FAO/WFP 실사팀에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통계 수치는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arious years에 의해 발표되었다. 아래의 통계는 이렇게 발표된 수치를 이식, 『1994~2000년 북한기근』(서울: 통일연구원, 2004)이 정리한 것이다.



북한당국의 지역별·계층별 식량분배 상황을 북한의 통계를 통해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분석들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1995년 이후 북한당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제출한 통계의 범위와 내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뜻이다.

<표 II-10C> FAO/WFP 실사팀에 제출된 식량배급 현황 통계, 1997년 11월~1998년 10월

(단위: MT)

	97.11	97.12	98.1	98.2	98.3	98.4~98.8	98.9	98.10
평양	27,750	27,750	20,800	13,800	2,700	0	10,415	10,415
평안남도	15,000	15,000	11,200	7,500	1,500	0	5,650	5,650
평안북도	10,150	10,150	7,600	5,100	1,000	0	2,550	2,550
자강도	9,350	9,350	7,000	4,600	900	0	2,350	2,350
황해남도	10,300	10,300	7,700	5,100	1,000	0	3,860	3,860
황해북도	9,150	9,150	5,500	3,700	700	0	2,400	2,400
강원도	5,650	5,650	4,200	2,800	500	0	1,450	1,450

<북한의 식량배급 추이(1인당 일일 평균, 그램)>

A. 1995.11~1996.10

	1995.10~1996.11	1996.4~1996.6	1996.7~1996.10
非농민	452	250~300	200
농민	연간 100kg (예년 수준의 절반 이하)		

B. 1996.11~1997.10

	1996.11~12	1997.1~97.6	1997.7~97.10
非농민	450~500	100~200	0
농민	연간 80kg 정도*		

C. 1997.11~1998.10

	1995.10~12	1998.1	1998.2	1998.3	1998.4~8	1998.9~10
非농민	400	300	200	100	0	100
농민	연간 130~160kg (135kg 기준)					

	97.11	97.12	98.1	98.2	98.3	98.4~98.8	98.9	98.10
함경남도	13,600	13,600	10,200	6,800	1,300	0	2,720	2,720
함경북도	13,100	13,100	10,000	6,700	1,300	0	2,620	2,620
양강도	5,250	5,250	3,900	2,600	500	0	1,050	1,050
개성	2,050	2,050	1,500	1,000	200	0	459	459
남포	4,550	4,550	3,400	2,300	400	0	1,150	1,150
계	125,900	125,900	93,000	62,000	12,000	0	36,674	36,674

원출처: 북한 식량양정성

출처: FAO/WFP,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2 November 1998.

<표-참고> UNDP에 제출된 1988년 3월 현재 식량배급 및 보유 현황 통계
(단위: 1,000 MT)

	97년 생산량	97년 10월 이전 소비량	농민 분배량	기타 우선 소요량	국내 생산물 가용량	97.11~98.2 공급량		98.3 현재 가용량
						국내식량	해외원조	
함경북도	103.1	24.0	79.6	10.3	-10.8	43.6	24.5	-54.4
함경남도	101.5	23.6	149.3	11.9	-83.3	44.2	16.5	-127.5
강원도	61.1	14.2	77.7	11.1	-41.9	18.3	33.6	-60.2
동부해안지역	265.7	61.8	306.6	33.3	-136.0	106.1	74.6	-242.1
평안북도	299.5	69.7	151.1	15.8	62.9	33	41.6	29.9
평안남도	326.0	75.9	136.0	24.0	90.1	48.7	28.1	41.4
남포	79.2	18.5	22.1	11.3	27.3	14.8	7.6	12.5
황해북도	205.5	47.8	111.5	25.6	20.6	24	13.5	-3.4
황해남도	646.1	150.4	188.0	32.9	274.8	33.4	7.6	241.4
서부해안지역	1556.3	362.3	608.7	109.6	475.7	153.9	98.4	321.8
양강도	65.2	15.2	35.7	7.4	6.9	17	5.0	-10.1
자강도	85.0	19.8	52.6	4.1	8.5	30.3	5.1	-21.8
평양	131.2	30.5	42.5	5.8	52.4	90.1	6.5	-37.7
개성	44.6	10.4	20.9	4.8	8.5	6.6	1.5	1.9
내륙 지역	326.0	75.9	151.7	22.1	76.3	144.0	18.1	-67.7
북한 전체	2148.0	500.0	1067.0	165.0	416.0	404.0	191.1	12.0

출처: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Geneva, 28~29 May 1998, 통계부록.

I
II
III
IV
V

이 시기 북한통계가 발표되는 또 다른 형태는 북한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각종 사회경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고서들을 통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98년 북한과 UNDP는 북한농업의 재건과 환경복구를 위한 일종의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북한당국은 여기에 소요되는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자국의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 몇 가지를 제출하였다. <표 II-11A>와 <표 II-11B>는 이렇게 제출된 북한의 통계자료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두 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하나는 북한의 GDP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미곡생산통계이다. 먼저 <표 II-11A>를 보자. 이제까지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GDP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다. 물론 과거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총산출량인 사회적 총생산액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GDP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지도자들이나 공식문건 역시 간간히 국민소득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의미의 GDP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에 반해 <표 II-11A>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GDP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의 총산출량 수준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GDP의 부문별 구성 역시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통계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표 II-11B>는 어떤가? 과거 북한은 지역별 미곡생산통계를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미곡 생산량을 발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곡 또는 조곡의 개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북한통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제 북한의 미곡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논란이 많은 주제였다. 그러나 <표 II-11B>는 북한의 미곡생산을 조곡과 정곡의 기준에 각각 맞추어 지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표 II-11A>와 <표 II-11B>는 1995년 이후 외부세계가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치를 매우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1995년 이후 발표된 북한통계는 이제까지의 통계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형식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II-11A> UNDP에 제출된 1992~1996년 공식 GDP통계

	1992	1993	1994	1995	1996
[GDP 구성, 백만 달러]					
농업	4,551	4,689	3,223	2,228	1,556
공업 및 건설	9,122	9,483	7,341	6,042	5,283
서비스 및 기타	7,160	6,762	4,858	4,532	3,748
GDP	20,833	20,934	15,422	12,802	10,587
인구 (백만)	20.73	21.06	21.38	21.70	22.02
1인당 GDP(달러)	1,005	994	721	590	481
[GDP 구성, %]					
농업	22%	22%	21%	17%	15%
공업 및 건설	44%	45%	48%	47%	50%
서비스 및 기타	34%	32%	32%	35%	35%
GDP	100%	100%	100%	100%	100%
[증가율, %]					
농업	-	3.0%	-31.3%	-30.9%	-30.2%
공업 및 건설	-	4.0%	-22.6%	-17.7%	-12.6%
서비스 및 기타	-	-5.6%	-28.2%	-6.7%	-17.3%
GDP	-	0.5%	-26.3%	-17.0%	-17.3%
인구	-	1.6%	1.5%	1.5%	1.5%
1인당 GDP	-	-1.1%	-27.4%	-18.2%	-18.5%

출처: 앞의 <표-참고>와 동일

I
II
III
IV
V

<표 II-11B> UNDP에 제출한 1989~1997년 지역별 곡물생산통계
- 미국의 경우

(단위: 조곡 기준, 백만 MT)

	1989	1990	1991	1992	1993	89-93 평균	1994	1995	1996	1997
함경북도	0.13	0.11	0.13	0.17	0.05	0.12	0.06	0.09	0.05	0.07
함경남도	0.40	0.44	0.44	0.49	0.29	0.41	0.30	0.21	0.14	0.10
강원도	0.18	0.18	0.19	0.18	0.15	0.18	0.13	0.09	0.06	0.05
동부 해안지역	0.70	0.73	0.76	0.84	0.49	0.71	0.49	0.38	0.25	0.22
평안북도	0.62	0.79	0.64	0.68	0.83	0.71	0.60	0.25	0.20	0.13
평안남도	0.93	0.89	0.74	0.79	1.03	0.88	0.79	0.39	0.24	0.27
남포	0.12	0.12	0.12	0.10	0.15	0.12	0.11	0.07	0.06	0.08
황해북도	0.33	0.41	0.33	0.37	0.43	0.37	0.12	0.15	0.11	0.19
황해남도	1.23	1.16	1.09	1.25	1.36	1.22	0.77	0.55	0.38	0.48
서부 해안지역	3.23	3.37	2.92	3.19	3.80	3.30	2.39	1.41	0.99	1.15
양강도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1
자강도	0.03	0.01	0.03	0.04	0.04	0.03	0.03	0.02	0.02	0.02
평양	0.27	0.26	0.29	0.27	0.30	0.28	0.20	0.14	0.11	0.13
개성	0.08	0.10	0.08	0.10	0.11	0.09	0.01	0.04	0.03	0.04
내륙 지역	0.39	0.38	0.41	0.41	0.45	0.41	0.24	0.21	0.17	0.20
북한 전체	4.23	4.48	4.09	4.45	4.75	4.42	3.11	2.00	1.41	1.57
(정곡 기준)	3.24	3.36	3.07	3.34	3.56	3.31	2.18	1.40	0.98	1.10
인구(백만명)	19.77	20.08	20.40	20.73	21.06	20.40	21.38	21.70	22.03	22.36
1인당 기준 (연간, Kg)	164	167	150	161	169	162	102	64	45	49
(일일, gram)	449	458	412	441	463	445	279	176	122	135

원출처: 북한 농업위원회

출처: <표 II-11A>와 동일

마지막으로 <표 II-12>는 북한당국이 이 기간 중 국제언론이나 NGO, 또는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통계를 브리핑의 형식으로 공표한 것을 한 가지 사례의 형태로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이 기간 중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되는 자국의 사망률 통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의 보건성은 1997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대표단에게 북한의 5세 미만 유아사망

률이 1994년 출생자 1,000명당 31에서 1996년에는 58로 상승했다고 브리핑하였다.¹⁸ 또한 북한의 외무성은 1999년 평양에 주재하던 국제식량지원단 대표들을 대상으로 1994년 1,000명당 6.8이었던 사망률이 1998년에는 9.3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¹⁹ 이러한 사망률 통계발표는 이후 더욱 구체화되어 북한이 UN 등 국제기구에 제출한 각종 공식문건 등을 통해 상세한 형태로 공표되었다. <표 II-12>는 이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된 북한의 사망률 통계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1995년 이후 북한의 통계는 국제기구 등에 의한 현지 실사 보고서나 문건, 북한당국과의 공동 프로젝트 보고서, 그리고 국제언론 및 NGO 등 관계기관 등에 대한 브리핑의 형식으로 꾸준히 공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통계의 범위나 형태 그리고 규모와 질 등 모든 면에서 그 이전의 어떤 시기 보다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12> 1990년 이후 북한의 출생률, 사망률, 기대수명에 대한 통계

	1990	1993	1994	1996	1998	1999	2000	2002
출생률(1,000명당)	22	20	-	20.1	18.2	17.8	17.5	16.2
사망률(1,000명당)	5.9	5.5	6.8	6.8	9.3	8.9	8.8	9.1
5세 미만 유아사망률*	-	27	28(31)	40(58)	50	48	-	-
기대수명	-	72.7	-	70.1	-	66.8	67.1	67.21

* 출생자 1000명당 사망률, ()는 북한 보건성의 USCDC 보고 수치
출처: US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atus of Public Health-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ril 1997," *MMWR*, Vol. 46, No. 24 (1997); Jonathan Watts, "A Starving Nation," *The Lancet*, Vol. 353 (22 May 1999);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16 July 2002).

¹⁸- US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atus of Public Health-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MWR*, Vol. 46, No. 24 (1997).

¹⁹- Jonathan Watts, "A Starving Nation," *The Lancet*, Vol. 353 (22 May 1999).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북한통계의 유통은 2000년대 이후 그 형태와 범위,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 더욱 확대되고 충실해졌다. 우선 북한당국은 UN 등 각종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각종 문서와 보고서에 자국의 공식통계를 첨부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예를 들어, 북한은 UN인권규약의 서명자로서 주기적으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UN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데, 2002년 북한이 UN에 제출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는 당시까지의 주요 북한통계를 수록한 일종의 통계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²⁰ <표 II-13>에서 보듯이, 이러한 통계부록은 북한의 기본적 인구와 GDP, 출생 및 사망, 기대수명 등과 같은 기초지표에서부터 산업별 고용구조와 전문가 및 기능인의 규모, 그리고 외채규모에 이르는 세부 통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 수록된 북한통계는 그 시계열의 범위가 짧고, 일부 통계의 경우 주요 내용이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등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공식문건에 자국의 통계를 첨부하는 일은 이제까지 거의 없었던 일로써 과거 북한이 가지고 있던 통계적 비밀성이 2000년대 들어 공식적으로 크게 완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²⁰-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16 July 2002).

<표 II-13> 2000년 이후 UN 제출 보고서에 첨부된 통계부록의 사례
- DPRK(2002)의 경우

분류	주요 내용	대상 기간
주요 지표	총인구, 기대수명, GNP, 1인당 GNP	1993, 1999, 2000
인구	총인구, 지역별 인구 (9개 도와 3개 특별시), 도시/농촌별 인구, 가구 수	2000
고용	산업별 고용구조, 성별 고용구조	1995, 1999
출생 및 사망	(조)출생률, (조)사망률, 영아 사망률	1990, 1993, 1996, 1998, 1999, 2000
전문가/기능인	전문가/기능인 수, 의사 수	1993, 1995, 1998
외채 및 실업	총외채 규모와 실업 등	1999, 2001

출처: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16 July 2002). 통계부록에서 재정리

북한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각종 자금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문건들 속에 수록되는 북한통계의 형태와 범위 역시 대폭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2004년 북한은 전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계획(Immunization Program)을 수립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보건성과 재무성이 공동으로 일종의 금융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서에도 당시까지의 북한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가 첨부된 것이다. <표 II-14>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 수록된 북한통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다. 우선은 북한 통계의 출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중앙통계국으로부터, 보건성 그리고 여타의 북한 정부기구, 여기에 북한당국이 과거 출판한 공식적 보고서까지 실로 각양각색인 것이다. 이는 북한정부 스스로가 이와 같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내각의 각 쩌에서 작성한 각종 통계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북한당국



이 외부에 제출하는 통계의 출처가 북한의 각 省을 위시한 전체 정부부서로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에는 북한의 수출입 통계가 사상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자국의 수출입 규모에 대해 단 한번도 구체적인 통계를 밝힌 적이 없다. 물론 1961년 간행된 『인민경제발전통계집』에 무역의 항목이 삽입되어 있으나, 당시 수록된 통계는 지수 통계로써 북한의 무역규모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이는 2000년 들어 북한당국이 이제까지 전혀 발표하지 않았던 통계항목에 대해서도 외부에 그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당국은 자국의 원자료에 기초해 국제기구 등이 생산한 통계 역시 공식통계와 혼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1990년과 2000년 북한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출처를 UN인구기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까지 북한은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이나 출생자 수, 산모의 연령별 출생률 등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나, 이를 토대로 계산한 합계출산율은 한번도 공표한 적이 없다. 이는 북한당국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원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기구 등이 새롭게 생산한 통계에 대해서도 다른 공식통계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히 이채로운 것이다.

<표 II-14> 2000년 국제기구 등에 대한 자금요청 지원 문건 속에
 첨부된 통계부록의 예시
 - DPRK FSP Taskforce(2004)의 경우

[A] 사회경제지표

지표		단위	연도	값	출처
국토면적		Sq.km.		122,762	SoE Report
인구	전체		1995	21,819,040	북한당국
	남성		1995	10,634,215	북한당국
	여성		1995	11,184,825	북한당국
	전체		2000	22,963,422	북한당국
	남성		2000	11,201,146	북한당국
	여성		2000	11,762,276	북한당국
	전체		2003	23,310,000	북한당국
	남성		2003	11,305,350	북한당국
	여성		2003	12,004,560	북한당국
	전체	million	1994	23.5	UNDP-1
	도시	million	1994	14.3 (61.%)	UNDP-1
	농촌	million	1994	9.2 (39%)	UNDP-1
평양	million	1994	2.7	ASCW	
인구밀도	per sq km	1994	191	UNDP-1	
인구증가율	% per annum	1998	0.9		
합계출산율		1990	2.4	UNFPA	
		2000	2.1	UNFPA	
기대수명(남성/여성)	years	1995	67.6, 75.2	북한당국	
		2000	63.0, 70.3	북한당국	
		2004	64.4, 67.1	북한당국	
GDP	US \$ million	1992	20,875	SoE Report 2001	
		1993	20,935	북한 중앙통계국	
		1994	15,421	SoE Report 2001	
		1995	12,802	북한 중앙통계국	
		1996	10,588	SoE Report 2001	
		1998	10,273	북한 중앙통계국	
		2000	10,608	북한 중앙통계국	
		2004	11,164	Estimated	

I
 II
 III
 IV
 V

지표		단위	연도	값	출처	
1인당 GDP		US \$	1992	990	SoE Report 2001	
			1993	991	북한 중앙통계국	
			1994	722	SoE Report 2001	
			1995	587	북한 중앙통계국	
			1996	482	SoE Report 2001	
			1998	457	북한 중앙통계국	
			2000	463	북한 중앙통계국	
			2004	479	북한 중앙통계국	
부문별 GDP 구성		공업	%	1996	45.1	SoE Report 2001
		농업	%	1996	14.7	SoE Report 2001
		건설	%	1996	4.8	SoE Report 2001
		기타	%	1996	35.4	SoE Report 2001
수출		US \$ million	1993	1,270	북한 중앙통계국	
			1998	859	북한 중앙통계국	
			2000	877	북한 중앙통계국	
수입		US \$ million	1993	1,474	북한 중앙통계국	
			1998	917	북한 중앙통계국	
			2000	933	북한 중앙통계국	

[B] 공중보건 지표 및 출처

지표	값	연도	출처
5세 미만 사망률	27 / 1000	1993	북한당국
	39.3 / 1000	1996	북한당국
	48.2 / 1000	1999	북한당국
	55 / 1000	2004	북한당국
영아 사망률	23 / 1000	1991	ASCW p. 7
	14.1 / 1000	1993	북한당국
	21.8 / 1000	2000	북한당국
	21 / 1000	2004	북한당국
의료부문 종사자	121188	2002	북한 보건성
의료부문 종사자/인구비율	1 : 200	2002	북한 보건성
100,000명당 의사 수	297	2002	북한 보건성
100,000명당 병상 수	1383	2002	북한 보건성

지표	값	연도	출처
국가 예산 중 의료부분 비중	8.4%	1985	북한 보건성
	7.6%	1990	북한 보건성
	4.2%	1995	북한 보건성
	6.0%	2000	북한 보건성
	5.9%	2001	북한 보건성
	4.6%	2002	북한 보건성
	5.86%	2003	북한 보건성
	2.5%	2004	북한 보건성
주요 통계출처			
ASCW	UNICEF, <i>An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0</i> , Dec 1999		
UNDP-1	UNDP, <i>1993/94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for DPR Korea</i> , undated.		
SoE Report	DPRK Government, <i>State of the Environment, DPR Korea</i> , 1 November 2001		

출처: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1 December 1993)*, 1995.

위의 마지막 특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2000년 이후 북한과 해외기관 사이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동 통계사업이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생산된 각종 통계자료들을 북한당국이 일종의 공식통계로써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표 II-15>를 보자.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1998년부터 EU와 호주를 위시한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WFP와 UNICEF 같은 국제기구 역시 공동으로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에 대한 현지 조사를 거의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²¹⁾ 물론 이

²¹⁾ 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World Food Program, *Nutrition Survey of the*

러한 현지 조사는 북한당국의 승인과 적극적인 협조 아래 수행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는 이렇게 얻어진 통계자료가 주로 해당 외국 조사기구의 이름으로 발표됨으로써 북한의 공식통계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표 II-15>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이러한 조사는 일괄하여 북한의 중앙통계국의 이름으로 공표되었다. 해외의 자금과 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해외의 힘으로 수집되고 작성된 통계를 북한당국이 자국의 공식통계와 유사한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통계당국이 해외의 협조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국의 통계제도와 기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의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해외와의 협조를 통해 보다 국제적인 수준에 어울리는 자국의 통계를 외부에 공표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II-15>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상태
- 영양부족 어린이 비중

(단위: %, 명)

		저체중(Weight/Age)		발육부진(Height/Age)		영양실조(Weight/Height)		어린이 수
		% <-2SD	% <-3SD	% <-2SD	% <-3SD	% <-2SD	% <-3SD	
성별	남아	28.2	10.8	45.8	24.2	10.7	4.6	2,124
	여아	27.7	9.0	44.6	20.6	10.1	3.8	2,051
지역	내륙	24.5	7.6	36.9	16.8	10.5	3.8	1,351
	해안	19.3	4.8	41.6	18.3	6.9	3.3	759
	평야	30.1	11.2	51.2	25.8	8.7	3.0	1,025
	산악	36.5	15.5	52.8	29.4	14.5	6.5	1,040
농촌/도시	도시	22.3	6.3	39.2	17.4	8.3	3.5	2,497
	농촌	36.3	15.4	54.1	29.9	13.5	5.3	1,678

DPRK (November 1998)를 참조.

		저체중(Weight/Age) % <-2SD % <-3SD		발육부진(Height/Age) % <-2SD % <-3SD		영양실조(Weight/Height) % <-2SD % <-3SD		어린이 수
연령 개월 수	6 미만	7.7	1.6	21.9	12.3	7.8	3.0	586
	6-11	21.5	6.8	31.9	14.6	10.4	3.1	652
	12-23	31.4	11.8	50.2	25.2	11.9	4.5	1,075
	24-35	34.0	12.1	47.5	23.1	9.7	4.0	767
	36-47	32.4	11.7	58.6	27.7	10.2	4.5	690
	48-59	39.0	15.1	60.3	32.1	11.9	6.8	405
전체		27.9	9.9	45.2	22.4	10.4	4.2	4,175

출처: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0, 2000*.

이러한 측면은 <표 II-16>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2000년 이후 북한은 UN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와 공동으로 북한의 모성건강(Reproductive Health)에 대한 통계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²²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조사의 결과보고서가 UN인구기금이 아닌 북한의 관련 기관의 이름으로 공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보고서에는 모성건강에 대한 실사 통계자료와 함께 북한당국이 별도로 수집하여 생산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가 동시에 첨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당국이 한편으로는 해외의 협조를 얻어 생산된 통계를 자국의 공식통계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이용해 다른 방법으로 생

²²- 2000년 이후 북한과 국제기구 등의 공동 통계조사 사업 가운데 가장 활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린이와 여성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 환경 등에 관한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모성건강 조사 이외에도 북한당국과 UNICEF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가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조사의 결과 역시 최근 모두 북한의 중앙통계국의 명의로 발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Second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0, 2002*를 참조.



산된 자국의 공식통계를 외부에 효과적으로 공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6> 국제기구 등의 자금지원으로 수행된 통계조사 사업의 결과보고서에 공표된 북한통계의 사례 예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2004)의 경우

[A] 북한당국이 제출한 기초 통계

지표	1993(일제조사)	2002(통계자료)
인구 (천명)	21,213	23,313
녀자	10,884	11,944
남자	10,330	11,369
성비	94.9	95.19
나이분포비율		
0~14	27.9	26.5
15~64	66.5	69.5
65 +	5.6	4.0
15~49살 여성인구비율	27.4	26.3
인구밀도	173	190.1
일반출생률(인구 1,000명당)	20.0	16.22
일반사망률(인구 1,000명당)	5.5	9.07
총 산생률	2.1	2.04
평균수명	72.7	67.21
녀자	76.1	71.05
남자	68.5	63.13

[B] 통계 조사의 결과-북한 여성들의 피임방법 이용률

(단위: %, 명)

나이	모든 방법	현대 방법	여성 영구	남성 영구	알약	고리	콘돔	좌약	전통 방법	여성 수
20~24	17.0	8.5	0.0	0.0	1.6	2.7	3.2	1.1	8.5	188
25~29	39.2	28.2	0.2	0.1	3.5	17.0	6.3	1.1	11.0	947

나이	모든 방법	현대 방법	여성 영구	남성 영구	알약	고리	콘돔	좌약	전통 방법	여성 수
30~34	70.9	58.0	3.8	0.3	5.4	39.8	7.4	1.2	12.9	1,470
35~39	86.1	73.7	6.6	1.3	5.2	51.8	7.7	1.1	12.5	1,285
40~44	82.5	73.4	7.5	1.4	1.4	58.4	4.3	0.4	9.0	986
45~49	65.5	63.2	3.9	0.9	1.1	56.9	0.5	0.0	2.3	663
모두	68.6	58.2	4.4	0.8	3.7	42.8	5.8	0.9	10.4	5,539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 『2002년 재생산건강조사보고서』 (2004), pp. 1, 21.

2000년 이후 북한 현지에서 활동하는 WFP 등 UN산하 구호기관들을 통해 유통되는 북한통계의 형태와 범위 역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표 II-17>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17A>는 WFP가 식량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북한의 각 郡별 지역단위에 대해 북한당국이 제출한 상세한 인구통계의 내용을 7개 郡에 한해 축약하여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통계는 이제까지 북한당국이 공민등록제도를 통해 생산해 외부에 공표한 통계 가운데 가장 상세한 것이다. 실제로 <표 II-17A>와 북한 각 郡 단위의 연령별, 성별 인구구성뿐만 아니라 배급인구의 구조와 농촌인구의 구성, 임신부 및 수유부와 같은 취약계층의 규모와 같은 세세한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이처럼 상세한 인구통계는 이제까지 발표된 적이 없으며, 북한이 UN인구기금의 협조를 얻어 1994년 실시한 인구센서스의 결과보고 자료조차 이처럼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못했다. 이는 2000년 이후 북한이 자국이 보유한 아주 내밀하고 세부적인 각종 통계 데이터를 각종의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세계에 제공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 II-17B>는 WFP 등이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자체 수집한 또 다른 북한 郡 단위 기초



통계자료를 예시하고 있다. 이 표 또한 앞의 <표 II-17A>와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북한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얻을 수 없었던 구체적 통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000년 이후의 북한에 관한 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경제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만큼 내밀하고도 세부적인 통계들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표 II-17A> WFP의 북한당국으로부터의 수집통계 예시
- 2002년 말 현재 郡별 인구구성(함경북도 7개 郡의 경우)

(단위: 명)

군	총인구	0세	1~4	5~6	7~10	11~16	17~59
조산	41,949	740	3,659	1,574	2,977	3,943	23,660
휘천시	163,604	1,799	8,438	5,339	11,404	17,003	100,359
고풍	30,003	524	2,252	1,165	2,226	3,041	16,842
송원	37,414	540	2,757	1,536	3,312	4,419	20,143
동신	44,139	759	3,673	1,701	3,419	4,300	24,380
우시	40,438	694	4,034	1,611	3,195	4,104	22,192
이원	58,532	980	5,422	2,369	4,600	5,960	31,915

배급 인구 비율 %	60세 이상	60세 이상 배급인구	여성	임신부	수유부	배급 인구	배급 가구수	농민 수
51%	5,396	2,743	22,400	750	745	21,323	5,388	11,455
86%	19,262	16,635	86,968	1,858	1,806	141,291	35,106	13,910
42%	3,953	1,645	15,675	536	527	12,489	3,122	10,264
52%	4,707	2,465	19,632	548	543	19,597	4,926	10,694
42%	5,907	2,455	23,158	768	764	18,345	4,446	13,660
40%	4,608	1,847	21,210	707	698	16,209	4,056	13,331
43%	7,286	3,163	30,498	995	988	25,413	6,559	17,914

<표 II-17B> 국제기구의 수집통계 예시
 - 2001년 현재 郡별 사회통계(개성시의 경우)

	단위	전체	개성	개풍	판문	장풍
인구	명	356,337	139,153	78,952	69,700	68,532
농가인구	명	137,419	10,959	45,903	40,809	39,748
(60세 이상)	명	37,751	15,271	8,241	7,676	6,563
배급소	개	52	17	13	11	11
배급인구	명	218,918	128,194	33,049	28,891	28,784
배급가구	가구수	55,021	32,149	8,313	7,187	7,372
의료기관	개	139	47	32	30	30
병원	개	67	9	20	19	19
(중앙, 도)	개	7	7	-	-	-
(시, 군)	개	3	-	1	1	1
(리)	개	57	2	19	18	18
보건소	개	62	34	10	9	9
의료인력	명	3,438	2,013	498	492	435
병원	명	2,190	1,000	426	411	353
(중앙, 도)	명	947	947	-	-	-
(시, 군)	명	629	-	219	213	197
(리)	명	614	53	207	198	156
보건소	명	788	667	33	36	52
병상 수	개	5,726	3,228	695	779	1,024
병원	개	4,007	2,244	450	534	779
(중앙, 도)	개	2,226	2,226	-	-	-
(시, 군)	개	1,147	-	301	394	452
(리)	개	634	18	149	140	327
보건소	개	-	-	-	-	-
유아원	개	625	101	149	148	227
(어린이 수)	명	28,255	8,767	6,671	5,995	6,822
유치원	개	215	53	45	38	79
(어린이 수)	명	12,375	4,049	2,895	2,542	2,889
초등학교	개	79	16	22	19	22
(학생 수)	명	25,796	8,533	5,931	5,194	6,138
중학교	개	79	21	20	19	19
(학생 수)	명	35,692	13,633	7,769	6,973	7,317

출처: Hazel Smith, "Next Steps on Knowledge Sharing: Developing a Strategy for Reviewing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Paper written for KIEP/Stamley Foundation Seoul, Nov. 2007.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통계의 가용성 - 총괄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과거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통계의 비밀성과 이에 따른 북한통계의 비가용성(unavailability)의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아니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미 북한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상당히 내밀한 내부 통계들을 외부세계에 제출하여 왔고, 이러한 통계의 제출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면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외부세계로 넘어 온 북한통계의 양과 규모가 무시 못할 정도로 확대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외부세계가 북한통계를 구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부세계로 넘어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북한통계를 개별적인 연구자나 기관이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가능성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표 II-18>이다. 만일 <표 II-18>의 제목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그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나라의 기초적인 경제현황을 보여주는 그저 평범한 표처럼만 보일 것이다. 그런데 과거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평범한 표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얼마이고, 1인당 GDP는 얼마이며, 상품 수출입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따른 무역수지의 변화는 어떤지에 대한 북한의 공식통계가 적어도 외부세계의 입장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5년 발표된 UNICEF의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에는 이러한 표가 매우 자연스럽게 첨부되어 있다. 이는 그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많은 북한의 통계자료들이 실제로는 현재 외부세계에 넘어와 있으며,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북한 이외의 다른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북한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II-18> 국제기구의 조사과정에서 획득된 북한통계
- UNICEF(2006)의 경우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증가율(%)	-2.2	0.5	0.1	3.2	3.9	3.2	7.7	4.0
1인당 GDP(달러)	464	458	454	464	478	490	524	546
상품수출(백만 달러)	914	858	859	877	885	908	920	948
상품수입(백만 달러)	1,038	917	918	933	939	988	1,008	1,029
무역적자(백만 달러)	124	59	59	56	54	80	88	81

원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통계국

출처: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물론 여기에서 소개한 북한의 통계자료만으로 현재 외부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통계가 충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넌센스(nonsense)일 것이다. 여전히 북한은 통계에 관한 한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고립되어 있는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많은 북한연구자들이 단순히 북한의 통계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계 없는 북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거나, 주위에 흔히 널려 있는 북한에 대한 외부 추정치들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고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북한을 심각하게 연구하는 연구자라면 자신들이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 적어도 1990년대 이후의 북한통계가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한번쯤은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북한통계만으로도 이러한 논점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I
II
III
IV
V

III

북한통계의 특징과 문제점



우리는 이제까지 북한통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수집되고 생산되며, 이렇게 수집되고 생산된 북한통계 가운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북한통계는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다수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전문적인 북한연구자를 포함한 외부세계의 구성원 상당수는 북한통계가 신뢰할 수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²³ 실제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가 과거 외부세계에 공표한 통계자료 대부분은 그 신뢰성을 둘러싼

²³ -북한통계의 신뢰성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견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상훈(정상훈, “북한경제연구: 일련의 방법적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제5권 2호 (1989년 가을))은 북한통계가 비록 과장의 유인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조작된 것은 아니며 특히 산출량의 절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실물통계의 경우 그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에버스타트와 바니스터(N.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Korea Research Book, 1992.)의 연구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Development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the DPRK Economy: Empirical Indication,” Lau, L J and Yoon, C H (Ed). *North Korea in Transition: Development Potential and Social Infrastructur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는 북한통계가 책상 위에서 고의로 조작된 허구와 같은 숫자들로 채워져 있으며, 만일 그 통계들이 허구의 숫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북한의 통계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붕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석(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rwick, 2003)은 북한통계가 시기별로 과장 및 조작의 요인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으나,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북한통계를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과장 및 조작의 요인을 인정한 채 북한통계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북한통계는 그 신뢰성 면에서 외부세계의 추정치 보다 못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들은 아직 정리된 형태의 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세련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통계의 신뢰성 여부와 관련해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직도 외부세계의 상당수는 북한통계를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공표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통계 그 이면에 있는 보다 진실된 현실을 다른 방법으로 읽어내는 것이었다.²⁴ 그런데 북한통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외부세계의 경향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과거 사회주의 공표통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부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통계가 많이 존재했으므로 이를 서로 비교 분석하여 통계의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북한통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뢰성의 문제를 엄밀하게 제기할 수 있을 만큼 이용 가능한 통계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북한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아마도 그것은 외부에 공표된 북한통계 그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징 또는 문제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한통계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이들 북한통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 또는 문제점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장의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가 될 것이다. ① 1990년대 중반 이전 공표된 북한통계는 그 자체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굳이 신뢰성의 문제를 엄밀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②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공표된 북한통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지 않고서는, 이를 직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²⁴- 예를 들어, 소비에트 통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서구의 학자들의 수정작업을 간단히 예시하고 있는 R. W. Davies, M. Harrison and S. G. Wheatcroft,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1913-1945*의 제2장을 참고.

1. 통계적 정의

이제까지 공표된 북한통계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의문들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아마도 통계적 정의(definition)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북한이 공표한 통계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해 온 만큼 이로부터 생산되는 통계의 정의는 시장경제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경제의 총산출량 또는 국민소득인 ‘사회적총생산’은 시장경제의 GDP나 GNI와 매우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총산출량 통계를 GDP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적 수정이 필요하다.²⁵ 그러나 여기에서 제기하는 북한통계의 정의 문제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

이제까지 북한은 자국의 곡물생산량을 ‘알곡’생산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하였다. 물론 북한의 알곡은 사전적으로 우리의 곡물에 정확히 해당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1946~1961년까지 발표된 북한의 알곡생산 통계에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감자와 고구마 같은 저류는 물론 채소와 같은 기타 작물의 통계가 알곡과는 분리되어 따로 집계되고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은 북한에서 알곡생산에 감자와 같은 저류를 알곡으로 환산하여 포함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저류 또는 채소를 알곡으로 환산하여 포함시킨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지도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북한에서 1960년대 초반부터 제도화된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61년 북한정부가 반포한 내각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²⁶

²⁵- 이와 관련해서는 이 글의 제4장 1절을 참고.

제2조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영예칭호의 종류와 수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모가 큰 농업협동조합으로서 알곡 판매량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도달하였을 때

영 예	칭호별	알곡총판매량(톤)
계 관	근위	7,000
근 위	1급	5,000
근 위	2급	4,000
선 봉	1급	3,000
선 봉	2급	2,000
붉은기		1,000

* 알곡판매량에는 수매한 저류를 알곡으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2. 규모가 작은 농업협동조합으로서 호당 평균 알곡 판매량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도달하였을 때

영 예	칭호별	호당평균알곡판매량(톤)
계 관	근위	12.0
근 위	1급	10.0
근 위	2급	9.0
선 봉	1급	8.0
선 봉	2급	7.0
붉은기		6.0

* 국가에 수매한 저류, 채소에 대하여서는 알곡으로 환산하여 알곡판매량에 포함시킨다(강조는 인용자).

1960년대 초반 북한에서는 저류와 채소를 알곡으로 환산하여 그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이를 포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1960년대 이후 북한이 발표한 알곡생산량 통계는 이

²⁶- 내각결정 제116호, 국가에 더 많은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판매한 농업협동조합 및 시 군(구역)에 대한 영예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 1961년 7월 20일.

리한 저류와 채소를 알곡으로 환산하여 그 속에 포함시켰을까? 아마도 감자와 고구마 같은 저류는 그 속에 포함된 것이 확실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의 한 연구자가 북한 농업위원회의 고위관료에게 문의한 결과 그가 이를 시인했기 때문이다.²⁷ 그렇다면 채소는 어떤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북한이 1970년대를 전후하여 채소 역시 알곡으로 환산하여 알곡생산 통계에 포함시켰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이 기간을 전후하여 북한의 곡물생산이 연간 20% 이상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북한의 통계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국제기구 등에 제출한 알곡생산 통계는 1961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곡물생산만을 집계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시기적으로 매우 다른 북한 알곡통계의 정의를 만난다. 1945~1961년까지는 일반적인 곡물, 그리고 1960년대 초반 이후에는 곡물에 저류를 포함했지만 채소 역시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한 어떤 것,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 일반적인 곡물이 그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곡물생산 통계는 시기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졌지만, 우리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그 정의가 달라졌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의 곡물통계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점일 것이다.

한편, <표 III-1>은 1989년 북한이 UNFPA에 제출한 공민등록자료상의 인구통계와 1961년 발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에 수록된 인구통계를 각각 비교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UNFPA에 인구통계를 제출하면서 이 통계가 북한의 軍 인구와 같은

²⁷- 히라타 유타로, “북한농업실상과 농업통계의 제문제,” 제4회 북한농업기반 국제세미나 자료집 (수원: 농업진흥청, 1998.11).



특수인구는 포함하지 않은 민간인구(civilian population)라는 사실을 북한을 방문한 미국학자에게 밝혔다.²⁸ 그런데 이렇게 제출된 인구통계 가운데 1946~1960년의 통계는 1961년 발간된 『인민경제발전통계집』에 수록된 북한의 총인구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1945~1960년 북한의 인구통계 역시 軍 인구와 같은 특수인구를 포함하지 않은 민간인구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군대가 창설된 연도와 1940년대 당시 북한의 통계 수준 및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의 통계당국이 軍 인구와 민간인구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수집 정리할 만큼 역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통계가 軍 인구를 포함하지 않은 민간인구라는 북한당국의 설명은 잘못된 것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남녀성비를 살펴보자. 북한의 남녀성비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남성인구의 손실이 많았던 1953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95% 수준에서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1970년을 기점으로 이 비율은 급격히 떨어져 1987년에는 84.2%까지 하락한다. 1970년대 이후 북한에 남성인구의 손실만을 집중적으로 초래한 인구충격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성비는 단 한가지 요인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즉 남성인구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軍의 인구규모를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UNFPA에 제출한 인구통계는 1970년까지는 軍 인구를 포함한 총인구를, 그리고 이후에는 軍 인구를 제외한 민간인구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⁹ 이렇게 보면 북한이 발표한 인구통계는 1970년대를 전후한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그 정의가 바뀌었다

²⁸- N. Eberstadt and Judith Ban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²⁹- 이러한 이유에서 1989년 UNFPA에 제출된 인구통계를 분석한 Eberstadt와 Banister(*Ibid*) 역시 1970년 이후 북한의 인구통계에 한해 군 인구를 제외한 민간인구로 해석하고 있다.

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과연 어느 정도나 정확할까?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남성인구 손실을 집중적으로 가져왔던 인구총격이 과연 존재하지 않은 것일까? 1970년대 이전의 인구총계는 과연 軍 인구를 포함한 총인구를 나타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솔직히 이러한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인구통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 아마도 정답일 것이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인구통계는 이러한 통계 정의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분명하다는 점이다. 즉 1993년 이후 북한당국은 그들의 인구규모를 말하면서 우선 軍 인구를 제외한 민간인구 규모를 제시하고, 이후 軍 인구를 포함한 총인구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북한통계는 조금만 꼼꼼히 뜯어보면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만드는 통계 정의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의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어진 북한통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I

II

III

IV

V

<표 III-1> 1989년 북한의 UNFPA 제출 인구통계와
1961년 『인민경제발전통계집』의 인구통계 비교

	UNFPA 제출 인구통계				『인민경제발전통계집』
	총인구	남성	여성	성비	총인구
1946	9,257	4,629	4,628	100	9,257
1949	9,622	4,782	4,840	98.8	9,622
1953	8,491	3,982	4,509	88.3	8,491
1956	9,359	4,474	4,885	91.6	9,359
1960	10,789	5,222	5,567	93.8	10,789
1965	12,408	6,067	6,341	95.7	-
1970	14,619	7,127	7,492	95.1	-
1975	15,986	7,433	8,553	86.9	-
1980	17,298	8,009	9,289	86.2	-
1982	17,774	8,194	9,580	85.5	-
1985	18,792	8,607	10,185	84.5	-
1986	19,060	8,710	10,350	84.2	-
1987	19,346	8,841	10,505	84.2	-

출처: 1. UNFPA제출: N. Eberstadt and Judith Ban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Korea Research Book, 1992).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중앙통계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2. 통계의 과장 또는 왜곡

공표된 북한통계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의문은 이른바 통계의 과장(exaggeration) 또는 왜곡(distortion)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편의상 통계의 과장 또는 왜곡의 문제와 통계의 의도적 조작(intentional manipulation)을 개념적으로 분리하기로 한다. 물론 두 가지 모두는 작성 또는 공표된 통계가 현실을 뒤틀리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후자(조작)는 통계당국이 가지고 있는 수치 자체

를 책상 위에서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자는 이러한 수치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북한의 철강생산이 1945년 100톤 그리고 1946년 120톤이었지만, 1947년에는 철강 원자재의 수입감소로 50톤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북한의 통계당국은 1945년이 북한이 독립한 연도이므로 이 해의 생산액을 100으로 하여 1946년에는 철강생산이 120으로 증가했다는 지수 통계를 발표했지만, 1947년에는 생산액의 감소를 감추기 위해 아예 지수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1948년의 생산액이 100톤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북한의 통계당국이 철강생산 통계의 기본 연도를 갑자기 1945년에서 1947년으로 바꾸어 1948년의 철강생산은 ‘1947년을 100으로 할 때 200’이라는 지수 통계를 발표했다면, 이것은 자국의 철강생산을 부풀리게 보이기 위해 기술적으로 통계발표를 왜곡하려 시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1948년 철강생산액 100톤이라는 수치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의 통계당국이 1948년 철강생산액 100톤이라는 수치 자체를 아예 200톤으로 바꾸어, ‘1945년을 100으로 할 때 1948년 생산량은 200’이라고 발표했다면, 이것은 통계당국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조작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통계에서 과장·왜곡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집과정에서 생산자가 통계당국을 대상으로 현실의 생산액을 부풀리거나 줄여서 보고함으로써 통계당국이 가지고 있는 수치 자체가 과장·왜곡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계당국이 가지고 있는 수치의 발표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외부세계로 하여금 그 통계가 부풀려지거나 줄여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통계의 경우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또한 구조적으

I
II
III
IV
V

로 나타났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먼저 통계 수집과정상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미 언급했지만, 사회주의 경제는 중앙계획자(상급자)가 생산자(하급자)에게 생산목표를 명령하고, 이의 실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유지되는 체제이다. 만일 생산자가 생산목표를 초과하면 보너스나 승진, 정치적 지위 상승과 같은 보상을 실시하고, 생산목표에 미달하면 감봉이나 강등, 심지어는 정치적 문책까지 묻는 징벌을 내린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당연히 생산자(하급자)는 실제의 생산액을 부풀려 보고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것이 자신의 보너스나 승진, 정치적 지위와 같은 이익에 더욱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와 설비 같은 시설은 줄여서 보고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자신에게 하달되는 생산목표가 더욱 줄어들거나, 중앙에서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물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자신이 생산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공과가 더욱 크게 평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는 자신의 상급자에게 항상 실제보다 통계를 부풀리거나 줄여서 보고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또한 이를 보고받는 중간 관리자 역시 생산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통계를 최종적으로 보고받는 중앙계획자나 통계기관은 이처럼 왜곡된 통계를 보고받을 경우 경제 전체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을 언제나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중앙의 계획자나 통계기관이 전국에 산재한 생산자들의 보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통계가 유통될 경우, 그것은 곧바로 시장의 징벌을 받기 때문에 — 예를 들어 주가의 폭락이나 파산, 경영진의 해임 등 — 사회주의 경제에서보다도 통계 왜곡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과거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아래로부터 수집되어 보고된 통계의 왜곡문제가 매우 심각했다.³⁰ 이들 사회주의 경제의 전문 통계기구가 주기적으로 센서스적인 방법을 원용하여 경제 실사에 나선 것 역시 이러한 통계 왜곡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문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경우 배급제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전문 통계기구에 의한 경제 실사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여타 사회주의 경제에서조차 수집되는 통계의 왜곡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왜곡이 그 경제의 특성상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의 김일성은 자국의 통계수집 현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³¹

통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통계사업에서 거짓보고하는 현상을 없애야합니다. 지금 일부 기관, 기업소들에서 거짓통계보고를 내는 현상이 있습니다. 농촌경리부문과 수산부문에서 거짓통계보고를 내는 현상이 적지 않으며 건설부문, 채취공업부문에서도 거짓통계보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년간 수산부문에서 해마다 50만~60만톤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실지로 근로자들에게 차례진 물고기는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잡은 물고기를 좀 썩었다고 하더라도 인민들에게 차례진 물고기가 많지 못한것을 보면 물고기생산 통계를 과장하여 낸것으로밖에는 볼수없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알곡과 남새, 과일

³⁰- 사회주의 경제에서 수집되는 통계가 현실로부터 얼마나 유리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950년대 말 중국의 곡물통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중국경제는 모택동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캠페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관리들을 중심으로 곡물생산을 부풀려 보고하는 통계 과장의 광풍(wind of exaggeration)이 불었고, 이것이 1959~1961년 중국의 대기근으로 이어지는 한 가지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Gene Hsin Chang and Guanzhong James Wen, "Communal Dining and the Chinese Famine of 1958~1961,"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6(1) (October 1997)을 참고.

³¹- 김일성, "사회주의 통계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 저작집 제24권』 (평양: 외국문출판사, 1969), pp. 206~215.

생산에 대한 통계보고에 거짓이 많습니다. 과일 같은것은 적게 생산하고도 많이 생산한 것으로 보고하는가 하면 과일을 씹인데 대한 책임추궁이 두려워 많이 생산해놓고도 적게 생산한 것으로 보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알곡생산량을 과장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알곡 생산통계를 보면 내각사무국이 내는 통계와 국가계획위원회가 내는 통계가 다르고 도농촌경리위원회가 내는 통계가 또 다릅니다.

북한의 경우 각 통계기구가 수집한 통계가 그 수집과정에서부터 부풀려져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통계를 각 쩌을 비롯한 중앙통계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비록 북한의 통계당국이 스스로 수집한 통계를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외부세계에 공표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북한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렇게 왜곡되게 수집된 통계 자체도 중앙의 통계당국이 외부세계를 대상으로 더욱 부풀려 보이거나 줄여 보이도록 기술적으로 형태를 변형시켜 발표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한데, 바로 사회주의 경제가 발표하는 통계는 해당 사회주의 경제의 성공 또는 위대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표형태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지수 통계의 이용이며, 다른 하나는 통계적 정의의 변경이고, 마지막 하나는 기준(연도)의 변화이다.

우선 지수 통계는 그 자체가 외부적으로 통계를 부풀리거나 줄여서 보여지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거셴크론 효과(Gerschenkron Effect)’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와 같이 (중)공업에 의한 급속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에 있어 (총)산출량을 지수로 표현하는 경우 그 지수의 성장률이 실제의 성장률을 체계적으로 과장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² 이러한 경제에서는 (중)공업

및 농업생산품 가격의 변화가 산출량의 증가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적 수량 통계가 아닌 지수 통계로 발표되는 사회주의 통계의 경우 그 형태 자체로 인해 통계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경우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지수 통계를 가장 많이 활용해 온 나라라는 점이다. 실제로 1990년대 이전의 주요 북한통계 대다수는 지수 통계의 형태로 발표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통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는 매우 의문스럽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앞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발표되는 통계의 정의가 빈번히 변화하였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정의의 변화는 공표되는 자국의 통계를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공표되는(지수)통계의 기준(연도) 역시 빈번히 변화시켰다. 제2장에서 제시한 196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이 발표한 여러 통계수치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통계를, 특히 그것도 통계의 장기적 시계열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마도 북한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지름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북한은 통계의 과장 또는 왜곡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존재했던 그 어느 사회주의 경제에서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의 과장 또는 왜곡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의 통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통계 수집과정

³²- R. W. Davies, M. Harrison and S. G. Wheatcroft,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1913-1945*, p. 32.



상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이은 경제피폐로 대부분의 정상적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된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크게 두 가지의 조치를 실시했는데, 하나는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지방 정부 또는 생산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생산자가 국가의 목표를 초과해 생산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생산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³³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산자나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실제 생산을 중앙에 부풀려 보고할 유인이 크게 약화되거나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중앙으로의 자원 유출을 촉발해 스스로가 처분할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통계수집 과정에서 왜곡요인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중앙의 통계당국 역시 자국의 통계를 기술적으로 과장하여 외부세계에 공표할 유인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식량 및 경제 원조를 획득하는 일이 경제의 제일 우선순위인 상황에서는 자국의 통계를 부풀려 공표하는 것이 득 될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국의 통계를 외부에 과소하게 줄여 발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기구를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북한을 방문해 현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자국 통계의 왜곡이 드러날 경우, 이는 북한의 대외교섭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통계당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수 통계와 같이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통계의 형태는 전혀 발표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춘 물리적

33-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의 제2장을 참고.

수량 통계만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통계의 과장 또는 왜곡의 문제를 이야기 할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의 북한통계는 그 이전 통계와는 매우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3.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

현재까지 공표된 북한통계의 특징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만 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른바 통계의 수정(correction) 또는 (재)확정(revision)과 관련된 것이다.³⁴ 이러한 문제는 이제까지 발표된 북한통계의 상당 부분이 서로 모순되거나 정합적이지 않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앞의 제2장에서 1963년과 1974년 사이 북한의 곡물생산량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승준(1998)의 저술을 인용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974년 북한의 곡물생산은 700만 톤을 상회하며, 이는 1963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언급은 1970년대 간행된 북한의 『조선중앙년감』 속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³⁵ 따라서 이러한 수치가 옳다면 1963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약 350만 톤 내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1963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곡물생산은 이미 ‘1962년 500만 톤 생산고지를 점령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초반 북한의 통계당국 역시 1963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최고 520만 톤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³⁶ 이렇게 보면 1970년대 북한당국이 말하고 있는 1963년의 생산량

34- 이 절의 내용은 Lee Suk, “Reliability and Usability of DPRK Stat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을 크게 참고한 것이다.

3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5, 1976).

36-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p. 48.

I
II
III
IV
V

350만 톤은 1960년대 초반에 발표한 같은 해의 생산량 520만 톤 내외와는 전혀 맞지를 않는다. 이처럼 한 해의 생산량을 두고 최대 170만 톤이나 차이가 나는 두 가지 수치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두 가지 수치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통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처럼 북한의 통계당국은 이제까지 서로 모순되는 수많은 통계자료들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북한 공표통계 내부의 비정합성으로 인해 북한통계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의 통계당국은, 비록 외부적으로 발표된 통계에는 서로 모순이 있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에는 서로 모순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과 같이 고도로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통계당국이 내부적으로 모순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전체 계획이 혼란에 빠져 실패를 거듭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통계당국이 이제까지 서로 모순되는 여러 통계를 발표했다는 사실은 두 가지의 가능성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는 북한의 통계당국이 외부로 발표하는 통계를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통계당국이 이전에 작성하였거나 발표한 통계들을 이후 (주기적으로) 재점검하여 그것을 수정하거나 (재)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두 번째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과연 북한의 통계당국이 이제까지 생산되고 공표된 여러 공식통계를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재)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흥미롭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

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과 관련하여 외부세계에 알려진 실제의 사례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경제의 경우 국가의 공식통계는 비단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가 해당 사회주의 경제가 표방하는 공식적인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통계가 국가의 기존 정책과 상반되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내부적 권력투쟁 또는 정치투쟁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성립 초기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당시 발표된 북한의 곡물통계와 관련하여 더욱 그러했다. 실제로 1950년대 초반 북한의 곡물통계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³⁷ 예를 들어, 1954년 11월 북한당국은 한국전쟁 전후의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곡물수매 캠페인에 나서는데, 이러한 캠페인은 농민들의 저항과 농촌지역에서의 소규모 기근현상으로 인해 곧바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5년 초반 공산당의 명령으로 이러한 캠페인은 중단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농업정책 전반을 두고 이 해 말까지 공산당 내부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긴장이 초래되었다. 문제는 당시 북한의 농업이 토지를 소유한 소규모 자작농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대한 국가의 곡물수매는 현물세와 농민들에 의한 자발적(?) 수매라는 두 가지 채널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들 채널을 통한 실질적 곡물의 수매량은 그 해 곡물의 생산량, 더욱 정확히 말하면 그 해의 곡물생산에 대한 국가의 통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50년대 초반 북한에서 벌어

³⁷- 이에 대해서는 Lee Suk, *Food Shortage and Economic Institution in the DPRK*, Ph.D. Dissertation, pp. 92~103을 참조.

I
II
III
IV
V

진 농촌지역에서의 곡물수매 캠페인과 그에 이은 당내에서의 정치적 갈등은 모두 1950년대 초반 북한의 공식적 곡물생산량 통계를 확정하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7년 북한의 통계당국은 기존에 발표한 모든 곡물생산량 통계를 수정하여 (재)확정한 새로운 통계를 발표하게 된다.³⁸ 우리가 『조선중앙년감』 등을 통해 알고 있는 북한의 곡물통계는 바로 이처럼 수정되고 (재)확정된 통계이다. 이러한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그것은 북한의 경우 이미 1950년대부터 국가의 통계를 수정하고 (재)확정하는 문제가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졌으며, 또한 실제로 그러한 수정과 (재)확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표 III-2> 1957년 북한 곡물생산량 통계의 수정

(단위: 1,000 MT)

	1954년 10월 통계	1957년 2월 수정통계
1946	1,998	1,898
1947	2,178	2,069
1948	2,809	2,668
1949	2,795	2,654
1950	-	-
1951	2,601	2,260
1952	2,939	2,450
1953	3,288	2,327
1954	-	2,230
1955	-	2,340
1956	-	2,873

출처: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³⁸ - 북한 곡물통계의 수정과정에 대해서는 서동만, “50년대 북한의 곡물 생산량 통계에 관한 연구,” 『월간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1996.2)를 참고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이 1950년대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앞서 북한통계의 과장과 왜곡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1970년대의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각종 통계가 그 수집과 생산과정에서 부풀려지고 거짓 보고되는 사실’을 질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북한의 통계가 수집과 작성과정에서 부풀려지고 거짓 보고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북한의 통계당국이 기존에 수집되고 생산된 여러 통계들에 대한 재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재점검을 토대로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 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1950년대 이후의 북한에서도 꾸준히 기존 통계에 대한 수정과 (재)확정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이러한 개연성은 북한의 통계수집과 작성에 대한 절차를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앞 장에서의 북한 인구통계 수집 및 작성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지듯이 북한의 통계체제는 단일한 통계를 복수의 기관이 중복하여 수집·작성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수집 및 작성기관의 차이에 따라 통계의 내용 자체가 달라질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는 북한의 경우 공식통계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다양한 수집·작성기관에서 만들어진 여러 통계들을 누군가가 재점검하여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표된 북한통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공식통계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정과 (재)확정이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통계들은 과연 북한당국이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재)확정한 통계일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I
II
III
IV
V

가 알고 있는 공표된 북한의 통계를 무작정 북한의 공식통계라고 가정하고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1963년의 곡물생산량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만일 1960년대 초반 북한당국은 이 해의 곡물생산량을 520만 톤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그 통계에 대한 재점검을 거쳐 그 수치를 350만 톤이라고 수정하여 확정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후 『조선중앙년감』이나 북한의 저술에서 1974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700만 톤이 넘고, 이는 1963년 생산량의 2배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이 경우 1960년대 초반 북한당국이 발표한 이 해 생산량 520만 톤이라는 수치는 더 이상 북한의 공식통계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세계가 가지고 있는 1963년의 북한 곡물생산량 통계는 520만 톤이라는 수치일 뿐이고, 이후 이 수치가 북한의 통계당국에 의해 수정되고 (재)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다. 설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통계가 다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수정과 (재)확정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를 함부로 북한의 공식통계라고 가정해 이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이러한 북한통계의 수정과 (재)확정의 문제를 우회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능한 단일의 통계출처에서 가능한 장기간의 시계열을 갖는 북한통계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60년에 발간된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에서 1945~1960년에 이르는 북한의 곡물생산통계가 모두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다면, 여기에 수록된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북한통계는 이미 수정과 (재)확정을 모두 거친 것이라고 가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통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950년대 말까지의 통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당국은 1960년대 초반까지

자국의 통계를 외부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950년대 말까지의 통계는 1960년대 초반까지 발간된 『조선중앙년감』의 통계부록에 단일의 시계열 형태로 발표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통계가 이미 북한당국의 수정과 (재)확정을 거쳤을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둘째는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의 통계이다. 이들 통계는 그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단일의 시계열 자료로 구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 통계의 경우 북한당국의 수정과 (재)확정을 거쳤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통계이다. 이들 통계 대부분은 외부세계에 제출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측면에서 상당 수가 시계열 자료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계열의 범위는 그 이전 어떤 북한통계보다도 더욱 넓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북한통계를 상호 비교해 보면, 동일 통계간의 발표 시차에 따른 모순 또는 비정합성의 문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통계에 관한 한 여기에서 논의한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더욱 자유롭다는 뜻이다.

4. 통계의 의도적 조작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표된 북한통계의 의도적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제까지 상당수의 북한연구자들은 북한통계가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그것이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물론 과거 소비에트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외부 세계로 발표되는 통계를 조작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빈번했던 것은 아니며, 특히 외부로 공표되는 통계를 체계적으로

I
II
III
IV
V

조작하기 위해 사회주의 통계당국이 일종의 이중장부를 만들었던 경우는 없었다.³⁹ 이렇게 보면, 북한의 공표통계 역시 조작되었을 개연성은 있지만, 그 개연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단은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과 같이 조금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통계가 작성될 경우 아예 외부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의 발표자체를 오랫동안 중단해 온 국가가 무엇 때문에 고의적으로 통계를 조작하여 외부에 발표하려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북한통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대다수의 논거들은 북한의 통계 및 통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앞의 <표 II-12>로 돌아가 보자. 이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북한은 1994년과 1996년 북한의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통계를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표했다. 북한 보건성의 경우 USCDC 북한방문팀을 대상으로 1996년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이 1,000명 당 58이었다고 발표한 데 반해, 북한 외무성은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기구 대표단 등을 상대로 이 수치가 40이라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1996년 북한의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을 1,000명 당 58 또는 40이라고 가정하고 이 해 북한의 (조)사망률을 계산해 보면, 그 수치는 북한당국이 발표한 1,000명 당 6.8이라는 수치를 훨씬 더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당국이 제시한 사망률 통계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조작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한 것이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통계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³⁹-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p. 171.

⁴⁰- Nicholas Eberstadt "Development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the DPRK Economy, Empirical Indications," L. J. Lau and C. H. Yoon, (ed), *North Korea in Transition: Development Potential and Social Infrastructur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과 그의 또 다른 논문 N. Eberstadt, "Our

비롯된 오해이거나, 설사 그것이 옳다고 해도 북한의 통계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되지 못한다. 우선 북한이 발표한 5세 미만 사망률 통계는 5세 미만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출생한 출생자 1,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수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북한의 (조)사망률을 역으로 추정하거나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이 발표한 5세 미만 사망률 통계와 (조)사망률 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북한은 발표기관에 따라 1994년과 1996년의 5세 미만 사망률 통계를 서로 다르게 공표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북한의 통계수집 제도를 상기하면, 이처럼 발표기관에 따라 서로 어긋나는 사망률 통계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북한의 인구통계는 보건성과 인민보안성, 수매양장성 등 각省市 중복해서 수집하는데, 식량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주민들의 사망 보고가 각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접수될 개연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가구에서 사망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일차적으로 목격하는 보건성의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가구주의 신고로만 사망 사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인민보안성이나 수매양장성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식량배급을 의식해 이들 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 신고할 때, 이를 즉시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앞의 사망률 통계가 만들어진 시점이 북한의 식량위기가 극에 달했던 1990년대 중·후반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러한 기관별 사망통계의 집계 차이는

Own Style Statistics: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of Official Quantitative Data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per presented at "Advancing Statistics for the Next Millennium," International Statistical Forum, The ROK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Korean Statistical Society, Taejon, ROK, September 1999를 참고.



매우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사망률을 통계가 인민보안성이나 수매양정성으로부터 유래한 통계라면, 그 수치가 보건성이 파악한 수치보다 낮은 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공표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북한의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일종의 방증 또는 심증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앞의 <표 III-1>로 돌아가 보자.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은 여기에 수록된 인구규모가 軍 인구를 제외한 민간인구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언급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남녀성비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뚜렷이 하락하였다. 만일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 1970년대 이후 공표된 북한의 인구는 민간인구이며 이에 따라 공표된 남녀성비 역시 軍 인구를 제외한 상태에서 계산된 수치라는 사실 — 을 이용해 북한의 軍 인구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軍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대의 비정상적인 남녀성비를 일반적인 인구모델 등을 이용해 추론한 동일 연령대의 이상적인 남녀성비와 서로 비교하면, 군대로 인해 북한의 성비 계산에서 누락된 사라진 인구(missing population)의 규모를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berstadt와 Banister(1992)는 이러한 방법을 원용해 1987년 북한의 軍 인구가 최대 117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⁴¹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북한의 통계당국은 이처럼 과학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軍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⁴¹- N. Eberstadt and Judith Ban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만일 북한의 통계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북한의 최고 기밀사항의 하나인 군대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제반 인구관련 정보를 이처럼 수월하게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의 통계당국이 Eberstadt와 Banister 등의 연구결과를 접한 이후 비로소 이러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1994년 실시한 북한의 1993년 말 현재 인구센서스의 결과보고서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 결과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구규모와 관련해 두 가지의 수치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지역별/연령별/성별 합계인구로서의 총인구 규모였으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지역별/연령별/성별 분류에는 속하지 않는 특수인구(미분류 인구-unallocated population)를 앞의 총인구 규모에 합산하여 산출한 또 다른 총인구 규모였다. 당연히 북한에서의 이러한 특수인구는 주로 軍 인구를 의미할 것이므로 전자의 인구규모는 북한의 민간인구를, 또한 후자의 인구규모는 여기에 軍 인구를 더한 총인구규모로 해석되었다. 문제는 북한이 밝힌 특수인구의 규모가 앞서 Eberstadt와 Banister가 추정한 1987년 북한의 軍 인구 규모에 턱없이 못 미치는 69만 명 정도였다는 사실이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앞서 언급한 남녀성비를 이용한 軍 인구 추출방법을 1993년 북한의 지역별/연령별/성별 인구구조에 원용하여 이 해 북한의 軍 인구를 추정하면, 그 규모는 북한이 제시한 69만 명이라는 수치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1993년 북한의 실제적 남녀성비 구조가 이론적인 인구모델의 남녀성비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출된 軍 인구의 규모가 5년 전 추정된 軍 인구의 규모보다 심각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이 두 가지 모두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① 북한의 통계당국이 ‘민간의 남녀성비를 이용하여 軍 인구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로이 파악하고, ② 이를 이용해 북한의 軍 인구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할 목적으로, ③ 1993년 말 현재 센서스를 통해 얻어진 북한의 연령별/성별 인구규모를 이론적 인구모델에 맞게 책상 위에서 실제의 수치를 재조정(re-shaping)했다는 의구심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통계당국이 실제로 이처럼 통계를 조작했는가, 아니면 이 모두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통계조작 가능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그 개연성에 대한 일종의 방증 또는 심증마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 북한통계의 특징과 문제점 - 1990년 중반 이전과 이후

이제까지 우리는 공표된 북한통계에 대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북한통계의 특징이라는 측면에서 네 가지로 집약해 알아보았다. 북한통계의 통계적 정의와 과장 또는 왜곡의 문제, 그리고 통계의 수정과 의도적 조작의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보면, <표 III-3>에 정리되어 있듯이, 1990년대 이후의 북한통계와 1990년대 이전의 북한통계가 확연히 구분된다. 1990년대 이전의 북한통계는 통계적 정의와 과장 또는 왜곡의 위험 그리고 통계의 수정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 통계들은 별도의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그대로 통계적으로 원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통계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이들 통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 수집과정에서의 과장이나 공표 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역시 그 증거를 별달리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통계의 수정과 그에 따른 최종 시계열의 확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롭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통계를 어떤 과학적 논증 없이 그냥 과거의 북한통계 경험만을 가지고 신뢰할 수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들 중 어떤 것은 북한 통계당국에 의한 과학적 조작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에 대한 신뢰성을 별도의 방법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표적 공표통계들을 추출해 이들의 신뢰성을 각 통계의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보다 더 자세하게 검증해 보도록 한다.

<표 III-3> 북한통계의 특징과 문제점
- 19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의 비교

	1990년대 중반 이전	1990년대 중반 이후
통계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정의와 다름 가능성 충분 • 빈번한 통계적 정의의 변경 가능성 • 통계의 정의에 대한 정보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 • 빈번한 통계적 정의의 변경 없음.
통계의 과장/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수집상의 과장/왜곡 요인 충분 • 통계 발표상의 과장/왜곡 요인 충분 • 과장/왜곡의 정도에 대한 정보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수집상의 과장/왜곡 요인 상대적으로 적음. • 통계 발표상의 과장/왜곡 요인 상대적으로 적음.
통계의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번한 통계의 수정 가능성 충분 • 이용 가능한 시계열의 한계로 통계의 수정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의 수정 가능성 크지 않음. • 이용 가능한 시계열이 충분히 커서 통계의 수정에 대한 확인 가능
통계의 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의 (결정적) 증거는 불충분 • 조작의 개연성은 부인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의 (결정적) 증거는 불충분 • 조작의 개연성은 부인할 수 없음.

I
II
III
IV
V

IV

주요 북한통계의 신뢰성 검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의 통계들은 그 이전 통계에서 발견되던 통계적 결함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들 통계들은 현재의 북한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통계들이 그 이전의 북한통계에서 보여지던 통계적 결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작정 이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1990년 이후 외부세계에 발표된 북한통계 가운데 잠재적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세 가지를 골라 이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수행한다. 이들 세 가지 통계는 북한의 GDP통계와 무역통계 그리고 인구통계를 말한다. 또한 우리는 이들 북한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들 각 변수와 외부 추정통계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동시에 수행한다. 현실적으로 북한 연구자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통계가 바로 이들 외부 추정통계인데, 이들과 북한의 공식통계 사이에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 때때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토대로 이 장의 말미에서는 현재의 북한을 분석하기 위해 과연 북한의 공식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이에 대한 외부 추정치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1. 북한 GDP통계의 신뢰성 검증

북한 GDP통계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마도 그것과 그에 대한 외부의 추정치들을 서로 비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만일 북한의 공식 GDP통계와 이에 대한 외부의 추정치가 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굳이 별도의 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하지 않더라도, 북한

I
II
III
IV
V

통계가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GDP에 대한 외부의 추정치가 공식통계와는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북한 공식통계가 이에 대한 외부의 추정치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사정은 매우 달라진다. 이 경우 양자는 왜 다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는 곧바로 북한 공식통계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반드시 북한의 공식통계가 신뢰성이 없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외부의 추정치 역시 그 추정 방법상의 어려움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북한의 공식통계 및 그에 대한 외부추정치 모두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방법을 동원하여 양자의 신뢰성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북한 GDP통계의 신뢰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증한다. 우선 우리는 북한의 공식 GDP통계와 그에 대한 외부의 추정치들을 소개하고, 양자를 서로 비교한다. 만일 양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공식통계와 이에 대한 외부 추정치들 모두의 신뢰성 문제를 보다 엄밀히 제기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GDP통계에 관한 한 북한의 공식통계나 외부 추정치들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에 따라 굳이 양자의 신뢰성 문제를 엄밀히 따지고 들어갈 만한 유인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일 양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들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성의 문제를 보다 엄밀히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방법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북한의 공식통계와 이에 대한 외부 추정치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려냄으로써, 우회적으로 북한 공식통

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나름의 답변을 제공하고자 시도한다는 것이다.

가. 북한의 GDP관련 통계

북한의 달러화 표시 GDP 규모와 관련하여 현재 이용 가능한 시계열 통계자료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당연히 북한의 공식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UN통계국이 추정하는 시계열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시계열이다. 물론 이 밖에도 과거 미국의 중앙정보국이나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같은 외부기관,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GDP 규모를 추정하려는 시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할 만큼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⁴² 아마도 그 이유는 당시를 기점으로 북한경제가 극심한 위기상황에 진입한 반면, 이와 관련된 경제 데이터의 입수는 더욱 더 어려워짐으로써 많은 연구기관이나 개별 연구자들에게 있어 북한의 GDP 추정작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관심을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 GDP통계에 관한 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통계 자료들이 거의 유일한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럼 먼저 북한의 공식통계에 대해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간 북한당국은 자국의 GDP 규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해오지 않았

⁴²- 물론 미국의 CIA는 아직까지 북한의 GDP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CIA 스스로가 이들 추정치에 부기해 놓은 것처럼, 이들은 매우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일관된 시계열로 보기가 매우 힘들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CIA는 동일 연도 북한의 GDP에 대해 서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치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수치 역시 거의 매년 수정해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연구자가 이들 수치를 일관된 시계열로 재구성해 사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CIA의 추정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세한 CIA 추정치에 대해서는 CIA, *World Factbook*, various years를 참고.

다. 물론 1950년대 말까지 북한당국은 ‘순 물질 생산(Net Material Product)’이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총산출량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GDP 개념과는 잘 맞지 않는다. 이마저도 1960년대 이후에는 거의 발표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현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필요한 여러 기초 통계들을 외부세계에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자국의 GDP 규모에 대한 통계 역시 포함시킨 것이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1998년 UNDP와 공동으로 ‘북한의 농업회복 및 식량회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1992~1996년까지 자국의 북한 달러화 표시 GDP통계를 UNDP에 제출하였다.⁴³ 또한 북한당국은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자국 인권관련 보고서의 통계부록에도 1999~2000년 GDP통계를 삽입하였다.⁴⁴ 이러한 북한당국의 통계제출은 이후에도 이어져 2004년과 2005년 UNICEPF 등 국제기구에 제출된 북한의 각종 보고자료에도 2004년까지의 GDP 통계가 수록되었다. 그 결과 현재 외부세계에서는 1992~2004년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GDP 규모와 그 변화추이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통계는 그 대상기간이 매우 짧은데다, 통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은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부세계의 다양한 북한 GDP 추정치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당국이 공식적인 GDP 규모를 외부세계에 발표하기 시작하면

⁴³- 이에 관해서는 이 글의 <표 II-11A>를 참고.

⁴⁴- 이에 관해서는 이 글의 <표 II-13>을 참고.

서, 최근 UN통계국 역시 이러한 수치를 이용해 북한의 GDP 규모를 자체 추정·발표하고 있다.⁴⁵ 물론 UN통계국은 북한의 GDP 규모를 어떤 방법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추정치가 북한의 공식 발표치를 일정 부분 이용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1996년 이후 북한 GDP에 대한 UN통계국의 추정치는 그 총량 규모면에서 북한의 공식 발표와 매우 흡사하다. 물론 1996년 이전의 추정치는 양자가 총량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GDP의 산업별 구성 비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양자가 거의 일치한다. 이는 UN통계국 추정치가 현재 이용 가능한 북한의 공식발표치를 토대로 이를 일정한 기준이나 가정에 의해 재구성 또는 재추정 한 것임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UN통계국 추정치는 개별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쓰임새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별 연구자들이 북한의 공식 GDP통계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용 가능한 공식통계의 시계열이 너무 짧다는 사실인데, UN통계국 추정치는 이러한 시계열을 확장하는 동시에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공식통계와 일정 정도 흡사한 수치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북한의 공식통계나 UN통계국의 추정치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GDP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⁴⁶ 우선 한국은행은 해당연도

45- UN통계국의 전자데이터베이스 <<http://unstats.un.org/unsd/snaama/Introduction.asp>>를 참고.

46- 그간 한국정부의 북한 GDP 추정작업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왔다. 1960~1970년대 당시의 한국 중앙정보부와 그 이후 1980년대까지의 한국 통일부가 이러한 작업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작업의 주체는 한국은행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한국의 모든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근거해 북한경제를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나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이 북한과 관련된 국제기구는 물론 북한을 연구하는 다양한 해외 연구자들까지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 추정치는 북한연구에 관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초 자료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FAO와 WFP가 매년 북한을 방문하여 작성하고 있는 북한식량상황 보고서

I
II
III
IV
V

의 북한경제 활동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한국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 이들 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주로 북한의 실물생산에 관련된 자료라는 사실만은 공개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한국의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에 삽입하여 북한의 GDP를 추정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상대가격체계와 부가가치율은, 북한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상대가격체계와 부가가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컨대 한국은행은 북한의 생산량 데이터에 한국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곱해 얻어진 부가가치의 총계를 북한의 GDP 규모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북한의 GDP는 당연히 한국의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달러화 GDP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북한 원화의 달러화 환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원화의 달러화 환율이 적용된다.

직관적으로 보면, 이러한 방법이 과연 북한 GDP 규모를 올바르게 추정하는 방법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북한의 모든 경제변수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달러화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경우에는 달러화로 표시된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치 역시 따라서 오르거나 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에서의 직관으로 보면,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한 가지의 커다란 이론적 장점과 또 다른 한 가지의 중요한 정책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이론적 장점은 통계적 정치성이다. 북한의 GDP 추정치가 시장경제의 GDP를 산출하는 기본모형이라 할 수 있는 국민계정체계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여기에 개입되는 데이터의 문제를 차치한다면, 가장 정교하고 바람직한 GDP 추계기법이 이용되는 셈이다. 더

(FAO/WFP,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arious years)에는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은행의 GDP 추정치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육이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북한의 모든 데이터가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한국은행처럼 아예 한국의 상대가격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무작정 비합리적이라고 몰아 부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적 장점이란 북한의 경제규모를 한국의 가격체계로 표시함으로써 향후 남북한의 통합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그 쓰임새가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장점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그간의 북한경제 연구에 있어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초 자료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 온 것이다.

나. 북한 GDP관련 통계들의 상호비교 및 그 결과

<표 IV-1>은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 세 가지 통계는 그 수준에 있어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북한의 GDP 규모에 대해 공식 통계는 약 106억 달러라고 말하는데 반해, 한국은행은 이를 214억 달러라고 추정함으로써 후자가 전자의 두 배를 넘는다. 만일 이 해 북한의 무역규모가 10억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공식통계를 이용하는 경우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10% 정도가 되지만, 한국은행 추정치를 이용하는 경우 5%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UN통계국의 추정치는 북한의 공식통계와 동일한 106억 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양자 역시 1996년 이전의 수치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1996년 이후 양자의 차이는 그 이전만큼 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자가 여전히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I

II

III

IV

V

<표 IV-1> 북한(美 달러표시) GDP 통계, 1990~2004년

(단위: 億 달러, 달러)

	공식통계		한국은행 추정치		UN 추정치	
	GDP	1인당	GNI	1인당	GDP	1인당
1990	-	-	231	1,142	147	735
1991	-	-	229	1,115	136	663
1992	208.8	990	211	1,013	124	593
1993	209.4	991	205	969	107	503
1994	154.2	722	212	992	83	384
1995	128.0	587	223	1,034	48	222
1996	105.9	482	214	989	106	479
1997	-	464	177	811	103	462
1998	-	458	126	573	103	456
1999	102.7	454	158	714	103	452
2000	106.1	464	168	757	106	462
2001	-	478	157	706	110	476
2002	-	490	170	762	109	468
2003	-	524	184	818	111	471
2004	-	546	208	914	112	473

주: UN통계국의 추정치는 그간 여러 차례 변화하였는데, 여기에서는 (2007년 12월 12일 검색한) UN통계국의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추정치를 이용함.

출처: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Geneva, 28~29 May 1998, 통계부록: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한국은행 및 UN(통계국)의 웹사이트

<표 IV-2> 북한의 경제성장률 통계 비교 - 공식통계 vs. 한은추정
(단위: %)

	북한 공식통계	한국은행 추정통계
1996	-2.2	-6.3
1997	0.5	-1.1
1998	0.1	6.2
1999	3.2	1.3
2000	3.9	3.7
2001	3.2	1.2
2002	7.1	1.8
2003	4.0	2.2

출처: <표 IV-1>과 동일

이들 통계 사이의 차이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IV-2>에서 보듯이 실제로 1996~2003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공식통계와 한국은행 추정통계가 매우 다른 수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공식 GDP통계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외부 추정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공식통계가, 비록 UN의 추정치라는 외부의 원군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한국은행의 추정치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공식통계는 과연 신뢰할만한 것일까? 반대로 북한의 공식통계와는 전혀 다른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신뢰할만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본격적으로 대답하기 앞서 우선 <표 IV-1>에 나타나 있는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북한 GDP통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 공식통계에 따르면, 1992년 북한의 GDP는 총량규모로 208억 달러, 그리고 1인당으로 990달러에 달했으나, 이러한 수치는 경제위기가 본격

- I
- II
- III
- IV
- V

화 되기 시작한 1996년의 경우에는 총량규모로 106억 달러, 1인당으로 482달러까지 떨어진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의 경제에서 불과 3~4년 만에 GDP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UN의 추정통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1992년 124억 달러에 달하던 북한의 GDP가 3년 후인 1995년에는 48억 달러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가, 1996년에는 다시 10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그 어떤 객관적인 검증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극단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여타의 모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도와 정책이 동일한 상황에서, 3~4년 만에 한 나라의 GDP가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는 사실이 쉽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중·후반을 전후한 북한의 GDP통계는 직관적으로 그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의 통계와 유사한 UN 추정통계 역시 사정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로 인해 북한의 전체 GDP통계를 무작정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표 IV-1>에 나타나 있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GDP통계는 1인당 460~550달러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다른 여러 나라의 GDP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표 IV-3>은 2000년 현재 아시아의 저개발국 및 (舊)사회주의 국가들의 GDP 수준을 북한과 비교하고 있는데, 북한의 공식통계는 자국의 GDP 규모가 아시아의 다른 저개발국이나 (舊)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비록 과거 북한이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공업화에 성공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의 경제

위기로 이후에는 아시아의 최빈국의 하나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공식통계가 말하는 GDP 수준을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북한 GDP통계는 앞서와 같이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제3장에서 논의했지만, 북한통계의 특징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즉 1990년대 중반 이전 북한통계는 외부에 공표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이 시기에는 북한의 통계당국이 GDP와 같은 통계를 실제로 작성했는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북한통계의 특성상 그 수집과 생산에서 과장과 왜곡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외부의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북한의 통계당국은 외부의 경제지원을 위해 제출해야만 하는 자국의 GDP통계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동일한 이유에서 과거와 같이 자국의 GDP 수준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려는 유인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의 통계당국이 실제로 GDP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고, 그 이전의 GDP통계는 이를 시계열의 형태로 외부에 제출해야만 하는 기술적 필요에 따라 그 이전 시기 만들어진 여타의 총산출량 통계를 단순히 GDP로 환원하여 표기한 것이라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의 GDP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공식통계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즉 북한의 GDP통계는 1990년대 이전 만들어진 과장과 왜곡의 요인이 큰 기존의 통계와 1990년대 중반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GDP통계 사이에 일정한 단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중반 이전 북한의 GDP통계는 직관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GDP통계는 동일한 이유에서 직관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면, UN추정통계에 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것 역시 북한의 공식 GDP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이 경우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납득할 수 없는 북한 GDP통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표 IV-1>에 나타난 것과 같은 수치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한국은행의 추정통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국은행의 추정통계는 북한의 공식통계와는 정반대이다. 우선 한국은행의 추정통계는 1992년 1인당 1,013달러에 달하던 북한의 1인당 GDP가 1995년 1,034달러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1995년 북한에서 대규모 아사자를 동반한 기근현상이 본격화 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북한당국 역시 사상 처음으로 외부세계의 긴급지원을 호소하는 예상치 못한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한 나라의 1인당 GDP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995년을 기점으로 기근현상을 동반한 극심한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해의 북한 GDP가 1992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는 한국은행의 추정통계 또한 직관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 IV-3> 2003년 주요 아시아 저개발국의 1인당 시장환율 GNI

(단위: 달러)

국가	1인당 GNI	국가	1인당 GNI
북한(공식통계)	524	몽고	480
캄보디아	310	네팔	230
인도	540	파키스탄	520
인도네시아	940	우즈베키스탄	420
라오스	350	베트남	470

주: 북한은 GDP, 여타 국가는 GNI 기준

출처: 북한은 <표 IV-1>, 나머지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06, CD-Rom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북한의 GDP관련 통계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직관적인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90년대 중반 이전 북한의 공식 GDP통계는 신뢰할 수 없으며,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UN추정통계 역시 신뢰할 수 없다. 둘째, 그러나 북한의 공식통계와 정반대의 내용을 보이고 있는 한국은행 추정 통계 역시 1990년대 중반 이전 통계에 관한 한 신뢰하기 힘들다. 셋째,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중반 이전 북한 GDP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다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GDP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식통계와 UN추정통계, 그리고 한국은행 추정통계의 신뢰성 여부를 직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통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통해 그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우리는 이하에서, 1990년대 중반 이전 북한의 GDP관련 통계는 모두 신뢰하기 힘들다는 전제 아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통계는 과연 어떠한가를 논의하도록 한다.

I
II
III
IV
V

다. 북한 GDP관련 통계의 신뢰성 검증 방법

그렇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GDP와 관련하여 공식통계와 UN추정통계, 그리고 한국은행의 추정통계는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약간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분석기법을 동원하여 위의 통계들 가운데 보다 더 합리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다 덜 합리적인 것을 찾아내 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위의 통계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GDP 규모를 다시 한번 추정할 것인데, 이는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위의 통계들과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 틀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특정 연도의 북한 GDP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가능치와 최소 가능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그 합리적인 추정의 범위를 구체화한 후, 위의 통계들이 과연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만일 위의 통계들 모두가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분석기법으로써는 이들 통계 가운데 덜 합리적인 것을 판명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반면, 위의 통계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추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통계를 상대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의 분석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의 GDP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 경제의 가계, 기업, 정부 등의 지출 측면에서 GDP를 추정하는 방법,⁴⁷ 둘째는 이른바 실물지표법(Physical Indicator Method)이라고 불리는 방법,⁴⁸ 셋째는 사회주의 경제의 재정/GDP 비율을 이용하

는 방법,⁴⁹ 넷째는 다양한 절대적 기준을 이용하는 방법, 다섯째는 한국 은행과 같이 타 국가의 가격체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은행과 같은 방법은 그 방법 자체가 이 글의 평가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주체들의 지출 측면에서 GDP를 추계하는 방법은 여기에 필요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관련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의 재정/GDP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 역시 일정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방법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재정/GDP 비율을 구한 후, 여기에 사회주의 당국이 발표하는 재정규모를 대입하여 GDP 규모를 역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의 재정/GDP 비율은 경제가 이행기 단계에 진입하면 매우 불안정해지는 특징이 있다. 과거 40~60% 수준에

47- 이러한 방법은 과거 A. 버그슨(Abram Bergson, *The National Income of Soviet Russia Since 192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Abram Bergson, "Comparative Productivity: The USSR, Eastern Europe, and the Wes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No. 3. (1987)이 소비에트의 GDP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북한과 관련해서도 Gotto and Niwa(Niwa Haruki and Fuji Goto, "Estimates of the North Korean Gross Domestic Product Account 1956~1959," *Asian Economic Journal*, March 1989)가 유사한 방법으로 GDP 추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

48- 예를 들어, 이러한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 북한에 대한 적용은 Eva Ehrlich, "Economic Development, Levels, Proportions, and Structures," Working Pap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World Economy,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May 1985; Gitanjali Joglekar and Andrew Zimbalist, "Dollar GDP per Capita in Cub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3. 1989; John R. Moroney, "Energy Consumption, Capital and Real Output: A Comparison of Market and Planned Econom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4. (1990) 그리고 전홍택, "실물지표에 의한 북한의 GNP 추정," 『한국개발연구』 제14권 1호 (1992) 등을 참조.

49- 예를 들어, Paul Marer, *Dollar GNPs of the USSR and Eastern Europe. Baltimore: A World Bank Public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를 참조.

I
II
III
IV
V

달하던 동유럽 사회주의 경제의 재정/GDP 비율이 일단 이행기 경제로 접어들자 최저 10%대로 급락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따라서 만일 북한에서 현재 시장이 급팽창하는 등 이행기 경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의 재정/GDP 비율을 토대로 북한의 GDP를 추정하는 일은 그 근거가 매우 모호해 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절대적 기준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GDP 추정방법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추정결과를 보다 직관적인 차원에서 평가하는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북한의 GDP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이른바 실물지표를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나머지 모든 방법을 제외하고 실물지표법을 이용하여 북한의 GDP 규모를 추정하기로 한다.

라. 실물지표법에 의한 북한 GDP 추정

그럼 실물지표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어떤 경제에서건 GDP의 수준에 따라 밀접히 변화하는 경제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경제주체의 식량 또는 칼로리 소비량은 1인당 GDP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유아사망률이나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은 1인당 GDP가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실물지표법이란 이처럼 GDP 규모와 밀접한 여러 지표들을 추출하여, 이들과 GDP간의 경험적 상관관계를 계량모형으로 추정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GDP를 추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의 1인당 GDP 규모와 칼로리 소비량의 관계가 “1인당 GDP = 0.5 + 0.2 × 칼로리 소비량”이라는 관계식으로 추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가 특정 국가의 칼로리 소비량을 알고 있다면, 이를 위의 관계식에

대입하여 그 국가의 1인당 GDP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1) 추정방법

이러한 방법은 북한의 달러화 표시 GDP를 추정하는 데 있어 나타나 는 두 가지의 커다란 어려움, 즉 ① 우리가 북한의 상대가격체제와 부가 가치율을 모른다는 어려움, ② 또한 북한 원화의 정확한 시장환율 역시 모른다는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 GDP 규모 추정을 위한 실물지표의 관계식을 ‘세계 각국의 달러화 표시 GDP 규모와 각 실물지표와의 관계식’이라는 형태로 도출하면 굳이 북한의 상대가격체제나 부가가치율, 시장환율 등을 알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1인당 GDP를 추정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법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첫째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북한의 실물지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GDP통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칼로리 소비량에 대한 통계 자료가 심한 경우 서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면, 이를 이용해 북한의 GDP를 추정할 경우 그 역시 커다란 오차를 보이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할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아직 사회주의 또는 이행기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기초한 세계 각국의 GDP와 실물지표와의 관계식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해 북한 GDP를 추정하는 방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가 의문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저개발 경제라는 점이다. 직관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실물지표와 GDP의 관계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군과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군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을 하나로 모두 뭉뚱그려 양자간의 관계식을 추정할 경우, 이것이 과연 북한에 얼



마만큼 유효한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물지표법을 이용한다. 우선 우리는 북한 GDP추정에 이용되는 실물지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가능한 많이 동원한다. 이처럼 가능한 많은 지표를 통해 북한의 실제 GDP 수준을 가능한 탄력적인 범위로 측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13개의 실물지표를 이용한다. 1990년대 북한의 식량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가장 많은 노력을 들여 알아내고자 했던 북한의 식량소비 및 인구관련 지표, 한국의 관계당국이 비교적 정확한 지표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북한의 생산량관련 지표, 그리고 북한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관찰이 용이한 경제지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표 IV-4>는 이러한 실물지표들을 요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지표가운데 북한의 칼로리 섭취량과 석유소비량(경제변수), 유아사망률과 5세 미만 사망률(인구변수), 그리고 어린이 만성영양실조 및 급성영양실조 비율(영양변수) 등을 생각해 보자.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모니터링하고 수집한 북한의 경제사회관련 자료가 바로 북한의 식량소비 및 사망률관련 데이터이다. 또한 북한은 소비되는 석유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측면에서 석유 수출국의 통계로 추출된 북한의 석유수입 또는 소비량 데이터는 가장 논란이 적은 통계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의 어린이 영양실조관련 통계 역시 1998년 이후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북한당국의 협조를 얻어 직접 북한 어린이들을 표본 조사함으로써 얻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그 어떤 북한관련 통계 보다도 그 신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표 IV-4>에 언급된 실물지표들은 현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논란의 소지가 적은 북한관련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이들 실물지표와 GDP 사이의 일반적 회귀방정식을 추정할 때,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주의 또는 이행기 경제’ 더미(dummy)와 ‘저개발국’ 더미를 방정식에 추가하여 추정한다. 과거 또는 현재 사회주의·이행기 경제를 경험했던 국가를 하나로 묶고, 1인당 GDP 1,000달러 이하의 저개발국을 또 다른 하나로 묶어 회귀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사회주의·이행기 경제인 동시에 저개발국 경제인 북한에서의 실물지표와 GDP 사이의 관계가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모형을 설계한다는 뜻이다.

<표 IV-4> 북한 GDP 추정관련 실물지표

실물지표	지표의 성격
1. 전기 소비량	경제변수
2. 에너지 소비량	경제변수
3. 승용차 보유대수	사회경제변수
4. 여자 기대수명	인구변수
5. 남자 기대수명	인구변수
6. 5세 미만 사망률	인구변수
7. 영아 사망률	인구변수
8. 석유 소비량	경제변수
9. 만성영양실조어린이 비중	영양변수
10. 급성영양실조어린이 비중	영양변수
11. 시멘트 생산량	경제변수
12. 식량칼로리 공급량	영양변수
13. 단백질 공급량	영양변수

I
II
III
IV
V

(2) 추정 모형과 이용 데이터

실질적인 추정은 세계 각국의 GNI와 실물지표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GDP가 아니라 GNI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경우 GDP가 아닌 GNI 기준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실질적으로 GNI와 GDP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log Y = a_1 + b_1 \log x_i + b_2 DS + b_3 DU \quad (1)$$

[단, Y : 1인당 GDP, x_i : 실물변수(사망률, 식량소비 등),

DS : 사회주의 경제 더미(과거/현재 사회주의=1, 나머지는=0)

DU : 저개발 더미 (1인당 GDP 1,000달러 미만=1, 나머지는=0)]

위의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2003년 기준 세계 277개국의 1인당 (시장환율) GNI 통계가 이용되며, 같은 해 각 실물 지표에 관해서는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데이터 이외에 FAO와 미국의 석유정보국, 그리고 한국의 관계기관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한다.

(3) 결과 및 토론

<표 IV-5>는 이상의 방법으로 추정된 각 실물지표와 GDP간의 회귀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다. 각 회귀방정식 모두 R²가 0.72~0.87로 높은 설명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더미 변수를 포함하

여 추정된 모든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이용해 북한의 GDP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 회귀방정식들을 이용해 2004년 북한의 GNI 수준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6>에 보고되어 있다. 우선 2004년 북한 1인당 GNI의 최소 추정치는 198달러로, 이는 북한의 승용차 보유대수를 실물지표로 하여 추정하였을 경우 도출되었다. 반면 같은 해 북한 1인당 GNI의 최대 추정치는 590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경우였다. 이렇게 보면 이 해 북한의 GNI 또는 GDP 수준은 대체로 198~590달러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2004년 북한의 공식 GDP는 546달러였다. 이는 당연히 여기에서 추정한 범위에 들어온다. 또한 같은 해 UN의 추정치는 473달러로 이 역시 여기에서 추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914달러로 여기에서 추정한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단 북한의 GDP 규모와 관련하여 공식통계의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부 추정통계 가운데에서도 공식통계와 유사한 UN추정통계는 현재로서는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추정통계는 이와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 통계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 보아도 현재 북한의 GDP 수준을 과다 추정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공식 GDP통계와 관련된 이러한 평가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하게 북한의 GDP 수준에만 관계된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우리가 각 통계가 만들어지는 방법까지를 문제 삼는 경우 북한의 공식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북한과 같이 시장가격과 시장환율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의 담당자가 만든 GDP통계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DP 개념에서 매우 벗어난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IV-5> 실물지표를 이용한 1인당 GNI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Xi (실물지표변수)	D1 (저개발국더미)	D2 (사회주의더미)	R2
전기 소비량	0.778347	-0.58897	-1.044984	0.875075
에너지 소비량	1.027692	-0.931339	-0.793769	0.859519
승용차 보유대수	0.778497	-0.662816	-1.096342	0.869398
여성 기대수명	2.835856	-1.757088	-0.635131	0.739257
남성 기대수명	3.033001	-1.780656	-0.490793	0.742277
5세 미만 사망률	-0.908542	-0.83982	-0.650587	0.877989
영아 사망률	-0.966068	-0.922506	-0.579525	0.877391
석유 소비량	0.714313	-0.875692	-0.348043	0.848773
만성영양실조어린이	-0.57662	-1.606731	-0.410663	0.7578
급성영양실조어린이	-0.25571	-1.818734	-0.321548	0.744693
시멘트 생산	0.461384	-1.719889	-0.575184	0.727984
칼로리 소비량	3.895325	-1.555312	-0.467587	0.783638
단백질 소비량	2.607952	-1.448688	-0.597984	0.792107

* 모든 계수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

** 상수항의 계수는 보고하지 않음.

<표 IV-6> 실물지표법에 의한 2004년 북한 GNI 추정결과

	1인당 GNI (달러)
전기 소비량	448
에너지 소비량	414
승용차 보유대수	198
여자 기대수명	435
남성 기대수명	479
5세 미만 사망률	412
영아 사망률	409
석유 소비량	216
만성영양실조어린이	251
급성영양실조어린이	282
시멘트 생산	590
칼로리 소비량	241
단백질 소비량	419
최고	590
최저	198

마. 북한 GDP통계의 신뢰성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북한 GDP통계에 대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북한 GDP통계는 모두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990년대 초반부터 1995년까지 불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GDP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공식통계와 UN추정통계는 물론 이 기간 중 북한의 (시장환율) GDP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하는 한국은행 추정치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GDP통계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기법과 데이터의 한계를 인정한 채 평가를 수행하면, 이 기간에 대한 북한의 공식 GDP통계는 그 수준에 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만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셋째, 이 기간 중의 UN통계국의 추정치 역시 북한의 공식통계와 유사하며, 현재의 수준으로는 이러한 추정통계의 대해서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넷째,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은행 추정치는 북한 GDP를 과대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국한해보면, 현재 가장 합리적인 북한 GDP관련 통계의 사용방법은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UN추정치를 혼용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의 공식통계는 그 시계열 범위가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용은 UN추정치가 주가 되고, 이의 평가를 위해 공식통계를 사용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북한 무역통계의 신뢰성 검증

GDP통계와 더불어 잠재적으로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북한의 공식통계는 아마도 무역통계일 것이다. 무역은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경제변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으로 지탱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북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역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북한의 무역통계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존재한다. 과거 북한당국이 자

국의 무역 현황에 대해 거의 아무런 통계적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은 외부세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제변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현상은 무역 또는 무역통계가 갖는 고유한 특성 때문일 것이다. 즉 무역은 그 특성상 거래 상대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어느 한 나라가 자국의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의 거래 상대국들이 발표하는 무역통계를 역으로 집계하여 그 나라의 전반적인 무역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그간 외부관찰자들은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라 불리는 이러한 무역 상대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을 재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북한무역은 북한경제 가운데 가장 신뢰할만한 분석이 가능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⁵⁰

그런데 이러한 무역 상대국의 통계를 염두에 두면, 북한의 공식 무역 통계의 신뢰성 검증은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공식통계를 무역 상대국의 거울통계로 역집계한 통계와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신뢰성 여부가 곧바로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

⁵⁰ - 거래 상대국의 통계를 이용해 해당 국가의 무역을 재집계 하려는 시도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를 대상으로 빈번히 나타났으며, 북한의 경우에도 Chung(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과 정상훈(정상훈, “북한경제 연구: 일련의 방법적 고찰,”)을 비롯한 초기의 북한경제 연구에서부터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북한무역 전반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도를 체계화 한 것은 Choi Soo 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D.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1991), 최신림, 『북한의 무역구조』 (서울: 산업연구원, 1991)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시도가 등장하면서, 이후 거래 상대국 통계를 이용한 북한무역의 분석은 Murooka(Murooka Tetsuo, “북한의 농산물 무역현황과 전망,” 『북한 농업과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992.12))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의 세부 무역 아이টে까지 확대되었고, 이러한 경향을 이후 서구의 Eberstadt(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s Interlocked Economic Crisis.” *Asian Survey*, March 1998) 등이 받아들이며, 현재 북한경제 가운데 무역부문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신빙성 있는 연구결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
II
III
IV
V

한 방법에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무역 상대국의 통계로 역집계한 통계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통계가 신뢰성이 없다면, 이를 이용해 북한 공식통계의 신뢰성을 따져 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무역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GDP 통계에서와는 달리, 그 수준을 여타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차 추정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 만일 북한무역에 대한 거울통계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면, 북한의 공식 무역통계에 대한 신뢰성 검증 역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는 북한 무역통계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우선 북한의 공식무역통계와 그에 대한 거울통계를 서로 비교한다. 만일 양자가 유사하다면, 우리는 공식무역 통계가 신뢰성이 있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양자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거울통계 자체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거울통계 자체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 이와는 크게 다른 북한의 공식통계는 그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거울통계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이 경우 우리는 신뢰성이 의심되는 북한의 공식통계와 또한 유사하게 신뢰성이 의심되는 거울통계 모두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논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북한의 공식통계와 거울통계가 왜 다른지 그 내역을 보다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양자의 신뢰성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거울통계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북한의 공식무역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여타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엄밀히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 북한의 무역관련 통계

현재 북한의 무역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통계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북한의 공식통계이며, 둘째는 한국 KOTRA가 발표하는 추정통계이고, 셋째는 IMF가 집계한 추정통계이며, 마지막으로 넷째는 UN이 집계한 추정통계이다. 물론 이외에도 과거 일본의 JETRO나 일부 학자들이 독자적으로 발표한 북한무역에 대한 추정통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JETRO의 경우 2002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북한무역에 대한 독자적인 추정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대신 한국의 KOTRA가 집계한 추정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개별적인 학자들에 의한 북한무역에 대한 추정통계도 최근에는 활발히 발표되고 있지 않다. 아마도 이는 앞서 언급한 KOTRA나 IMF, UN 등의 추정통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연구자들에 의한 추정통계의 생성작업이 별다른 중요성을 띄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북한무역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가 전부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먼저 공식통계를 살펴보자. 북한당국이 자국의 무역규모에 대한 언급을 시작한 것은 2000년을 전후한 시점이었다. 앞의 제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점을 기점으로 북한당국과 국제기구 등의 공동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의 무역통계 일부가 외부세계에 제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그 후에도 이어져 현재에는 1993년 이후 2004년까지 북한의 공식무역통계가 외부세계에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러한 공식통계는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이용 가능한 공식통계는 북한의 상품(merchandise)수출액과 수입액 그리고 이에 따른 총거래

I

II

III

IV

V

액 및 수지 적자액 등에 불과하다. 북한의 국가별 무역액이나 상품별 무역액과 같은 기초적 통계는 아직 공표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식통계는 북한의 대외거래에 대한 북한당국 스스로의 집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북한과 같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국가의 경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거래는 사실상 전무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앞의 상품거래에 대한 공식통계를 외부세계가 집계하는 북한무역에 대한 거울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일 역시 가능할 것이다. 거울통계를 통해 북한의 공식통계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검토하는 일과, 역으로 공식통계를 통해 거울통계의 신뢰성의 문제를 논의하는 일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편, 외부세계가 집계하는 북한무역에 대한 추정통계는 모두가 거래 상대국의 통계를 이용한 것들이다. 우선 한국의 KOTRA는 해외 각국에 파견된 지사에서 보내오는 현지 국가와 북한과의 무역규모를 집계하여 매년 북한의 무역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KOTRA의 추정통계는 북한의 국가별·상품별 수출입 규모와 총거래 규모 그리고 무역수지 규모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사용되는 거울통계는 주로 해당국의 세관통계가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KOTRA의 추정통계는 매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로 발간되고 있다. 반면, IMF나 UN은 회원국 등이 보고하는 국가별·상품별 무역 데이터를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된 무역 데이터는 누구나 해당 국가별로 재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북한이라는 국가로 재정리하는 경우 KOTRA의 추정통계와 유사한 북한의 국가별·상품별 수출입 규모와 총거래 규모, 그리고 무역수지 규모 등에 대한 추정통계를 획득할 수 있다. IMF의 경우에는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라는 세계 각국의 국가별 무역 데이터를 통해, 그리고 UN의 경우에는 UN

통계국이 제공하는 상품별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를 통해 이러한 북한무역의 추정통계를 얻을 수 있다.

나. 공식통계와 외부 추정통계의 비교

<표 IV-7>은 이상에서 언급한 북한무역에 대한 통계들을 무역총량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비교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공식통계에 대해 살펴보자. 공식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총량은 2004년 현재 20억 달러에 이른다. 이 해 북한의 공식 GDP가 112억 달러였으니만큼,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대략 20%를 전후한 수치라는 뜻이다. 그런데 북한의 무역은 1993년 27억 달러에서부터 1998년 17억 달러로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반전하여 2004년까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중반 본격화된 북한의 경제위기가 200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무역규모의 변화 추세는 일단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

II

III

IV

V

〈표 IV-7〉 추정기관별 북한의 무역관련 데이터 비교
- 북한 무역총량

(단위: 백만 달러, %)

	199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공식통계 (A)	2744	1952	1775	1777	1810	1824	1896	1928	1977
KOTRA (B)	2646	2177	1442	1480	1969	2270	2260	2391	2857
IMF (C)	2415	2344	2051	2008	3028	4236	3180	3159	4000
UN (D)	2290	2514	2057	2049	2841	3892	2636	2572	3452
(B) / (A)	96%	112%	81%	83%	109%	124%	119%	124%	145%
(C) / (A)	88%	120%	116%	113%	167%	232%	168%	164%	202%
(D) / (A)	83%	129%	116%	115%	157%	213%	139%	133%	175%

- 출처: 1. 공식통계: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2. KOTRA: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호.
 3.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CD-Rom.
 4. UN: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그러나 이러한 공식통계는 여타의 거울통계들로 집계한 북한무역에 대한 추정통계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북한의 무역총량에 대해 KOTRA의 통계는 28억 달러로, UN의 통계는 34억 달러로, 그리고 IMF의 통계는 40억 달러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IMF 통계의 경우 공식통계의 거의 두 배가 넘으며, KOTRA 통계 역시 공식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큰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거울통계로 한 나라의 무역을 집계하는 경우 일정 정도의 기술적 오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역에 수반되는 보험과 운송료와 같은 제반 경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연도의 무역규모와 관련하여

공식통계와 외부 추정통계들 사이에 최고 두 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만일 거울통계들로 집계한 외부의 추정통계가 옳다면, 북한의 공식무역통계는 그 신뢰성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의 추정통계가 옳다면, 북한의 공식통계가 현실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거울통계로 집계된 외부의 추정통계가 과연 옳은 것일까? 흥미롭게도 이 또한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이들 외부 추정통계들 자체가 서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2000년의 경우 KOTRA통계는 북한의 무역규모를 20억 달러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IMF는 이를 30억 달러로, 그리고 UN은 이를 28억 달러로 보고하고 있다. 북한의 단일 연도의 무역규모와 관련하여 이들 외부 추정통계 사이에 최대 70% 가까운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기술적인 집계방법의 차이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추정통계 사이에 왜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표 IV-8> 각 추정기관별 북한무역 추정치 속에 포함된 거래 상대국가의 수

(단위: 개수)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KOTRA	수입국	60	55	52	50	54	46	47	52
	수출국	59	54	64	55	55	51	51	56
IMF	수입국	84	76	77	80	81	81	84	85
	수출국	111	113	117	116	112	110	113	115
UN	수입국	84	82	80	93	94	88	90	91
	수출국	115	119	127	129	128	126	136	124

주: 당해 연도 북한과의 수출 및 수입이 '0' 보다 크다고 보고한 국가의 수를 산정 출처: <표 IV-7>과 동일



이와 관련하여 <표 IV-8>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나라의 무역을 거래 상대국의 통계를 통해 재구성하는 경우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실적으로 집계되어야 할 거래 상대국의 누락이다. 북한과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국가의 무역통계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전체 무역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표 IV-8>에서 보듯이 KOTRA와 IMF 그리고 UN 등이 북한의 무역을 집계하기 위해 포함시킨 거래 상대국의 수는 커다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2000년의 경우 KOTRA는 북한의 무역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관계가 있는 수입국 50개국과 수출국 55개국의 통계를 집계하였는데 반해, IMF는 수입국 80개국과 수출국 116개국의 통계를, 그리고 UN은 수입국 93개국과 수출국 129개국의 통계를 집계한 것이다. KOTRA와 UN을 비교해 보면, 이 해 북한의 무역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집계한 거래 상대국의 수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해 북한의 무역규모가 거래상대국의 통계를 집계해 추정한 외부 통계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우 흥미로운 질문으로, 앞서와 같은 경우 KOTRA의 추정통계가 당연히 고려해야 할 거래 상대국을 누락했으니만큼 IMF나 UN의 추정통계 보다 더욱 부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비록 그 개연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도 곤란하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왜냐하면 거울통계를 이용해 한 나라의 무역을 재구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바로 거래 상대국의 ‘잘못된 통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저개발(소국)경제가 통계제도의 결함이나 통계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특정의 국가와의 거래에 대해 잘못된 통계를 보고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그 국가의 무역규모를 재구성하면, 그 결과는 실제 무역규모와 상당한 오차를 보일 것이다. 문제는 그간 북한의 무역관행을 보면 그 거래 대상국 속에는 저개발(소국)경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과 북한의 거래는 매우 부정기적이고 변동이 컸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떤 국가들은 특정 연도에만 북한과의 대규모 거래를 보고했다가, 이후 수년 동안에는 아예 북한과 일체의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만일 이들의 북한과의 대규모 거래 보고가 단순한 통계상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아니면 ‘한국(South Korea)’을 ‘북한(North Korea)’으로 단순히 오기하는 것과 같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한다면, 이들의 통계를 모두 집계하여 북한의 무역규모를 추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KOTRA가 집계하는 북한의 무역 상대국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정기적이고 변동이 심한 국가의 무역통계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통계집계의 대상이 되는 거래 상대국의 수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작정 KOTRA의 북한무역 추정통계가 IMF나 UN의 추정통계 보다 신뢰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 IV-9>이다. 여기에서는 2003년 현재 KOTRA와 IMF 그리고 UN이 집계한 북한의 10대 무역 상대국을 그 무역 규모와 함께 정리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각 기관에 따라 상위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의 경우 KOTRA가 집계한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호주나 폴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는 IMF와 UN의 집계에는 보이지 않으며, 반대로 IMF 또는 UN이 집계한 레바논, 미얀마, 멕시코,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들 역시 다른 기관의 집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I
II
III
IV
V

<표 IV-9> 2003년 각 추정기관별 북한의 10대 무역 상대국 및 무역액

[A] 북한의 수출

(단위: 백만 달러)

KOTRA		IMF		UN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중국	395	중국	360	중국	395
일본	173	일본	158	일본	175
태국	51	브라질	66	브라질	66
독일	24	태국	47	태국	51
방글라데시	19	레바논	35	멕시코	24
프랑스	8	독일	22	독일	22
스페인	8	미얀마	21	나이지리아	19
호주	7	콜롬비아	16	콜롬비아	18
네덜란드	7	방글라데시	13	이집트	15
폴란드	7	마다가스카	13	스페인	10

[B] 북한의 수입

KOTRA		IMF		UN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중국	625	중국	691	중국	628
일본	91	태국	225	태국	204
태국	203	인도	181	인도	157
인도	158	알제리	154	러시아	111
싱가포르	157	콩고	143	일본	92
러시아	116	러시아	122	브라질	74
독일	71	네덜란드	103	독일	68
네덜란드	94	일본	100	싱가포르	60
이탈리아	27	브라질	81	이태리	28
캐나다	26	독일	77	캐나다	21

출처: <표 IV-7>과 동일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는 거울통계를 이용해 북한의 무역을 집계한 추정통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소 우울한 결론에 도달한다. ① 각 추정통계는 여기에 사용된 북한의 거래 상대국의 수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난다. ② 이처럼 거래 상대국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추정통계는 북한의 거래 상대국 가운데 부정기적이고 변동이 심한 거래 상대국을 집계과정에 포함시키지만, 어떤 통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③ 이러한 부정기적이고 변동이 심한 거래 상대국이 발표하는 북한과의 무역통계는 상대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오류라고 말하기도 불가능하다. ④ 이상의 이유로 각 외부 기관이 공표하는 북한무역에 대한 추정통계는 서로 커다란 차이가 난다. ⑤ 그러나 바로 동일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들 외부 추정통계 가운데 어느 것이 더욱 옳고, 어느 것이 더욱 그른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요컨대, 우리가 이제까지 신뢰할만하다고 가정해 온 북한무역에 대한 외부 추정통계 역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북한의 공식 무역통계가 외부 추정통계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만일 외부 추정통계가 옳다면 북한의 무역통계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북한무역에 대한 외부 추정통계 역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이는 역으로 북한의 공식 무역통계가 신뢰할만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북한의 공식통계와 외부 추정치들을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비교해 보도록 한다.

I
II
III
IV
V

다. 북한 수출통계의 신뢰성

<표 IV-10>는 북한의 수출과 관련된 공식통계 및 외부 추정통계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치들은 앞의 <표 IV-7>과는 사뭇 그 느낌이 다르다. 즉 앞의 북한의 무역규모 총량과 관련해서는 공식통계와 외부 추정통계의 수치들이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였으나, 여기에서의 북한 수출액과 관련해서는 양자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3년 북한의 수출액은 9억 2,000만 달러였다. 그런데 IMF의 추정통계는 이 수치가 9억 1,800만 달러라고 말함으로써 양자가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IMF의 추정통계와 공식통계는 1993년이나 2004년과 같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앞서의 <표 IV-7>에서와 같이 크지 않고, 1997~2003년의 기간 중에는 양자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앞서 언급한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외부 추정통계는 일정한 오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수출에 관한 한 공식통계와 IMF 추정통계가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북한 수출에 대한 양자의 통계가 거의 일치한다는 의미는 명확하다. 그것은 북한의 수출에 관한 한 공식통계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집계한 수출액이 그와는 전혀 다른 거래 상대국의 개별통계를 모두 합산하여 도출된 IMF의 추정통계와 사실상 일치하기 때문이다.

<표 IV-10> 추정기관별 북한의 수출통계 비교, 1993~2004년

(단위: 백만 달러, %)

	199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공식통계 (A)	1,270	914	858	859	877	885	908	920	948
KOTRA (B)	990	905	559	515	556	650	735	777	1,020
IMF (C)	887	884	881	784	925	943	903	918	1,213
UN (D)	972	1,183	970	884	1,173	987	1,006	947	1,277
(B) / (A)	78%	99%	65%	60%	63%	73%	81%	84%	108%
(C) / (A)	70%	97%	103%	91%	105%	107%	99%	100%	128%
(D) / (A)	77%	129%	113%	103%	134%	112%	111%	103%	135%

출처: <표 IV-7>과 동일

<표 IV-11>은 이러한 사실을 조금은 형식적인 방법으로 보여준다. 북한수출에 대한 공식통계를 100으로 할 때 외부 추정통계의 (평균적) 상대치를 구해보면, KOTRA와 UN의 통계는 79와 113으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IMF의 추정통계는 100으로 공식통계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공식통계와 IMF의 추정통계는 각 년도의 실제 값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적 차이는 15 정도로, 이는 거울통계를 통해 거래 상대국의 무역통계를 집계할 경우 발생하는 오차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
II
III
IV
V

<표 IV-11> 1993~2004년 북한의 공식 수출통계에 대비해 본
각 추정통계의 특징

(공식 수출통계 값=100)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KOTRA	79	108	60	16
IMF	100	128	70	15
UN	113	135	77	18

이렇게 보면, 매우 흥미롭게도 북한의 수출에 관한 한 공식통계는 신뢰할 수 있으며, 외부 추정통계로는 IMF가 거래 상대국의 통계를 집계해 추정하는 북한 수출통계가 상대적으로 다른 추정통계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의 <표 IV-7>에서와 같은 공식통계와 외부 추정통계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다음으로 북한의 수입통계에 대해 살펴보자.

라. 북한 수입통계의 신뢰성

<표 IV-12>은 북한의 수입에 대한 공식통계 및 외부 추정통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수입에 대해서는 공식통계와 외부 추정통계들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수출에 대해서는 매우 유사한 수치를 제시했던 공식통계와 IMF의 통계 역시 수입에 대해서는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의 경우 공식통계는 북한의 수입이 10억 달러 내외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반해, IMF 통계는 이를 22억 달러라고 말함으로써 양자는 무려 두 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사실은 <표 IV-13>에 의해 보다 형식적으로 드러난다.

즉 북한의 수입에 대한 공식통계를 100으로 가정할 경우 외부 통계의 평균적 상대치를 구해보면, 최소 KOTRA의 139로부터 최대 IMF의 201까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평균적 상대치의 표준편차 역시 최소 31에서 최대 81까지 차이가 남으로써 실질적인 각 연도의 수치라는 측면에서는 공식통계와 외부 추정통계가 도저히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괴리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의 <표 IV-7>에서 나타난 공식통계와 외부 추정통계 사이의 괴리 역시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입통계의 괴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12> 추정기관별 북한의 수입통계 비교, 1993~2004년

(단위: 백만 달러, %)

	199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공식통계 (A)	1474	1038	917	918	933	939	988	1008	1029
KOTRA (B)	1656	1272	883	965	1413	1620	1525	1614	1837
IMF (C)	1528	1461	1171	1224	2103	3293	2277	2240	2788
UN (D)	1318	1330	1088	1165	1668	2904	1630	1626	2175
(B) / (A)	112%	123%	96%	105%	151%	173%	154%	160%	179%
(C) / (A)	104%	141%	128%	133%	225%	351%	230%	222%	271%
(D) / (A)	89%	128%	119%	127%	179%	309%	165%	161%	211%

출처: <표 IV-7>과 동일

I
II
III
IV
V

<표 IV-13> 1993~2004년 북한의 공식 수입통계에 대비해 본
 각 추정통계의 특징

(공식 수입통계 값=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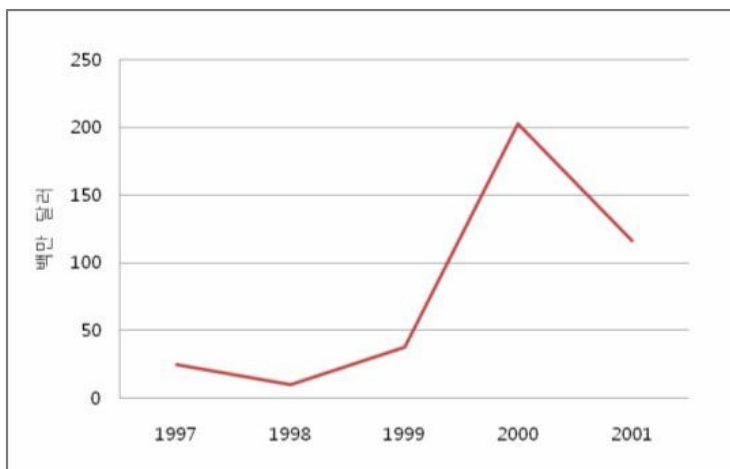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KOTRA	139	179	96	31
IMF	201	351	104	81
UN	165	309	89	65

북한의 수입에 대한 공식통계와 외부 추정통계 사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괴리의 의미는 분명하다. 그것은 수입에 관한 한, 공식통계와 외부 추정통계 또는 이들 모두가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통계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

우선 편의상 북한의 공식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표 IV-12>에 나타나 있듯이 북한의 공식통계는 외부 추정통계에 비해 북한의 수입액을 매우 적게 계상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통계를 신뢰성이 없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북한의 공식통계가 실제의 수입액을 낮추어 발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직관적 설득력을 가진다. 한 가지 측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통계당국에게는 자국의 수입액을 낮추어 발표할만한 유인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북한의 통계당국으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경제위기로 북한경제 자체가 해외의 지원과 원조로 지탱하고 있으니만큼, 자국의 수입액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발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더 많은 해외의 지원과 원조를 기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해외의 보다 영향력을 축소하여 보이게끔 만들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통계당국의 통계수집 능력 약화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위기로 북한의 행정력은 일종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내몰린 것이 분명하다. 대규모 아사자를 수반한 기근현상으로 중·소도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북한지역에서 사실상 행정력이 마비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통계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행정력의 마비는 곧 통계 수집 능력의 약화로 나타났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정확한 수입 규모를 북한의 통계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만일 이러한 추론이 옳다면, 북한의 수입에 관한 한, 외부 연구자들의 분석의 기초자료는 공식통계가 되어야 한다기 보다는 외부의 추정통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외부 추정통계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식통계가 수입에 관한 한 신뢰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일견 당연해 보이기 까지 하는 주장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IV-1> 북한의 對태국 수입국 추이(IMF 통계), 1997~2001년



- I
- II
- III
- IV
- V

그러나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주장에도 한 가지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북한의 공식통계가 수출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있는데, 왜 수입에 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다. 앞서 우리는 북한의 수출에 관한 공식통계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수입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을까? 만일 북한의 통계당국이 공식적인 수입액을 낮추어 발표할 유인을 갖고 있었다면, 수출에 관해서도 그와 비슷한 유인을 가지고 있어야 옳지 않을까? 또한 만일 북한의 통계당국이 통계수집 능력 및 통제력의 약화에 시달렸다면, 그것은 수입통계에서뿐만 아니라 수출통계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었어야만 했지 않을까? 북한의 수입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수출통계와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 당연히 앞서와는 정반대의 가정 또는 주장을 생각해 보는 것 역시 필요할지도 모른다. 즉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도 공식통계를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앞서의 북한 수출통계를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과 서로 정합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도 한 가지 중요한 결함이 있다. 그것은 ‘그렇다면 왜 북한의 공식 수입통계는 외부의 추정통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하는 의문이다. 만일 북한의 수입통계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외부의 추정통계가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북한의 실제 수입을 턱없이 부풀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과연 이러한 추론이 합리적인 것일까?

물론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완벽한 답변을 내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요인만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대외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만일 무역 상대국의 통계로 북한의 수입액을 집계할 경우, 그 결과는 실제 북한의 (상업적) 수입액을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대외거래의 중요한 특징은 해외로부터의 원조 또는 지원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원조 또는 지원은 상업적 수입이 아니므로, 자국이 발표하는 공식적 수입액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거래 상대국 통계를 이용해 북한의 수입을 집계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 또는 원조가 상업적 수입과 유사하게 전체 수입액에 포함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어느 NGO가 북한에 원조물자를 지원하면서, 이를 중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북한에 전달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북한은 이 물자를 순수한 원조로 파악하여, 자국의 상업적 수입에는 포함시키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세관통계는 중국에서 구매한 물자가 북한으로 전달되었으므로, 당연히 이를 북한의 수입(중국의 수출)로 계상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만일 <표 IV-12>에 나타나 있는 북한의 공식 수입액이 상업적 수입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비상업적 거래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 상대국 통계로부터 집계한 북한의 수입액 보다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수출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북한의 수출은 거의 전량을 상업적 거래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과 북한의 거래이다. 북한의 통계당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거래를 민족내부간 거래로 인정하여, 국가간의 수출입 통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표 IV-9>와 <표 IV-13>에 나타나 있는 공식 수·출입통계에는 한국과의 거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북한당국은 밝히고 있다.

I
II
III
IV
V

이러한 사정은 KOTRA나 IMF, UN 등의 외부 추정통계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인정하여, 그것을 이들 기관이 집계하는 무역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한국의 존재가 북한의 수입통계에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보자. <그림 IV-1>에서 보듯이 북한의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000년을 기점으로 종래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의 증가를 주도했던 것이 바로 북한의 태국으로부터의 곡물수입량의 증대였다. 문제는 이러한 곡물 수입량의 증대가 실제로는 당시 한국정부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쌀 차관 30만 톤을 태국산 쌀을 구입해 북한에 선적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⁵¹ 따라서 이를 제공받는 북한의 경우에는 비록 그 쌀이 태국으로부터 전달되어 오지만, 최종적인 거래의 상대방은 한국이므로 이를 자국의 수입통계에는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응당 태국의 무역통계는 자국의 쌀이 북한으로 수출되는 것이므로 이를 계상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남북한 거래를 제외한 채 만들어지는 북한의 수입통계가 거래 상대국의 무역통계로 집계한 북한의 수입액 보다 적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표 IV-12>에서 나타나는 공식 수입통계와 외부 추정통계 사이의 차이를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이 분명히 해주는 것은, 앞서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북한의 수입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가정 또는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그것을 신뢰할만 하다고 가정 또는 주장하는 일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⁵¹ - KOTRA, 『200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KOTRA, 2002.6), p. 69.

마. 북한 무역통계의 신뢰성 검증 결과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북한 무역통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북한무역 전반을 놓고 볼 때, 북한의 공식통계와 거래 상대국의 무역통계를 집계해 만들어진 외부 추정통계는 서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바로 북한의 공식통계가 신뢰할 수 없고, 외부 추정통계가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거래 상대국 통계를 이용하는 외부 추정통계 역시 그 특성상 여러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제로 외부 추정통계들 사이에도 그것을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 그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무역에 대한 추정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거래 상대국의 수로부터 여러 기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야기되었다. 셋째, 북한의 수출에 관한 한 공식통계는 신뢰할만하다. 실제로 북한의 공식통계는 IMF가 거래 상대국의 무역통계를 이용해 집계한 북한의 수출통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의 수입에 관한 공식통계의 신뢰성은 불확실하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동일하게 가능하다.

3. 북한 인구통계의 신뢰성 검증

북한의 경제통계가 아니면서도 북한경제를 분석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계는 아마도 인구통계일 것이다. 올바른 인구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인당 GDP와 같은 경제의 기초적 변수조차 확정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인구통계는 앞서 검

I

II

III

IV

V

또한 GDP통계나 무역통계와는 차별화되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그에 대한 외부세계의 독립적인 추정통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의 통계청이나 UN통계국 등과 같은 외부기관이 북한의 인구와 관련된 추정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통계는 거의 대부분 북한의 인구통계에 그 기반을 두고, 이를 보다 정치화하거나 교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통계청과 UN통계국 등의 북한인구 추정통계는 1994년 실시된 북한의 센서스 데이터 및 이후의 관련통계들을 토대로 몇 가지 가정과 기법을 적용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의 GDP나 무역에서와 같이 외부기관이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 생산하는 추정통계는 인구분야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인구통계에 대해 그간 의문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앞의 제3장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센서스 데이터는 물론 이후의 사망 및 출생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통계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북한의 인구통계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앞의 GDP와 무역통계에 대한 검증과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진행한다. 즉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 인구통계에 대한 의문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에 대한 외부 추정통계의 언급 없이 북한통계 자체의 신뢰성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가. 검증방법

이제까지 북한 인구통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였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발표한 각종 인구통계가 서로 정합적(consistent)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사회의 인구추세는 여러 가지 항등식에 의해 규정된다. 예를 들어, 북한에 인구의 유출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 시기의 총인구변동은 오직 사망과 출생의 합으로서만 정의된다. 또한 특정 연령의 인구는 그 이전 연령의 인구와 그들의 사망률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발표한 여러 가지 인구통계가 이러한 항등식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명되면, 그 통계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이러한 항등식을 이용하여 북한 인구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제2장의 <표 II-16>은 1993년과 2002년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 II-12>는 1993년에서 2002년까지의 북한의 사망률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표 II-16>에서의 2002년 현재 북한의 15~65세의 인구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들은 1993년 현재 북한에 이미 태어나 생존해 있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2002년 현재 북한의 15~65세의 인구규모는 단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 규정되었을 것인데, 하나는 1993년 현재의 (연령별) 인구구성이며 다른 하나는 1993~2002년까지의 사망률이다. 그러므로 만일 앞의 <표 II-16>과 <표 II-12>가 나타내는 북한의 인구통계가 옳다면, 우리는 <표 II-16>의 1993년 인구구성과 <표 II-12>의 사망률 정보를 이용하여 2002년 현재 북한의 15~65세의 인구를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표 II-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서로 맞아 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오차 역시 존재하므로, 양자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수치와 실제로 공표된 수치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서로 정합적이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표 II-16>과 <표 II-12>에서 제시하는 북한의 인구통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I
II
III
IV
V

이들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이 글에서는 북한의 인구통계를 이용해 2002년 현재 북한의 15~65세 인구를 추계하고, 이렇게 추계한 수치가 실제로 공표된 수치와 얼마나 정합적인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북한 인구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2년 현재 북한의 15~65세 인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한다.

[1] 1994년 실시된 1993년 말 현재의 인구센서스 데이터를 토대로 각 연령별 인구구성은 물론, 이들의 연령별 사망률을 계산한다.

[2] 이러한 연령별 사망률을 기준으로 하고, <표 II-12>에 나타난 사망률의 변화정보를 적용하여, 1993~2002년 기간 동안의 각 연도 연령별 사망률을 계산한다.

[3] 이렇게 계산된 연령별 사망률을 1993년의 연령별 인구구성에 적용하여 2002년 현재 15~65세의 인구규모를 추계한다.

이러한 방법은 보통 조성법(component method)이라고 알려진 인구 추계방법으로서, 센서스 데이터를 기초로 다음 센서스까지의 인구변화를 추적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추계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1993년 현재 기준 센서스 데이터는 연령별 인구의 경우 軍 인구를 제외한 민간 인구 규모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2002년 공표된 15~65세의 북한 인구는 軍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대규모 아사자를 동반한 기근현상을 경험하는데, 일반적으로 기근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률의 정도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이다. 영양상태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사망률 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표 II-12>는 이러한 기근시기의 전반적 사망률 현상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의 연령별 편차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연령별 편차를 무시한 전반적 사망률 변화정보만을 가지고 2002년 인구를 추계할 경우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실질적인 추정을 진행한다.

[4] 먼저 북한 軍 인구의 연령구조로 볼 때, 1993년 현재 군에 소속된 인구가 2002년까지 생존할 경우 그 연령대는 15~65세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 일단은 센서스 데이터가 제공하는 1993년 현재 민간 인구에 연령별 사망률 변화를 적용하여 2002년의 인구를 추계한 후, 여기에 더해 ㉡ 1993년 현재 북한이 밝히는 軍 인구 69만 명을 기준으로 동일 연령대의 평균 사망률을 구하고 여기에 2002년까지의 사망률 변화를 적용하여 2002년까지 생존하는 인구규모를 추계하여, ㉢ 최종적으로 이 둘을 합하여 2002년 현재 15~65세의 인구규모를 산출한다.

[5] 또한 1993년 이후 2002년까지의 사망률 변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가정한다. ㉠ 하나는 이 연령대의 최대 사망률로서, 이는 이 연령대의 사망률이 <표 II-12>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북한 사망률과 동일하게 상승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이 연령대의 최소 사망률로서 이는 1993년 현재 이 연령대의 사망률이 <표 II-12>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북한 사망률의 상승현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연령대의 최대 사망률 가정을 도입하여 2002년의 인구를 추계하면 그 규모는 2002년 15~

I
II
III
IV
V

65세의 인구규모가 도달할 수 있는 최소치가 될 것이며, 반대로 이 연령대의 최소 사망률 가정을 도입하여 추계하는 경우에는 2002년 15~65세의 인구규모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것이다.

만일 <표 II-12>와 <표 II-16>에서 제공하는 북한의 인구통계가 정합적이라면, 2002년 현재 공표된 15~65세의 북한인구는 위에서와 같이 [1]에서 [5]까지의 방법으로 추정되는 최대 및 최소 인구 사이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검증결과 및 토론 - 북한 인구통계의 신뢰성

<표 IV-14>는 이상에서 추계한 2002년 현재 북한의 15~65세 인구 규모를 실제로 공표된 내용과 비교하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 추계된 2002년 현재 북한의 15~65세 인구규모 최소 추계치는 1,557만 명으로 <표 IV-14>에서 공표된 실제치인 1,620만 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에서 추정된 최대 추계치 역시 1,571만 명으로 실제 인구통계인 1,620만 명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최대 추계치는 1993년 이후 북한의 관련 연령대의 사망률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다. <표 IV-14>에서 보듯이 이 기간 중의 기근현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망률의 상승현상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에 이용된 관련 연령대의 사망률은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추정된 최대치는 북한이 실제로 공표한 수치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왔어야 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북한의 실제 공표치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앞의 <표 II-12>와 <표 II-16>에 나타난

북한의 인구통계가 서로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북한 인구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근거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표 IV-14> 2002년 현재 북한 15~65세 인구규모 추정치와 실제 공표치의 비교

(단위: 만 명)

	최대 추정치	최소 추정치	실제 공표치
15~65세 인구규모	1,571	1,557	1,620

문제는 왜 이처럼 북한의 인구통계가 서로 정합적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당국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구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인구통계는 북한통계의 조작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의 가능성은 북한 통계당국의 통계수집 및 분석 능력의 약화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행정능력은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와해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통계당국 역시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정합적이지 않은 통계를 생산하고 보유할 정도로 취약한 통계능력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가능성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1993년 현재의 센서스 데이터를 토대로 추계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센서스 데이터는 북한의 공민등록제도를 통해 수집되는 일반적인 인구 통계와는 서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2002년 북한이 발표한 인구통계가 일반적인 공민등록제도를 통해 수집된 통계가 분명한 만큼, 그것은 기술적으로 센서스 데이터를 토대로 추계된 결과와 차



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인구통계는 생각만큼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4. 주요 북한통계의 신뢰성 검증 결과

<표 IV-15>는 이상에서 수행한 주요 북한통계에 대한 신뢰성 검증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우선 북한 GDP통계의 경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분석의 기법으로는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은행과 같이 북한통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외부의 추정통계가 그 신뢰성 면에서 더욱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역통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중립적 결과가 나왔다. 우선 북한의 수출통계는 IMF와 같은 외부 추정통계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수입통계에 대해서는 사정이 약간 달라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불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여타의 외부 추정통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북한의 인구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만들어지는 외부 추정통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식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표 IV-15> 주요 북한통계의 신뢰성 검증 결과

	GDP통계	무역통계	인구통계
공식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로서는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별다른 증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통계는 비교적 신뢰 • 수입통계는 신뢰성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성 테스트 통과 실패
외부 추정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 추정통계와 같은 외부 추정통계의 신뢰성은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수출 추정통계는 비교적 신뢰 • 여타 추정통계의 신뢰성은 불명확 	-

I

II

III

IV

V

V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북한의 통계제도와 통계형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 세계가 이용할 수 있는 북한 통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들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북한통계 전반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통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뢰성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활용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통계제도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통계국이라는 전문 통계기구와 내각 省들의 통계기능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제도의 성격으로 인해 북한의 통계와 통계발표는 다양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① 북한의 대부분의 통계는 행정통계이며, ② 북한당국은 통계의 비밀성을 위해 통계발표의 부정기성을 유지하고, ③ 발표되는 통계 역시 실물적 수량 통계와 지수 통계 그리고 증가율 통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④ 통계발표의 주체 역시 전문 통계기관으로부터 내각의 省 그리고 정치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하여 그 모호성을 최대화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북한통계의 가용성은 시기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우선 1945년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당국은 거의 정기적으로 자국의 공식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통계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어떤 형태의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통계의 암흑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통계의 암흑기는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크게 뒤바뀌었는데,

I
II
III
IV
V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북한당국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여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내부의 통계들을 외부에 유출하고 있다.

셋째, 외부로 발표된 북한통계 일반은 그 신뢰성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특징 또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 통계의 정의가 모호하며 빈번히 변화한다는 것과 ② 통계의 수집 및 생산 그리고 공표과정에서 기술적이며 구조적인 과장과 왜곡의 가능성이 크고 ③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이 빈번하며 ④ 통계의 의도적 조작의 개연성 마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또는 결함으로 인해 외부로 공표된 대부분의 북한통계는 그 신뢰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그대로 분석에 차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넷째, 그러나 앞서와 같은 북한통계의 특징 또는 결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통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통계의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과정에서 국제기구 등을 통해 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도록 설계되어 유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통계의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통해 그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고 선형적으로 그것들의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섯째,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북한통계 가운데 그 잠재적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통계 세 가지를 고른다면, 그것은 아마 북한의 GDP 통계와 무역통계 그리고 인구통계일 것이다. 이들 세 가지 북한통계의 신뢰성을 각각에 맞는 별도의 기법을 동원하여 검증할 경우 그 결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북한의 GDP통계의 경우에

는 적어도 1995년 이후의 통계에 관한 한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한국은행이 작성한 북한의 GDP추정치와 같은 외부 추정통계의 경우가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한편, 북한의 무역통계와 관련해서는 수출통계의 경우 그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통계의 경우에는 그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유보될 만큼 제반 검증 결과가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구통계는 그 자체가 정합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통계 기술상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당국의 통계적 조작과 같은 시도에 기인한 것인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여섯째, 위와 같은 북한통계의 검증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①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에 관한 한, 경우에 따라 신뢰성 있는 북한통계를 발견하는 일이 가능하고, 이러한 북한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그 이외의 외부 추정통계를 이용하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② 그러나 어떤 북한통계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만일 북한과 관련된 분석을 위해 북한통계를 찾아 활용하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외부 연구자들이 직면해 온 가장 큰 어려움은 분석에 필요한 북한의 데이터를 찾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통계 없는 북한경제 연구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 자체를 중단하는 곤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곤란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간 장막에 가려진 북한의 통계들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외부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I
II
III
IV
V

이 글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외부 연구자들에게 ‘이제는 북한통계와 관련된 어떤 조그마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데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문헌 자료

- 고일동·오강수. 『북한 경제통계의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9.6.
- 국토통일원. 『북한의 GNP 추계방법 해설』.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분단 45년 남북한 경제의 종합적 비교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90.
- _____.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서울: 국토통일원, 각 년호.
- _____.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국토통일원, 1996.
-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김승준. 『우리나라 농촌문제 해결의 역사적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 내외통신사 편.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사회』. 서울: 내외통신사, 1995.
- 대한무역협회.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대한무역협회, 각 년호.
- 리철희. 『식량문제해결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북한문제연구소 편. 『북한의 식량사정』.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1992.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원. 『조선전사 22권~34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1982.
- 서동만. “50년대 북한의 곡물 생산량 통계에 관한 연구.” 『월간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1996.2.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1, 2』 인천: 자료원, 1995.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 서울대 출판사, 2001.

- 이삼식. “북한 기아사 수준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Vol. 43, 2000.4.
-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2004.
- _____. “1980년대 북한의 식량생산, 배급, 무역 및 소비: 식량위기의 기원.” 『현대북한연구』. 제7권 1호, 2004.
- _____. 『북한경제개혁과 이행』.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이 석·박청문·송은주. 『국제기구 등의 북한여성 및 어린이 건강상태에 관한 보고서 모음집(1998-2004)』. 통일연구원 내부 편찬 자료. 2005.
- 이영훈.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은 금융경제연구』. 서울: 한국은행, 2004.11.
- 이종운.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제지원 현황과 향후과제.” 『월간 KIEP 세계경제』. 2003년 5월.
- 전홍택. “실물지표에 의한 북한의 GNP 추정.” 『한국개발연구』. 제14권 1호, 1992.
- 정기원·이상은. 『남북한의 인구, 보건 사회보장 비교』. 서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5.
- 정상훈. “북한경제연구: 일련의 방법적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제5 권 2호, 1989년 가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 『2002년 재생산건강조사보고서』. 2004.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각 년호.
- 최신립. 『북한의 무역구조』. 서울: 산업연구원, 1991.
- 통계청. 『북한인구추계결과』. 대전: 통계청, 1999.8.
- _____. 『남북한경제사회상 비교』. 대전: 통계청, 각 년호.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지표집』.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6.
-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서울: 한국은행, 각 년호.
- 히라타 류타로. “북한농업실상과 농업통계의 제문제.” 제4회 북한농업
기반 국제세미나 자료집. 수원: 농업진흥청, 1998.11.
- KOTRA. 『200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KOTRA, 2002.6.
- Bergson, Abram. “Comparative Productivity: The USSR, Eastern
Europe, and the Wes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No. 3, 1987.
- _____. *The National Income of Soviet Russia Since
1928*.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61.
- Brun, E & Hersh, J. *Socialist Kore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7.
- Chang, Gene Hsin and Wen, Guanzhong James. “Communal
Dining and the Chinese Famine of 1958~1961.”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6(1), October 1997.
- Choi, Soo Young,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Ph.D.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1991.
- Choi, Su Hon. Statement by Choi Su Ho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Korea. Presented at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Geneva, 28-29 May 1998.

Chun, Hong Tack. "Economic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Prospects for Reform."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Ed) by Henriksen, T. H and Mo, J.,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7.

Chung, Joseph Sang-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Davis, R. W., Harrison, M. and Wheatcroft, S. G.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1913~1945*.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DPRK.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cond Periodic reports submitted by State Parties under articles of 16 and 17 of the Covenant: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5 May 2002.

_____.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24 June 2002. 통계부록.

_____.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16 July 2002. 통계부록.

_____.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Second periodic reports submitted by State parties under articles of 16 and 17 of the Covenant,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9 April 2002. 통계부록.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31 December 1993)*. 1995.

_____.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0*. 2000.

_____.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2*. November 2002.

DPR Korea FSP Taskforc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Financial Sustainability Plan, November, 2004.

DPRK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ne 2004.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Geneva, 28~29 May 1998. 통계부록.

Eberstadt, Nicholas. "North Korea's Interlocked Economic Crisis." *Asian Survey*. March 1998.

_____. "Our Own Style Statistics': Availability and Reiliability of Official Quantitative Data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per presented at "Advancing Statistics for the Next Millennium"

International Statistical Forum, The ROK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Korean Statistical Society, Taejon, ROK, September 1999.

_____. “Development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the DPRK Economy: Empirical Indications.” Lau, L J and Yoon, C H (Ed). *North Korea in Transition: Development Potential and Social Infrastructur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Eberstadt, N. and Banister, Judith.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Korea Research Book, 1992.

Ehrlich, Eva. “Economic Development, Levels, Proportions, and Structures.” Working Pap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World Economy,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May 1985.

FAO/WFP. *Special Alert No. 277-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1 September 1997.

_____.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2 November 1998.

_____.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2 December 1995.

_____.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 Republic of Korea*. 25 November 1997.
- _____.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9 June 1999.
- _____. *Special Alert No 275-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 June 1997.
- _____.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6 December 1996.
- _____. *Special Alert No 280-Country Korea DPRK*. 6 March 1998.
- _____. *Special Alert No.26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6 September 1996.
- _____.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8 November 1999.
- _____. *Special Report-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ne 1998.
- Gomulka, S. and Schaffer, M. "A new method of long-run growth accounting, with application to the soviet economy 1928-87 and the US economy 1949~78." Papers 14, LSE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1991.
- Goodkind, D. Lorrain.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 Demographic Impacts.”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o. 2, 2001.
- Haggard, S and Norland, M., *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for North Korea. 2005.
- Hunter, Helen-Lousie. *Kim Il Sung’s North Korea*. Westport, Conn: Praeger Publishers. 1999.
- Impac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 Jin, Jang. “Openness and Growth in North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1. No. 1, 2003.
- Joglekar, Gitanjali and Zimbalist, Andrew. “Dollar GDP per Capita in Cub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3. 1989.
- Lautze, Sue. North Korea Food Aid Assessment (May-June 1996).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1996.
- Lee, Hy-Sang. Supply and Demand for Grains in North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ung Chul Choi.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1999.
- Lee, Pong S. “An Estimate of North Korea’s National Income.” *Asian Survey*. 12(6), 1972.
- Lee, Suk. Food Shortages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rwick. 2003.
- _____. “Usability and Reliability of DPRK Statistics: case of

- Grain Statistics in 1946~2000.”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Vol. 15. No. 1, 2006.
- Lim, Gang Taek. North Korean Foreign Trade, 1962~1992.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1995.
- Maddison, Angus.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a Communist Command Economy: An Assessment of the CIA Estimates for the USSR.”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44, No. 3, 1998.
- Marer, Paul. *Dollar GNPs of the USSR and Eastern Europe. Baltimore: A World Bank Public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 Moroney, John R.. “Energy Consumption, Capital and Real Output: A Comparison of Market and Planned Econom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es* 14. 1990.
- Murooka, Tetsuo. “북한의 농산물 무역현황과 전망.” 『북한 농업과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992.12.
- Niwa, Haruki and Fuji Goto. “Estimates of the North Korean Gross Domestic Product Account 1956~1959.” *Asian Economic Journal*. March 1989.
- Noland, M. “Prospects for a North Korean External Economic Opening.” *North Korea After Kim Il Sung* (Ed) by Henriksen, T. H and Mo, J.,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7.
- _____. “Why North Korea Will Muddle Through.”

FOREIGN AFFAIRS. Vol. 76. 1997.

Noland, M., Robinson, S and Liu, L. *The Economics of Korean Unificati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97-5. 1997.

Noland, M., Robinson, S. and Wang, T. *Rigorous Speculation: The Collapse and Revival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99-1. 1999.

Noland, Marcus, Robinson, Sherman and Wang, Tao. "Rigorous Speculation: The Collapse and Revival of North Korean Economy." *World Development*. 28(10), 2000.

Noren, J., and Kurtzweg, L.. "The Soviet Economy Unravels: 1985-91." in *The Former Soviet Union in Transition*,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Washington D.C. 1993.

Robinson, C W., Lee, M K., Hill, K. and Burnham G M. "Mortality in North Korean Migrant Households: a Retrospective Study." *The Lancet*. Vol. 354, 1999.

Smith, Hazel. "Next Steps on Knowledge Sharing: Developing a Strategy for Reviewing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Paper written for KIEP/Stanley Foundation Seoul. Nov. 2007.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

_____.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6.

US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atus of Public Health-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ril 1997." *MMWR*. Vol. 46, No. 24, 1997.

US Congress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ort to The Speak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ovember 1999.

Watts, Jonathan. "A Starving Nation." *The Lancet*. Vol. 353, 22 May 1999.

Wheatcroft, S. G. "More Light on the Scale of Repression and Excess Mortality in the Soviet Union in the 1930s." *Soviet Studies*. Vol. 42, 1990.

World Food Program. Nutrition Survey of the DPRK. November 1998.

2. 통계 데이터베이스

한국 통계청의 북한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

한국무역협회 통계 데이터베이스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Statistical DB.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CD-Rom.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Statistical DB.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al DB.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Statistical DB.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Statistical DB.

World Bank Statistical DB.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흙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영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흙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9,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열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rn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띠또레또지(표지)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진 재생용지 이라이트지(본문)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KINU 연구총서 07-17

북한의 통계: 기용성과 신뢰성

 통일연구원

9 788984 794283 93340
ISBN 978-89-8479-428-3